

20대의 정책미래선호에 관한 질적 연구

노동이민정책·가족정책·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정영훈, 박성원, 민보경, 허종호 저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대의 정책미래선호에 관한 질적 연구

- 노동이민정책·가족정책·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연구진

정영훈 연구위원(연구책임자)

김홍범 연구위원

박성원 연구위원

민보경 부연구위원

이채정 부연구위원

허종호 부연구위원

최하예 연구원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만15세 이상~65세 이하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기저에 있는 미래에 대한 인식(Perception)과 가치를 알아내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었다. 즉, 연령, 직업, 소득, 거주지역, 학력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국민의 선호를 조사하고, 그 기저에 있는 미래 인식과 가치를 규명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분석에서 20대가 가지는 선호의 경향과 체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외교안보정책, 지방분권정책, 기후와 에너지정책에서 20대는 60대와 상당히 유사한 선호를 보인 반면 빅데이터의 활용,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 새로운 사회갈등에 관한 정책 방향, 안락사 허용에 있어서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선호를 보였다.

본 연구는 20대의 위와 같은 선호 경향에 관한 이유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20대의 선호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대론적 논의에 편승하여 안이하게 20대의 선호를 규정 짓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30년 후의 미래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20대이고, 이는 곧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세대 갈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대의 선호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세 개의 정책분야, 즉 노동이민정책, 가족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이론접근법을 사용하여 선호의 형성 배경과 이유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영훈 박사의 총괄 아래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박성원 박사, 김홍범 박사, 민보경 박사, 허종호 박사가, 이채정 박사가 참여하

여 초점집단면접을 함께 기획하고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1차 분석을 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영훈 박사가 보고서의 제1장, 제5장, 제7장을, 허종호 박사가 제3장을, 민보경 박사가 제4장을, 박성원 박사가 제6장, 최하예 연구원이 제2장을 집필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참여 연구진은 초점집단면접의 기획과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손인서 박사(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에게 소중한 자문을 얻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세심한 의견을 통해 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손인서 교수와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초점집단면접의 일정을 관리하고 진행 실무를 맡아준 송지은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노동이민정책, 가족정책, 외교안보정책분야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세부 주장과 정책적 결론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박 진 (朴 進)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8
제2장 연구 방법	13
제1절 연구 방법	15
제2절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17
1. 참여자 선정	17
2. 자료 수집 방법	18
제3절 자료 분석	22
1. 자료 분석 방법	22
2. 분석의 신실성(trustworthiness) 확보	23
제3장 노동이민 정책 FGI 결과	25
제1절 연구 배경	27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0
1. 이주노동의 개념 및 유형	30
2. 이주노동자 인식에 관한 주요 이론	32
3. 이주노동자 및 이주노동 정책 인식 관련 요인 연구	34
제3절 분석 결과	38
1. 세대별 개방 코딩과 범주 도출	38

목 차

2. 축 코딩 및 노동이민 정책 인식에 대한 범주별 기술	52
3. 선택 코딩	56
4. 유형 분석	59
5. 상황 모형	61

제4장 가족정책 FGI 결과 65

제1절 연구 배경	67
-----------------	----

제2절 선행 연구	70
-----------------	----

1. 결혼에 대한 인식	70
2. 동거와 출산에 대한 인식	73
3. 성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75

제3절 분석 결과	77
-----------------	----

1. 연구 참여자	77
2. 주제 분석	78
3. 20대의 선호 체계 분석	85

제5장 외교안보정책 FGI 결과 93

제1절 연구 배경	95
-----------------	----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97
-------------------------	----

1. 선행 연구	97
2. 연구 방법	98

제3절 분석 결과	102
1. 연구 참여자	102
2. 미국에 대한 인식	104
3. 중국에 대한 인식	111
4.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입장	119
5. 진술문에서 나타나는 세대주의의 활용	126
 제6장 미래정책연구를 위한 시사점	 131
제1절 미래정책연구를 위한 질문	133
1. 연구 질문	133
2. 연구 방법론	134
제2절 노동이민·가족·미중 인식의 미래와 정책적 시사점	137
1. 노동이민의 미래와 정책적 시사점	137
2. 가족의 미래와 정책적 시사점	141
3. 미·중에 대한 인식의 미래	144
제3절 시사점 정리	147
 제7장 결론	 149
 참고 문헌	 157
1. 문헌 자료	159
2. 웹 사이트	171

표 목 차

[표 1-1] 연령 집단별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정책미래 선호도	9
[표 1-2] 연령 집단별 가족 정책에 관한 정책미래 선호도	9
[표 1-3] 연령 집단별 노동이민 정책에 관한 정책미래 선호도	10
[표 2-1] 초점집단면담 구성	17
[표 2-2] 초점집단면담 집단의 사회 인구학적 구성	18
[표 2-3] 초점집단면담 연구 참여자 현황 - 노동이민 정책	19
[표 2-4] 초점집단면담 연구 참여자 현황 - 가족 정책	20
[표 2-5] 초점집단면담 연구 참여자 현황 - 외교안보정책	21
[표 3-1]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 통계를 위한 이주자 유형	31
[표 3-2] 20대, 50대 대상 노동이민 정책에 관한 면담 자료의 범주화 목록	39
[표 3-3] 범주별 속성과 차원	56
[표 3-4] 20대, 50대 집단의 이주노동 정책 인식 형성 과정에 대한 유형 분석	60
[표 4-1] 20대의 결혼 연기 사유(1순위)	71
[표 4-2] 20대의 비혼 사유	72
[표 4-3] 20대의 비혼에 관한 견해	73
[표 4-4] 20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74
[표 4-5] 20대의 가족 내 성 역할 분담에 관한 견해	76
[표 4-6]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78
[표 4-7] 가족공동체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80
[표 4-8] 전통적 가족관과 대안적 가족관의 혼재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81
[표 4-9] 전통적 가족제도 유지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82
[표 4-10]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한 회의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83
[표 4-11]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85
[표 4-12] 근거 자료의 범주화 정리: 20대 참여자	86

[표 4-13] 근거 자료의 범주화 정리: 50대 참여자	88
[표 5-1] 연구 참여자 정보	102
[표 5-2] 미국 인식 관련한 개방 코딩 결과	104
[표 5-3] 연구 참여자별 미국 인식의 긍정/부정 정도	106
[표 5-4] 중국 인식 관련한 개방 코딩 결과	111
[표 5-5] 연구 참여자별 중국 인식의 긍정/부정 정도	113
[표 5-6] 정책미래 선호 관련한 개방 코딩 결과	119
[표 5-7] 연구 참여자별 정책미래 선호 정도	121
[표 6-1] 1인 가구 증가율	142

그림 목 차

[그림 2-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22
[그림 3-1] 20대, 50대 집단의 노동이민 정책 인식 형성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53
[그림 3-2] 이주노동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의 상황 모형	61
[그림 4-1] 20대의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동거에 대한 긍정 답변)	75
[그림 4-2] 20대의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남편과 부인의 공평한 분담 답변)	76
[그림 5-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100
[그림 5-2] 분석 틀	101
[그림 5-3] 미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긍정적 인식)	107
[그림 5-4] 미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부정적 인식)	109
[그림 5-5] 중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부정적 인식)	115
[그림 5-6] 중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긍정적 인식)	117
[그림 5-7] 정책미래 선호 관련한 축 코딩 결과 (한미일 동맹 강화 선호)	122
[그림 5-8] 정책미래 선호 관련한 축 코딩 결과 (중재자/균형자 역할 선호)	124
[그림 6-1] 미래 시나리오에서 불확실한 요인을 나타낸 가로, 세로축 변수들	135
[그림 6-2] 노동이민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2개의 축	138
[그림 6-3] 성장하는 직업군과 쇠퇴하는 직업군(WEF, 2018)	141
[그림 6-4] 가족의 미래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142
[그림 6-5] 20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의 미래	145

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이하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함.
 -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분석에서 응답자의 연령대별 특징 중에서 20대의 선호는 그 경향과 체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나타난 20대의 선호 특징은 외교안보정책, 지방분권 정책, 에너지 정책, 이민정책, 환경 정책, 복지 정책 등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빅 데이터의 활용,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가족 정책) 방향, 새로운 사회 갈등에 관한 정책 방향, 안락사 허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보임.
-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가 이러한 선호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하여 규명하고, 집중 인터뷰 자료를 통해 분석한 이민, 가족, 외교안보 분야의 결과들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각 분야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미래정책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본 연구가 20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30년 후의 미래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세대가 20대이기 때문임.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0대가 선호 경향을 드러내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들 정책 분야에 대해 FGI를 이용하여 분석함.

- 선정 기준은 1차적으로 모비율 차이 검정에 따라서 ‘20대’라는 연령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임.
- 17개 정책 분야 중에서 20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외교안보, 가족제도, 생명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이지만, ‘생명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의 정책 분야’는 본 연구가 20대에 주목한 이유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이들 두 정책 분야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이민 정책을 추가. 노동이민 정책은 17개 정책 분야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엇비슷한 분야이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노동이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0대에서 54.3%로 가장 높았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20대에 더하여 50대도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정책에 대한 선호의 세대별 차이는 단순히 성별, 직업, 계층적 구성의 차이를 넘어 세대의 독특한 경험이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전상진, 2004)에서 비교 집단으로서 이들 세 분야에서의 50대의 선호에 관한 이유를 분석하고 20대와 비교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연구 방법

□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근거이론에 의한 질적 연구 방법을 채용
 - 근거이론 접근법은 체계적으로 얻어진 면담 자료에 근거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추출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한 접근은 특정 집단에 있어 현상을 이루고 있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제적 이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함.

-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 등의 한계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함.

□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 참여자 선정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담 대상자 집단을 3개의 주제(이민, 가족제도, 외교안보)별로 각 3개의 연령과 성별 그룹(20대 남성, 20대 여성, 50대 혼성)으로 설계함.
- 20대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대를 남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50대는 비교를 위한 대조군으로 설정. 각 집단은 6-7명으로 설계함.

초점집단면담 구성

주제	집단 구성
이민정책	3 그룹(20대 남성 / 20대 여성 / 50대 혼성)
가족제도 다양성 강화	3 그룹(20대 남성 / 20대 여성 / 50대 혼성)
외교정책	3 그룹(20대 남성 / 20대 여성 / 50대 혼성)

- 연구 참여자는 기실시한 국민선호도 조사 참여 패널 중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및 50대 남녀 가운데 선정하여 연구의 유의한 연속성을 확보. 연령, 직업, 이념 성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균등하게 모집. 정책 주제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을 지닌 참여자를 가급적 동수로 배치함.

초점집단면담 집단의 사회 인구학적 구성

구분	내용
연령	집단당 20대 초반 3명, 후반 3명 / 50대 초반 3명, 후반 3명
직업	최대한 고르게 분포(예: 사무직 1~2명, 생산직 1~2명, 자영업 1~2명, 학생 1~2명, 주부 1~2명 등)
이념 성향	최대한 고르게 분포(예: 보수 2~3명, 중도 1~2명, 진보 2~3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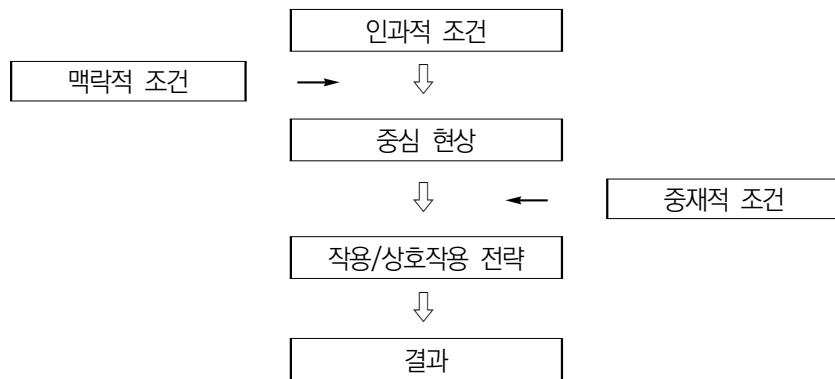
• 자료 수집 방법

-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법을 사용하여 2019년 6~7월 사이에 진행. 인터뷰는 3개 주제별로 3집단씩 총 9회 진행. 각 인터뷰당 평균 6명의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였고 연구진 가운데 2명이 중재자로 면담을 조율. 면담은 평균 2시간이 소요됨.
- 연구 참여자 섭외 시 참여 전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외에는 면담 내용이 누출되지 않을 것과 면담 중 어느 때라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함. 면담 시작 전 다시 한 번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며, 연구 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함.
-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면담 후 전사. 녹음파일과 전사된 문서 파일은 공통된 파일명을 사용하여 보관하되, 모든 연구 자료에서 대상자의 이름은 사전 약속된 ID로 일관되게 표기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면담 참여자가 이야기한 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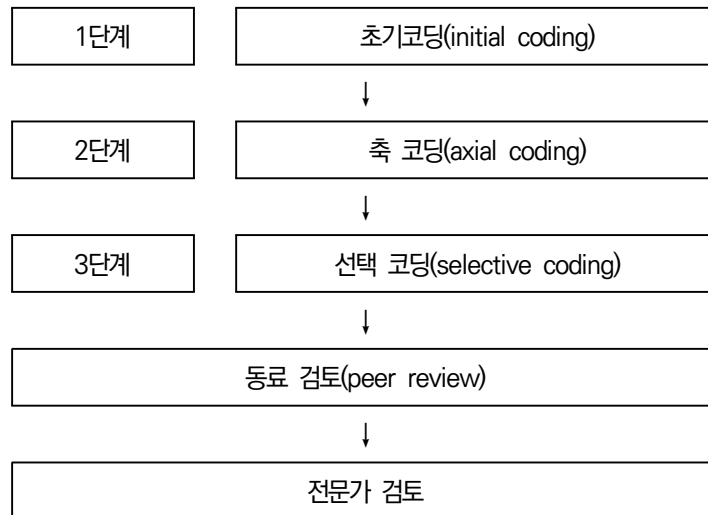
□ 자료 분석

• 분석 방법

- 근거이론 방법의 분석은 크게 5개의 단계를 거쳐 수행하게 되는데,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이론적 선택(theoretical sampling), 유형 분석, 상황 모델 도출임.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노동이민, 가족제도, 외교안보의 내용적 특성과 코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담당 집필자가 적절하게 방법을 선택함.

• 분석의 신실성(trustworthiness) 확보

-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구자 간 협의 즉, 동료 검토를 거쳐 주제를 도출하고 또한 음성 파일의 녹취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녹취 과정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함.

- 연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연구자의 관점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연구진의 분석 모임을 통해 자료 분석의 확인 가능성을 유지함.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론의 전문가인 사회학 교수 1명에게 연구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타당도를 확보함.

3 노동이민 정책 FGI 결과

□ 세대별 개방 코딩과 범주 도출

- 20대를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51개의 코드와 10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7개의 상위 범주로 개념화했고, 50대를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개의 코드와 12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7개의 상위 범주로 개념화함.
- 20대의 주요 상위 범주는 ‘사회적 접촉’, ‘상황 인식’, ‘위기의식’, ‘자기 중심적 판단’, ‘변화의 수용’, ‘정책 인식’, ‘정책 요구’로 나타남. 50대의 주요 상위 범주는 ‘사회적 접촉’, ‘상황 인식’, ‘위기의식’, ‘자기 회귀적 판단’, ‘변화의 수용’, ‘정책 인식’, ‘정책 요구’로 20대와 유사함.

□ 축 코딩 및 노동이민 정책 인식에 대한 범주별 기술

-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인과적 조건은 ‘사회적 접촉’
 - 20대는 주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관계 위주이고 50대는 수혜자 입장에서 관계를 맺음.
- 맥락적 조건으로서 20대와 50대 집단 모두 경제적 불황이라는 특수 상황을 인식함.
- 주요 현상은 ‘이주노동자를 일자리 경쟁자 및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
 - 20대와 50대 모두 이주노동자들을 자신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 또는 적

어도 자녀 세대의 경쟁 상대로서 인식함.

- 이주노동자들의 강력 범죄 사례 등으로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임.
-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중재적 조건으로서 20대는 다문화가 가져오는 유익에 집중하고 50대는 세계화 수용과 근로자 부족에 집중함.
- 20대의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전략은 타자화라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이며, 50대의 경우, 이와 상반되게 자기 회귀적인 자기 성찰을 하고 있음.
- 전략에 따른 결과는 20대와 50대가 동일하게 노동이민 정책을 통해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함.
 - 20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호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늘릴 수 있는 양육 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함.
 - 20대와 50대 모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선별 정책과 관리 정책을 요구함.

□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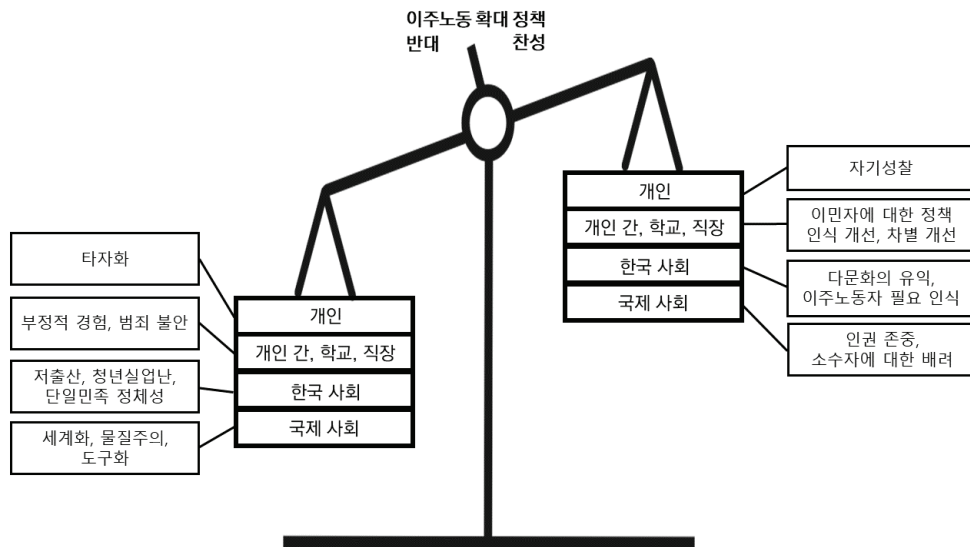
- 20대 남자는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낮은 수용성을 보임.
 -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직접적인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앞두거나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겪는 손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함.
 - 타자화를 통해 자신들이 주체가 되고 이주노동자들은 객체로서 동화의 대상화.
- 20대 여자 또한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낮은 수용성을 보임.
 -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

- 50대 남녀는 성별과 관계없이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중간 수준의 수용성을 보임.
- 50대는 이주노동은 불가피하고 당위적인 선택이라고 받아들이며 이주노동 문제를 야기하는 한국인들의 잘못과 편견도 인지함.

□ 상황 모형

- 이주노동에 관련된 다양한 상황적 조건들이 다층적 차원 간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이주노동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의 상황 모형

4 가족 정책 FGI 결과

□ 주제 분석

● 가족공동체의 특징

- 응답자들은 가족은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느낌.
- 가족은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그 저 같은 지붕 아래서 생활하는 동거 또는 생활공동체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함.

● 전통적 가족관과 대안적 가족관

- 전통적 가족관과 대안적 가족관이 혼재함.
- 대안 가족은 향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전통적 가족제도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 미혼의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는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결혼을 통한 가족을 형성할 확신은 갖지 못함.
- 미혼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쉽게 결혼을 할거라는 예측을 하지 못함.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선뜻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차별적인 사회 문화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낌.
- 50대 부모들 세대 역시 자녀들이 결혼을 통해 전통적 가족 구성을 하는데 있어 회의적임.

●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

- 다양한 가족 유형이 나타남에 따라 확장된 가족의 범주가 가족제도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함.
- 가족제도로 수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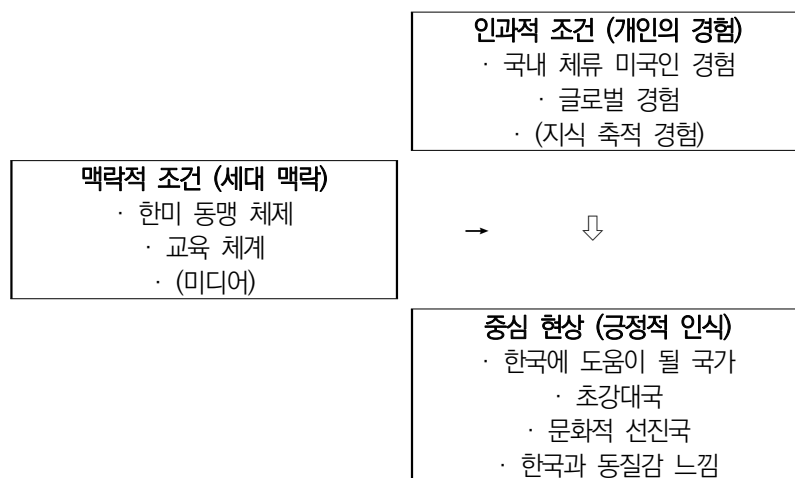
□ 20대와 50대의 인식과 선호 체계

- 20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통한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해 회의감을 느낌.
 - 20대 남성은 경제적 부담과 가족 부양자로서의 책임이 큰 이유인 반면, 20대 여성은 출산과 양육 부담, 성차별 사회 문화, 경력 단절 등의 이유가 큼.
-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로 20대들은 개인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든 반면, 50대들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바라봄.
- 가족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20대들은 가족제도의 확대(1인 가구, 성 소수자, 미혼 부모 등 가족제도 편입)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반면, 50대들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정책 수립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기존의 전통적 가족제도 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인식함.

5 외교안보정책 FGI 결과

□ 미국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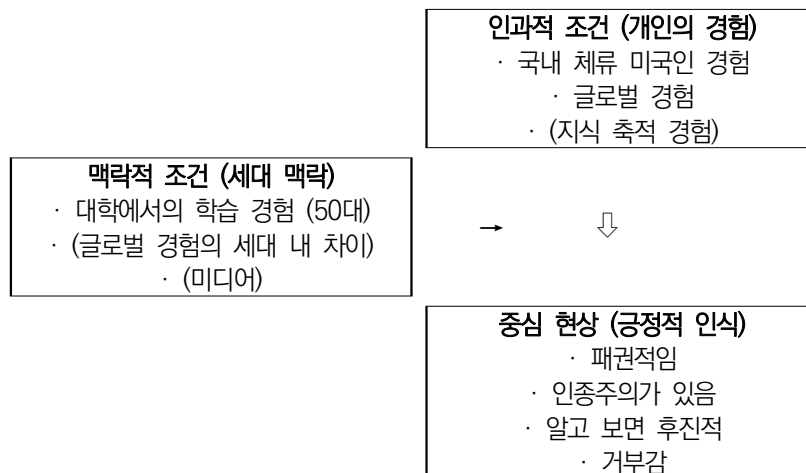
- 긍정적 인식



미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긍정적 인식)

- 완벽히 구술하지 않은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함.
- 미국에 대한 직접 경험 외에 미국에 관해 습득한 지식이 호불호를 조건 짓는 맥락적 원인이 됨.
- 상대적으로 면담 결과 나타난 긍정적 인식과 관련한 맥락적 조건들은 특정 세대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기보다는 세대를 건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많음.
- 개인적 경험을 해석하는 맥락적 조건, 혹은 개인적 경험이라는 인과적 조건 그 자체로 작용하는 중요한 범주로 미디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부정적 인식



미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부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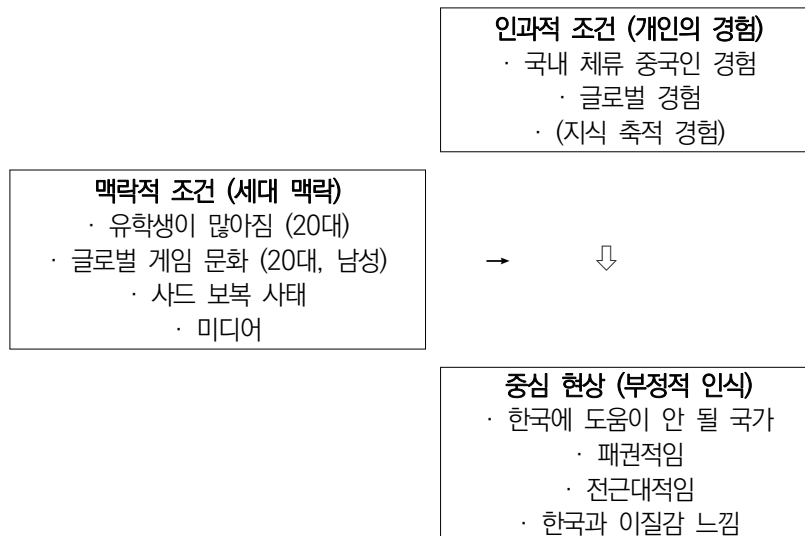
-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함.
- 미국은 '좋은 나라'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오히려 실제 경험을 통해 깨짐.
- 미디어나 교육/지식 체계, 즉 전체적인 담론 과정의 영향을 받음.

□ 중국에 대한 인식

● 부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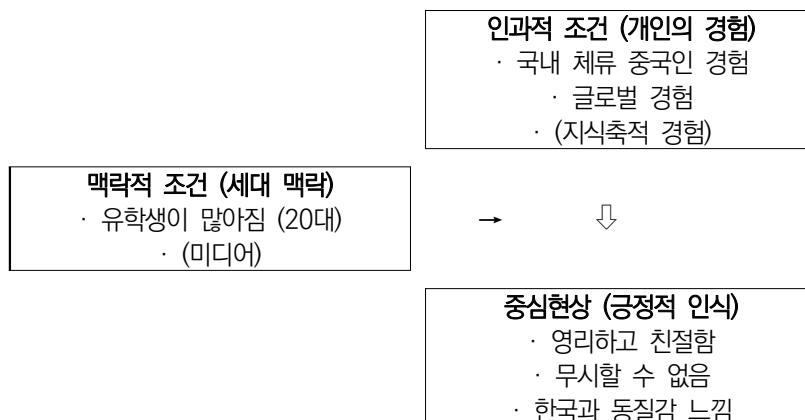
-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함.

-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직접 경험이 구체적이고 풍부함.
-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미디어가 중요함.



중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부정적 인식)

• 긍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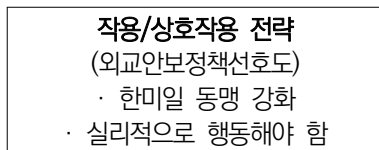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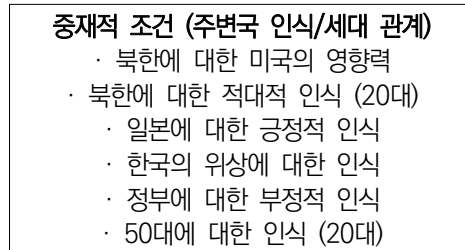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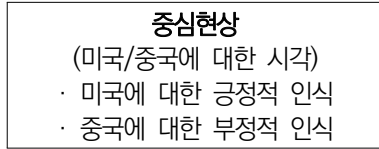


중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긍정적 인식)

-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주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선입견이 깨지면서 형성함.

□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입장

• 한미일 동맹 강화 선호.



정책미래 선호 관련한 축 코딩 결과 (한미일 동맹 강화 선호)

-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을 우호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인식함.
- 정책미래 선호와 밀접히 연관된 다른 중재적 조건으로 국내 정치 상황과 연관하여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세대 관계에 대한 인식이 결합함.

• 중재자/균형자 역할 선호

중심현상
(미국/중국에 대한 시각)
·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중재적 조건 (주변국 인식/세대 관계)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인식 (50대)
·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인식
·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인식
·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 (50대)
· 20대에 대한 인식 (50대)

작용/상호작용 전략
(외교안보정책선호도)
· 중재자/균형자 역할
· 실리적으로 행동해야 함

정책미래 선호 관련한 축 코딩 결과 (중재자/균형자 역할 선호)

- 주변국 인식 중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북한에 대한 고려가 주요한 중재적 조건으로 작동함.
- 국내의 정치 상황 및 세대 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주로 50대 집단에서 현 정부가 외교정책을 잘 펴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함.

6 미래정책연구를 위한 시사점

- 노동이민의 확대와 관련한 미래 예측에서는 단순히 노동이민을 더 받아들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이민의 확대나 규제나 하는 문제는 도시화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임. 도시 정책에는 환경, 교육, 경제, 교통, 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함.

- 미래의 가족을 예상해보면 이런 변수들 외에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느냐, 공동체의 연대를 중시하느냐 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도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강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서 중요한 변수는 힘과 이익 그리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세계를 누가 리드할 것인지는 20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20대의 대중국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질서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되면 이런 부정적 인식은 변화할 수 있음.

7 결론

- 노동이민 정책에 관해서 보면 20대와 50대 모두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강력 범죄자 및 일자리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 정도 일치하고 있지만, 선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이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서 20대는 타자화를, 50대는 자기 성찰의 전략을 취했다는 점임.
- 20대와 50대 모두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이고 외교안보정책은 실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호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임.
 - 20대와 50대의 선호 차이의 이유를 검토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인과적 조건뿐만 아니라 맥락적 조건임.
 - 이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시각, 즉 미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중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곧바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로 일대일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는 두 가지 종류의 중재적 조건이 개입. 첫 번째는 미국, 중국과는 별도로 북한,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에 대해서

또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책미래 선호도가 조정됨. 두 번째는 여기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결합하여 다시 한번 세대 문제가 개입함. 예컨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50대의 경우,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60대나 20대가 생각하는 외교안보정책 선호에 대해 조금 더 강하게 반감을 표하지만 반대로 20대 집단에서는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정책을 자신들 세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뒷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단정함.

- 가족 정책에서 20대가 ‘생활공동체 중심의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 중시’해야 한다는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결혼과 출산을 통한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50대 응답자의 56%도 역시 ‘생활공동체 중심의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함.

- 20대와 50대는 가족 정책의 방향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함. 20대는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통한 가족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기존 가족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정책보다는 1인 가족, 동거 가족 등을 기존 가족제도로 편입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함.
- 이에 비하여 50대는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가족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차이는 결국 50대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각 분야의 미래 전망 하에서 가장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 분야는 노동이민 정책임.

- 노동이민자에 대한 20대의 타자화 전략은 이들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기반하고 있어서 쉽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임.
-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한 양·질의 조절 정책과 함께 내국인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 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인권적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국인을 상대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적 포용성의 제고는 중국인과 중국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일 것임.
 - 이는 외교안보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취하여야 할 전략적 입장을 선택할 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질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당분간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거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전망하에서 20대가 지금과 같이 중국인과 중국 문화를 극단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부정적인 현상임.
- 가족 정책은 위의 두 정책 분야보다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 분야이지만, 가족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전통적인 가족관과 새로운 가족관은 혼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형태에 중립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차별 없이 가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만 1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하까지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¹⁾ 미래 예측에 기반한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있어서 국민의 의사, 즉 선호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국민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기저에 있는 미래에 대한 인식(perception)과 가치를 알아내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었다. 즉, 연령, 직업, 소득, 거주 지역, 학력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국민의 선호를 조사하고, 그 기저에 있는 미래 인식과 가치를 규명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길지만 위의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 조사는 기후, 에너지와 자원, 식량과 수자원, 국제정치, 북한, 정보 통신, 생명, 우주, 경제, 거주환경, 인구와 사회, 정치와 행정, 사람(human, 인간관계)의 13개 분야에서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다만 과학기술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의 분야는 정보 통신, 생명, 우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정책 분야는 17개가 되었다. 17개는 이민, 환경, 외교안보, 부동산, 복지, 지방분권, 가족 제도, 빅 데이터 활용, 정치 갈등, 기술 발전과 고용, 인공지능 의사 결정에 대한 신뢰, 생활 인프라, 기후와 에너지, 생명 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 안락사, 식량자원, 우주개발이다. 위 조사에서는 17개 정책 분야에서 각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를 묻기 위해서 국민에게 30년 후의 17개 분야의 미래상 또는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하였다. 각자의 상

1) 이 조사에서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전국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표본 설계는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성/연령 등 전국 인구 현황을 반영한 할당 표집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사 기관(주마크로밀엠브레인)의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 서베이 방식을 활용하였다. 신뢰 수준은 95%에서 표준오차 $\pm 2.53\%$ 이다.

상에 의지한 채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연구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영향 환경 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김유빈 외, 2018)』에서 제시된 13개의 분야의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2050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상을 간략하게 재구성하여 국민에게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미래상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선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 두 개의 상반된 정책 선택지를 장단점, 부작용과 함께 제시하고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를 물었다.

지금부터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민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뒤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물론 현재에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노동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노동이민의 증가로 인하여 인종적·문화적·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BQ14.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따른 외국인 증가는 한국 사회에 인종, 문화, 종교 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 ② 정년을 연장하고 출산률을 높이거나 기술발전 등을 통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민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이유는 회피를 위한 전략이든 적응을 위한 전략이든 그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어느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들 중에는 종종 상반되는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서로 상반되는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것처럼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좀처럼 어떠한 정책이 맞는 것인지에 관한 의견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논쟁적인 사안에 있어서 상반되는 정책의 선택지가 있을 때 공론 조사와 같이 숙의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반되는 정책의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위 조사에서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상반되는 정책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을 넘어서 어떤 정책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비용 부담이 수반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 각각의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어느 정책을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이유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선택의 근거에 있는 미래 인식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의 결과 및 그 결과 분석으로부터 몇 가지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은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인 『국민선호미래연구(박성원 외, 2018)』에 자세히 실려있다.

그런데 위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분석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의 연령대별 특징 중에서 20대의 선호는 그 경향과 체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외교안보정책, 지방분권 정책,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서 20대는 60대와 상당히 유사한 선호를 보였다. 즉, 이들 두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보수적인 선호를 보이는 정책은 이외에도 이민정책, 환경 정책, 복지 정책 등이다. 하지만, 빅 데이터의 활용,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 새로운 사회 갈등에 관한 정책 방향, 안락사 허용에 있어서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선호를 보였다. 나아가 전체 연령대 평균에서 선호도가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정책인 이민정책, 환경정책에서 20대는 40대·50대·60대와 명확히 대립하는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의 대립 구도는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가족 정책) 방향에서도 발견된다.

위의 “국민선호미래연구”에서는 20대가 이러한 선호 체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은 하지 못하였고, 다만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다. 첫째로 20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새로운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외교안보정책에서 20대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개인 또는 개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가족 정책) 방향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선호를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측을 넘어서 20대의 이러한 선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20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대론적 논의에 편승하여 안이하게 20대의 선호를 규정짓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30년 후의 미래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20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20대의 이와 같은 선호 체계는 앞으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세대 갈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따라서 20대가 이러한 선호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장기적인 미래 전략과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임은 분명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20대의 위와 같은 선호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제1차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정책미래에 대한 선호 조사의 후속 연구라는 점에서 20대의 선호 형성 근거와 과정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본 연구의 목적에 추가하고자 한다. 즉, 집중 면담 자료를 통해 분석한 이민, 가족, 외교안보 분야의 결과들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각 분야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미래정책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물론 소규모 집단에 대해서 진행한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이민의 미래나 가족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족 정책만 해도 공보육 서비스, 양육 수당, 부모 휴가 급여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가족의 가치, 사회의 최소 구성원 등 철학, 윤리, 전통의 문제까지 얹혀있다. 가족의 미래와 정책이라는 주제만 해도 두툽한 보고서 몇 권은 나와야 할 정도로 범위가 넓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토는 집중 면담 자료를 활용해 세 분야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가 무엇인지 도출하고, 이 불확실성을 미

래로 투사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미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지 가설적 차원에서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정책 분야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데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나타난 20대의 선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외교안보정책, 지방분권 정책, 에너지 정책, 이민정책, 환경정책, 복지정책 등에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빅 데이터의 활용,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가족 정책) 방향, 새로운 사회 갈등에 관한 정책 방향, 안락사 허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20대가 이와 같은 선호 경향을 드러내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 정책 분야 모두에 대해서 FGI를 이용한 분석을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고,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들 분야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야를 선정하여 조사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1차적으로 모비율 차이 검정에 따라서 ‘20대’라는 연령에 의한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이다. 17개 정책 분야 중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 정책 분야는 식량자원(10대, 20대, 40대), 외교안보(20대), 가족제도(20대), 환경(10대, 20대), 생명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20대), 우주개발(10대), 복지(60대), 기술발전과 고용(10대, 60대), 정치 갈등(10대)인데, 이 중 20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외교안보, 가족제도, 생명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이다. 그런데 ‘생명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의 정책 분야’²⁾는 본 연구가 20대에 주목한 이유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외교안보의 20대 선호를 보면 아래 [표 1-1]과 같이 ‘외교안보 면에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대 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54.3%로 나왔다. 이는 전체

2) “생명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에 관한 설문은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기술의 과도한 활용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vs.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기술은 수명 연장, 중강 인간의 실현 등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므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와의 사이의 선호를 묻는 것인데, 전자가 67.9%, 후자가 32.1%이고, 20대의 경우에는 전자가 60.4%, 후자가 39.6%으로 연령대별로 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평균인 46.3%에 비해 8.0%p 높을 뿐만 아니라 60대보다도 높다.

[표 1-1] 연령 집단별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정책미래 선호도

외교안보정책 (%)		사례 수	경제에서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안보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재자/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전체		(1500)	46.3	53.7
연령별	15세~18세	(87)	42.2	57.8
	19세~29세	(295)	54.3	45.7
	30대	(285)	40.9	59.1
	40대	(340)	43.1	56.9
	50대	(336)	44.4	55.6
	60세~65세	(157)	53.9	46.1

[표 1-2] 연령 집단별 가족 정책에 관한 정책미래 선호도

가족 제도 (%)		사례 수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해서 성립하는 현재의 가족형태(애정·신뢰·부양의 공동체)만이 가족으로 인정	공동체를 구성하는 관계가 가족과 유사하다면,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도 가족 인정
전체		(1500)	40.1	59.9
연령별	15세~18세	(87)	31.8	68.2
	19세~29세	(295)	32.1	67.9
	30대	(285)	39.8	60.2
	40대	(340)	38.4	61.6
	50대	(336)	43.9	56.1
	60세~65세	(157)	56.2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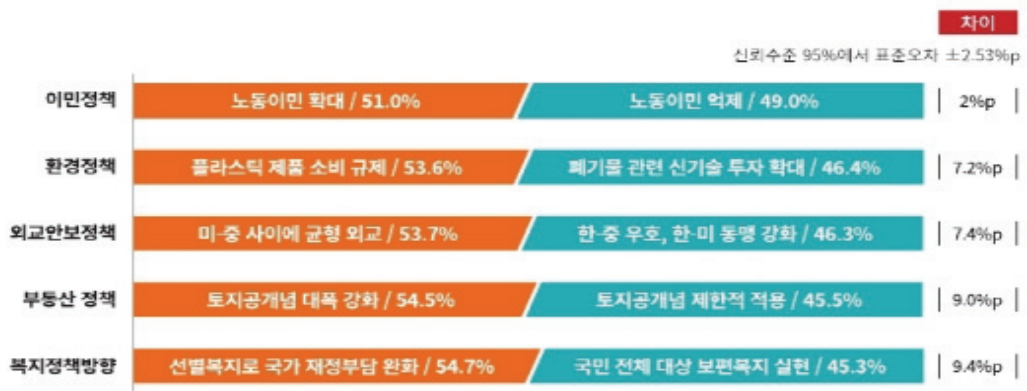
미래의 가족 정책에 관한 선호는 위 [표 1-2]와 같이 ‘생활공동체 중심의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0대 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67.9%로 나왔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59.9%에 비해 8.0%p 높다.

이들 두 정책 분야 외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이민 정책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노동이민 정책은 17개 정책 분야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엇비슷한 분야이면서도³⁾ 아래 [표 1-3]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노동이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0대에서 54.3%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표 1-3] 연령집단별 노동이민 정책에 관한 정책미래 선호도

이민 정책 (%)		사례 수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따른 외국인 증가는 사회 문제를 야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는 한계, 이민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문화적·사회적 통합 정책 마련
전체		(1500)	49.0	51.0
연령별	15세~18세	(87)	44.9	55.1
	19세~29세	(295)	54.3	45.7
	30대	(285)	52.5	47.5
	40대	(340)	48.4	51.6
	50대	(336)	43.7	56.3
	60세~65세	(157)	47.2	52.8

3) 두 정책 간에 선호도의 차이가 10% 이내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세 개의 정책 분야에 한정하여 20대의 선호 이유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에 20대에 더하여 50대도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정책에 대한 선호의 세대별 차이는 단순히 성별, 직업, 계층적 구성의 차이를 넘어 세대의 독특한 경험이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전상진, 2004)에서 비교 집단으로서 이들 세 분야에서의 50대의 선호에 관한 이유를 분석하고 20대와 비교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세 정책 분야에서 20대와 가장 대비되는 선호를 보이는 연령대는 각 정책 분야별로 다르지만, 세대별 차이라는 관점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서 60대보다 50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50대를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제2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방법

제2절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제3절 자료 분석

제 1절

연구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가. 질적 연구 방법론 : 근거이론(grounded theory approach)

상징적 상호주의(interactive symbolism)에 기반을 둔 근거이론 접근법은 체계적으로 얻어진 면담 자료에 근거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추출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Glaser & Strauss, 1967: 25-27)이다. 근거이론은 사람들의 행위 또는 사회현상이 그들의 사회적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적 의미가 생성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탐구하는 연구 방식이기도 하다. 근거이론에서 ‘근거(ground)’라는 단어는 이론의 근거 즉 자료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개인 혹은 사회의 경험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천, 2013).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이론 정립으로 근거이론 방법에서의 연구 문제는 “특정 상황이나 어떤 조건하에서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사회 심리적 과정은 무엇인가?”이다(최지영, 2012).

근거이론이 다른 질적 연구의 귀납적 모델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description)과 추상화(abstraction)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귀납적 모델처럼 사실을 발견하고 섬세한 묘사나 기술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근거이론에서는 현상이 재현되면서 나타나는 정보들을 개념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실질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귀납적인 방법을 이용하되 분석 과정을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자료를 지속적 비교하고 이론적인 범주와도 끊임없는 비교 방법(constant comparison)을 수행한다. 이렇게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한 접근은 특정 집단에 있어 현상을 이루고 있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제적 이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나.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한다(신경림, 2004: 9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 등의 한계로 초점집단 면담을 수행했다.

초점집단면담은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집단(group, 3~5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interview)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이다(Patton, 1990). 면담 참여자와 면담 진행자가 1:1로 이루어지는 개별 면담(individual in-depth interview)과 달리, 초점집단면담을 이용한 면담 방법은 참여자 개개인이 집단 안에서 자신의 관점, 인식, 경험 등을 자유로이 공유하면서 토론하도록 허용하여 면담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면담 내용을 효율적이면서도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abiee, 2004). 그러나 집단 내에서 개인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실제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거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소수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 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만든다.

제2절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담 대상자 집단을 3개의 주제(이민, 가족제도, 외교안보)별로 각 3개의 연령별 성별 그룹(20대 남성, 20대 여성, 50대 혼성)으로 설계하였다. 20대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대를 남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50대는 비교를 위한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각 그룹은 6~7명으로 설계하였다.

[표 2-1] 초점집단면담 구성

주제	집단 구성
이민정책	3그룹(20대 남성 / 20대 여성 / 50대 혼성)
가족제도 다양성 강화	3그룹(20대 남성 / 20대 여성 / 50대 혼성)
외교정책	3그룹(20대 남성 / 20대 여성 / 50대 혼성)

연구 참여자는 기실시한 국민선호도 조사 참여 패널 중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및 50대 남녀 가운데 선정하여 연구의 유의한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발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초점집단면담의 특성상 대표성 있는 표본 구성은 불가능하지만 연구 참여자는 연령, 직업, 이념 성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균등하게 모집하였다[표 2-2]. 이와 함께, 정책 주제에 대해 대립하는 의견을 지닌 참여자를 가급적 동수로 배치하였다[표 2-3][표 2-5]. 연구진은 국민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3,000명의 패널 가운데 참여 기준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면담 참여 의향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표 2-2] 초점집단면담 집단의 사회 인구학적 구성

구분	내용
연령	집단당 20대 초반 3명, 후반 3명 / 50대 초반 3명, 후반 3명
직업	최대한 고르게 분포(예: 사무직 1~2명, 생산직 1~2명, 자영업 1~2명, 학생 1~2명, 주부 1~2명 등)
이념 성향	최대한 고르게 분포(예: 보수 2~3명, 중도 1~2명, 진보 2~3명 등)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법을 사용한다. 반구조화 면담은 발견 지향적 접근에 유용한 방법으로서 면담 참여자에게 공통된 사전 면담 지침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실제 면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면담 진행자가 해당 면담을 통해 새로운 통찰이 떠올랐을 때 새로운 질문을 허용하는 방법이다(신경림, 2004: 130). 사전에 계획되었던 질문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질문과 대답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과 구분된다. 반구조화 면담이 갖는 장점은 면담 상황이나 흐름과 면담 참여자들의 반응성에 따라 면담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며 면담 참여자에 따라 다양한 면담 내용을 끌어내기에 적합하다(김영천, 2013). 전사 작업은 면담을 통해 모은 음성 파일을 연구 자료의 형태인 문자(text)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 자료의 생생한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면담 참여자의 개인 인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통된 전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사 작업을 통해 음성 파일이 활자화된 형태인 전사본(transcripts)을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초점집단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19년 6~7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면담에 앞서 모든 연구진은 질적 연구 방법론 전반을 포함하여 면담 진행(중재자, moderator)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 면담 질문지는 주제 및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별 질문지를 별도로 작성하되, 집단별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질문과 다른 질문을 적절히 배합하였다. 또한 폐쇄형(close-ended)과 개방형(open-ended) 질문을 혼합하여 집단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테마를 포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질문지는 분야별로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한 후 동료

검토(peer review)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질문의 타당도를 높였다.

연구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초점집단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3개 주제별로 3그룹씩 총 9회 진행되었다. 각 면담당 평균 6명의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였고 연구진 가운데 2명이 중재자로 면담을 조율하였다. 면담은 평균 2시간이 소요되었다. 중재자는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수집하고, 다른 한 편으로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원활한 토론을 유도하여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교환을 수집하였다.

면담자 섭외 시 참여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외에는 면담 내용이 누출되지 않을 것과 면담 중 어느 때라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였다. 면담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으며, 연구 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면담 후 전사되었다. 녹음 파일과 전사한 문서 파일은 공통된 파일명을 사용하여 보관하되, 모든 연구 자료에서 대상자의 이름은 사전 약속된 ID로 일관되게 표기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면담 참여자가 이야기한 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2-3] 초점집단면담 연구 참여자 현황 - 노동이민 정책

구분 / 일시	구분	나이(성별)	직업구분	정책 태도	정치이념성향
20대 집단 (남성) 2019. 6. 20	M1	22	대학 재학	찬성	중도
	M2	29	기술직 프리랜서	찬성	진보
	M3	29	사무직	반대	중도
	M4	21	대학 재학	반대	보수
	M5	26	대학 재학	반대	진보
	M6	24	대학 재학	반대	보수
20대 집단 (여성) 2019. 6. 24	F1	24	교사	반대	진보
	F2	29	기계 무역 사무직	반대	보수
	F3	27	사무직	반대	보수
	F4	29	IT 관련 사무직	반대	진보
	F5	27	사무직	찬성	진보
	F6	22	대학 재학	찬성	중도

구분 / 일시	구분	나이(성별)	직업구분	정책 태도	정치이념성향
50대 집단 2019. 7. 2	S1	56(여)	전업주부	찬성	중도
	S2	56(남)	건설업	찬성	보수
	S3	51(남)	사무직	찬성	진보
	S4	53(남)	관리직	찬성	진보
	S5	55(여)	전업주부	반대	중도
	S6	51(여)	학원 강사	반대	보수

[표 2-4] 초점집단면담 연구 참여자 현황 - 가족 정책

구분/일시	구분	나이(성별)	직업구분	정책태도	정치이념성향
20대 집단 (남성) 2019. 6. 26	M1	25	대학 재학	찬성	중도
	M2	23	무직	찬성	중도
	M3	26	대학 재학	찬성	진보
	M4	23	대학 재학	반대	보수
	M5	29	대학 재학	반대	보수
	M6	28	대학원 재학	반대	중도
20대 집단 (여성) 2019. 6. 27	F1	29	자영업	찬성	진보
	F2	22	대학 재학	찬성	진보
	F3	22	대학 재학	찬성	중도
	F4	25	사무직	찬성	진보
	F5	26	자영업	반대	중도
	F6	27	사무직	반대	보수
50대 집단 2019. 7. 3	S1	57(남)	전문 기술직	찬성	보수
	S2	54(남)	자영업	찬성	진보
	S3	50(남)	사무직	찬성	중도
	S4	51(여)	전업주부	반대	진보
	S5	54(여)	전업주부	반대	진보
	S6	56(여)	사무직	반대	진보
	S7	50(남)	사무직	반대	보수

[표 2-5] 초점집단면담 연구 참여자 현황 - 외교안보정책

구분/일시	구분	나이 (성별)	직업구분	정책태도	30년 후 북한에 대한 변화	정치이념 성향
20대 집단 (남성) 2019. 7. 1	M1	26	취업 준비생	한미일 동맹 강화	부정적 변화	보수
	M2	28	영업직	한미일 동맹 강화	긍정적 변화	진보
	M3	28	사무직	한미일 동맹 강화	긍정적 변화	진보
	M4	28	사무직	한미일 동맹 강화	부정적 변화	보수
	M5	24	대학 재학	중재자/균형자 역할	긍정적 변화	중도
	M6	28	취업준비생	중재자/균형자 역할	긍정적 변화	중도
20대 집단 (여성) 2019. 7. 2	F1	28	사무직	한미일 동맹 강화	긍정적 변화	진보
	F2	25	대학 재학	한미일 동맹 강화	부정적 변화	보수
	F3	23	아르바이트	한미일 동맹 강화	부정적 변화	보수
	F4	25	대학 재학	한미일 동맹 강화	부정적 변화	진보
	F5	24	취업 준비생	한미일 동맹 강화	긍정적 변화	진보
	F6	21	대학 재학	중재자/균형자 역할	부정적 변화	중도
	F7	24	대학 재학	중재자/균형자 역할	긍정적 변화	중도
50대 집단 2019. 7. 4	S1	55(남)	사무직	한미일 동맹 강화	긍정적 변화	보수
	S2	56(남)	사무직	한미일 동맹 강화	긍정적 변화	중도
	S3	50(여)	전업주부	중재자/균형자 역할	긍정적 변화	보수
	S4	55(남)	사무직	중재자/균형자 역할	긍정적 변화	진보
	S5	52(여)	전업주부	중재자/균형자 역할	부정적 변화	보수
	S6	57(남)	관리직	중재자/균형자 역할	긍정적 변화	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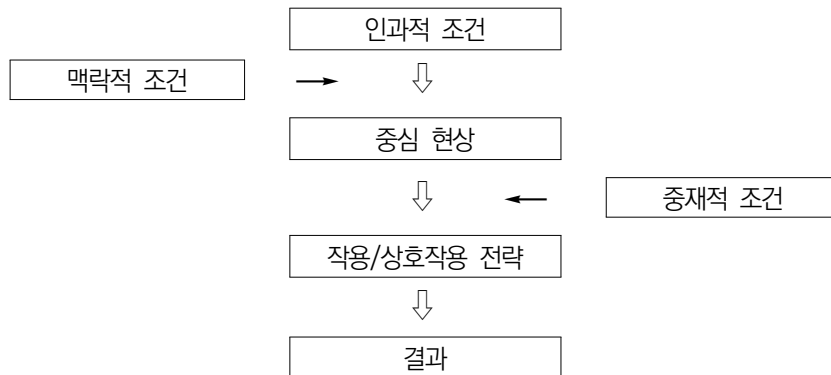
제3절

자료 분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자료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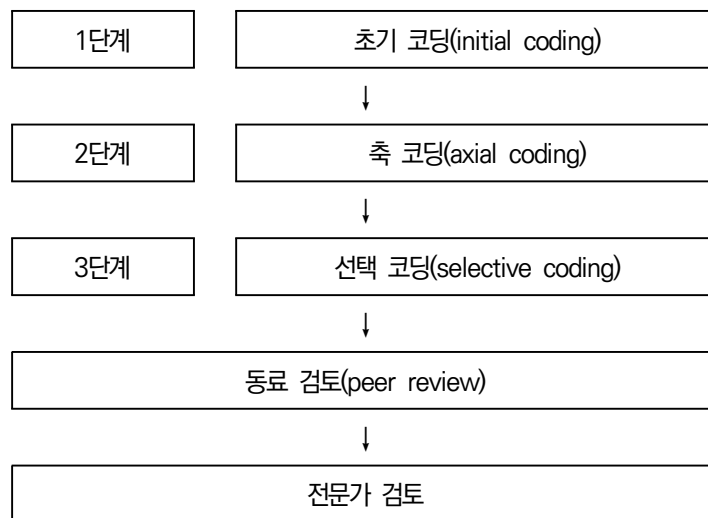
근거이론 방법의 분석은 크게 5개의 단계를 거쳐 수행하게 되는데,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이론적 선택(theoretical sampling), 유형 분석, 상황 모델 도출의 단계이다. 개방적 코딩은 면담 내 의미 있는 단어, 구절 등을 분리해내는 과정으로 분석 단위를 추출하고 분류한다. 이후 축 코딩을 통해 분석 단위의 연관성을 반복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정리해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마지막으로 이론적 선택과정에서 선택적 코딩을 수행한다. 이후 유형 분석은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맥락적 조건을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가능한 상관관계를 정형화하는 가설적 정형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2-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노동이민, 가족제도, 외교안보의 내용적 특성과 코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담당 집필자가 적절하게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사한 데이터는 과학적이고 엄밀한 분석을 위해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에서 제시하는 3단계의 코딩(coding) 절차를 거쳐 분석하였다(Charmaz, 2006; 권향원, 2016). 먼저 초기 코딩(initial coding) 단계에서는 연구진이 면담 전사본을 읽어가면서 연령대별 정책 인식에 대응하는 유의미한 의미 요소들을 추출하고 각 의미 요소를 요약, 해석하는 코드를 부여하였다. 초기 코딩을 완료한 후 부여한 코드를 재검토하면서 정책의 이해와 인식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들로 분류 종합하는 축 코딩(axial coding)의 단계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2단계 코딩에서 추출된 범주들을 바탕으로 주제별 그리고 연령 집단별 유사성 및 차이를 식별하고 연령대별 정책 인식과 이해의 특징을 도출하는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실시하였다.



2 분석의 신실성(trustworthiness) 확보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credibility)와 타당도(validity) 확보를 통해 연구 설계와 방법론의 엄밀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하게 질적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는 신실성(trustworthiness)이라는 개념을 통해 질적 수준을 갖추게 된다(신경림, 2004). 신실성은 질적 연구의 자료와 분석된 결과가 얼마나 믿을만한가에 대한 것으로 질적 연구에서의

엄밀성(rigor) 또는 신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거에 해당한다. 신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가지 준거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데 신빙성(credibility),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 자료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이 해당한다(Krefting & Laura, 1991; Lincoln & Guba, 1990; Morse, 2015).

먼저 신빙성이란 연구가 진실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장기간의 현장 조사, 연구자 간 협의(peer debriefing), 삼각 검증, 대조적인 사례 분석, 분석 방법과 해석의 적절성 검토, 면담 참여자 확인(member-check)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구자 간 협의 즉, 동료 검토를 거쳐 주제를 도출하고 또한 음성 파일의 녹취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녹취 과정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이 가능성은 연구 결과를 유사한 맥락이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풍부한 기술, 대표적 인용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결과에서 풍부한 묘사를 통해 주제를 서술하였고, 적절한 인용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인 자료 의존성은 일관되고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연구자의 관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연구진의 분석 모임을 통해 자료 분석의 확인 가능성을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의 전문가인 사회학 교수 1명에게 연구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즉,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진은 1차적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동료 검토(peer review)를 거치고 2차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를 거쳤다(Cohen and Crabtree 2008).

제3장

노동이민 정책 FGI 결과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3절 분석 결과

제 1 절

연구 배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인 지난 2007년 100만 명 이후 9년 만인 2016년에는 전체 인구의 4%인 2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최근 국내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도별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15년도 85만 명, 2016년 96만 명에 이어 2018년 100만 명을 넘었다(법무부, 2018). 집계된 수치 외 비공식 입국 노동자의 수를 추산하면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국내에 있을 것이라고 추산된다. 최근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하고 고소득 전문직 해외 인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법무부, 2019). 이에 대해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노동 현장에서의 긍정적 반응과 더불어 일자리 경쟁 및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및 이주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양면적 인식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변동해 왔다. 공식적/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이주노동자들의 증가는 인력난의 해소, 경제 규모의 확대, 사회의 다양성 확보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사회 통합 비용 증가, 내국인의 실업률 증가와 범죄 우려 고조 등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Barro et al, 1992; Berman 1997; 임동진, 2015).

한국 사회도 다문화·다인종 환경에 더욱 많이 노출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최근의 연구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이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국회입법조사처, 2010)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주민 노동력 보충 및 문화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이주민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사회문제 발생 및 범죄 증가, 일자리 잠식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도 매우 높았다. 2011년의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 남녀 1천 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민자 증가에 따라 소요 사태나 테모 등의 발생(64%), 일자리 갈등(50.3%), 임금 감소(37.2%) 등의 시나리오에 동

의하였다(이삼식, 2011). 더욱 최근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가져온다는 긍정적 인식은 2003년에 비해 2013년에 더욱 강해졌다(윤인진, 2016). 반면에 이들을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범죄율을 높인다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일자리를 뺏는다는 부정적인 인식 또한 2003년에 비해 2013년에 강해졌다(윤인진, 2016).

이주노동을 바라보는 태도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왔다. 이주노동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성별,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이주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에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10 등). 특히, 이주노동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세대 간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태어난 시기에 따라 구분되는 세대(age-cohort groups)는, 자라온 환경과 사회적 경험이 생애 주기의 특정한 시기와 맞물리며 특정 세대만 공유하는 독특한 경험들로 인해서 다른 세대와의 격차를 발생시킨다(Mannheim, 1952). 이주노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이에 따라서, 또한 태어난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국제화를 이룬 나이부터 겪은 최근 세대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으로 인해 이주노동 확대를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기성 세대의 경우,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 개발 성장 시대의 경험과 부의 창출에 우선순위를 둔 가치관이 우세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도구적인 시각에서 이주노동 정책에 긍정적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국 2018년도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별 정책 선호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외국인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20대와 50대가 세대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겪게 될 수 있는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전체는 찬성 51.0%, 반대 49.0%로 팽팽했으나 세대별로 본 결과 20대와 30대가 54.3%, 52.5%로 가장 반대가 많았고 50대가 43.7%로 가장 적었다(박성원 외, 2018). 이러한 결과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주의에 긍정적이라는 사실과 상반되는 결과이며(원숙연, 2011),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문화주의를 지지한다는 해외 선행 연구(Breugelmans & Van de Vijver, 2004)와도 반대되는 결과이다.

2018년 당시 연구 결과에 대해,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의 참여로 인해 일자리 경쟁 악화라는 위기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인식의 기저 원인에 대한 더 깊은 탐색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다문화 및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졌으나 대부분 인식의 근거나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사례 연구와 질적 연구가 일부 있으나(오계택 외 2007; 장임숙 2010; 황정미 2010) 우리나라 국민의 세대별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어떤 특정 조건 또는 맥락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이뤄진 바 없다.

이에 이 장에서는 세대에 따른 이주노동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은 각각 어떠한지, 또한 그 인식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형성 과정에 대해 탐색하고자 20대와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주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세대별 인식에 대한 자료를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근거이론(ground theory)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세대별 소통과 합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 경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이주노동의 개념 및 유형

가. 이주노동에 대한 정의

UN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해온 사람”을 의미한다(UN, 1990). 이주노동자라는 개념에는 국적, 노동 활동 지역, 유급 노동 활동의 3가지 요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건을 기준으로 이주노동자를 세분화하였을 때, 변경 노동자, 계절 노동자, 항해 노동자, 근해 시설 노동자, 순회 노동자, 사업 연계 노동자, 특별 취업 노동자, 자영 노동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사업 연계 노동자, 또는 특별 취업 노동자에 해당한다. 사업 연계 노동자는 고용자에 의해 한정된 일정 기간 취업국에 파견되어 의뢰받은 특정의 직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적인 고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특별취업 노동자는 체재 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이러한 노동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 출국해야 하는 노동자이다(UN, 1990; 김기원, 2005).

국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근로자(foreign worker)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이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를 의미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외국인 취업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재외 동포 입국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영주권자, 불법체류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나. 이주 유형

이주의 유형은 공간에 따라 국내·국제 이주, 시간에 따라 일시적·영구적 이주, 형태에 따라 자발적·비자발적/강제적 이주, 규모에 따라 개인·대량/집단 이주로 분류된다. 아래 [표 3-1]은 이주를 공간, 시간, 형태, 규모로 구분한 내용이다(이규용, 2014).

[표 3-1]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 통계를 위한 이주자 유형

이주자 유형		기준	체류 자격별 분포
비이주자		통상적 거주국 변경이 없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단기적 이주		거주 기간 3개월~1년	구직(D-10), 관광취업(H-1)
장기적 이주	비영주	거주 기간 1~5년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예술흥행(E-6), 주재(D-7), 전문직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영주·준영주	거주 기간 5년 이상 가능	취재(D-5), 종교(D-6),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방문 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출처: 이규용 (2017), 외국인력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위의 기준에 따라 이민에 해당되는 유형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비영구 장기 체류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전반적으로 유입 규모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취업 형태로 입국한 준영구 체류 자격으로 교수 비자 입국자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준영구 형태인 가족으로 입국한 체류자이고 방문 동거 체류자가 여기에 속한다. 넷째, 준영구 비자인 재외 동포와 영주자이다. 국내 우수 인재 유치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비자인 연구(E-3)나 특정 활동(E-7) 비자 및 유학생(D-2)이 해당된다. 이민의 목적에 따라 (1) 결혼 이민, (2) 노동 이민, (3) 전문직 이민, (4) 유학 이민으로 구분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 형태로 입국한 준영구 체류 자격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입국해서 이후 비공식적으로 노동을 하거나 이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모두 이주노동자의

가능성 범주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민의 목적에 따라 유형을 나누면 (1) 결혼 이민, (2) 노동 이민, (3) 전문직 이민, (4) 유학 이민으로 구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의 거주 목적은 취업(59.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주·동거(26.1%), 유학·연수 등의 학업(13.7%)의 순으로 나타났다(임동진, 2015).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45.2%(1,070,56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8.4%(197,764명), 베트남 8.3%(196,633명), 미국 6.4%(151,018명), 우즈베키스탄 2.9%(68,433명), 일본 2.6%(60,878명) 등의 순이다(법무부, 2018).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2018년도에는 그 수가 54만 명을 넘어섰다(법무부, 2018).

2 이주노동자 인식에 관한 주요 이론

가. 사회 정체성 이론과 현실 집단 갈등 이론

이주민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에 대해 설명할 때 자민족 중심주의 및 문화적·사회적 충돌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일자리 경쟁, 복지 자원 등 경제적 이해의 경쟁 관계에 주목하는 현실 집단 갈등 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을 통해 주로 설명한다(Stephan, 2002). 차별과 배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정체성과 주류 사회가 외부 집단인 이주자에게 느끼는 경제적 위협의 정도에 따라 그 차별과 편견, 배타적인 태도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접근은 상호보완적이다(Coenders et al., 2003; 오계택 외, 2007; 황정미 외, 2007).

1) 사회 정체성 이론

사회 정체성 이론은 심리학 분야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개인들이 속한 집단 간 태도와 행위의 원인을 사회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Tajfel & Turner, 1986). 유아 발달의 저명한 학자인 '에릭슨(Erikson)'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은 '동일시'라는 기제를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와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Erikson, 1956). 개인은 자신의 자존감 및 가치의 상승을 위해 자신이 속한 사회 범주 또는 집단과 연결하려 하며(Bozeman & Ellemers, 2007), 조직이나 집단의 특성 또는 자격 등을 자신과 관련지으려는 집단의식을 추구하는 데 이를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집단에 대해 개인 갖는 일원으로서의 자부심,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 등으로 표현된다.

집단 소속감 및 정체성은 개인이 획득한 집단 소속과 더불어 생득적으로 소유하는 성, 인종 등에 기반하는데, 민족 또는 국적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속한 민족 또는 국가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면 개인의 자아의 가치와 위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상이 없더라도 자신이 속한 민족 또는 국가에 대해 이바지하려 하고 더 우월한 민족 또는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Tyler, 1999). 사회 정체성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위해 외국인 또는 이민자와 같은 외부 집단에 배타적이고 엄격한 태도와 더불어 편견과 차별을 가질 가능성도 크다. 사회 정체성의 수준이 높은 사회는 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규명되는 '차이'에 기반하여 이러한 태도를 정당화한다(김금미, 한덕웅, 2001).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성에 대한 가치가 강하고 문화적 다름에 대해 비관용적 태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세계화와 변해가는 국내 상황으로 인해 단일민족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민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여전히 이주민을 국민이나 혈연 가족 등의 밀접한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극적이고 이주민 유입 확대 및 영주권 발급 확대에 대해 반감이 있다(김이선 외 2007; 김순양, 2013).

2) 현실 집단 갈등 이론

사회 정체성 이론은 외부자에 대한 배타성의 원인을 내부 집단의 도덕, 가치, 문화 등 사회적 규범의 차이에서 찾는 반면, 현실 집단 갈등 이론은 내외부 집단 간의 제한된 자원, 특히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을 배타성의 원인으로 본다(Bobo & Hutchings, 1996). 노동이민자와 관련된 경제적 변인에는 사회복지 등 재정 부담 증가, 복지 서비스 및 지원금 축소, 일자리 경쟁, 임금 하락 가능성 등이 있다(Kessler 2001; Facchini & Mayda, 2008; Hanson et al 2008; 황정미 외, 2007). 전문직

이주노동자는 조세 기여를 예상할 수 있지만,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복지비용 등 공공 재정에 실질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권수현 송영훈; 2015).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유럽의 복지국가와 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유입에 따라 세금인상 등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반이민적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acchini and Mayda 2009; Hanson, Scheve, and Slaughter 2007).

현실 집단 갈등 이론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노동시장 내 일자리 경쟁이다. 이민노동자들은 출신 국가의 임금보다 높지만, 내국인의 시장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민노동자들과 비슷한 숙련도와 직업군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O' Rourke & Sinnott, 2006). 예를 들어, 3D 업종이나 단순 노무직, 서비스업 직종에서 이주노동자에 의한 과잉 공급으로 시장 임금의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일자리 경쟁에 직면해야 하는 노동자 집단이나 노동조합이 이주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중심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Quillia, 1995).

3 이주노동자 및 이주노동 정책 인식 관련 요인 연구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이주노동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보고들이 있었으나(Breugelmans & Van de Vijver, 2004; 최효진·유계숙, 2009; 원숙연, 2011)이나 최근에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다(김금미·안상수 2014). 학력 수준이 높은 고숙련 노동자는 이주노동 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학력 수준이 낮은 비숙련직 노동자들은 엄격한 이주민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Daniel & Von Der Ruhr, 2003; 원숙연, 2011; 김석호 외, 2011).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 집단이 국가 경쟁력 향상 및 문화적 다양성의 유익을 이유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정미 외, 2007; OECD, 2010; 강수향·유계숙, 2011). 저소득 집단, 실

업자 등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배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EUMC, 2005), 가구 소득이 501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은 이주민 지원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강수향·유계숙, 2011),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이 낮은 개인일수록 다문화화를 배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맹진학, 2009),

나. 주관적 경제 상황 인식에 따른 차이

사람들은 노동시장 내 개인의 미시적 위치보다는 거시적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이민노동자들을 판단하기도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수록 이주노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Citrin, et al., 1997; Espenshade & Hempstead, 1996). 이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자원에 대한 압박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비관적인 경제적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 사회적 부담 증가, 일자리 경쟁 압박 상승, 증세의 부담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더욱 부족해진 자원을 이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을 고려할 심리적 여유가 줄어든다(Hood & Morris, 2000; Lee & Ottati, 2002; Breugelmans & Vijver, 2004).

다. 세대에 따른 인식의 차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과 관련된 연구 결과도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나이 또는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순수한 연령 또는 나이의 효과가 아니라 연령 효과와 출생 코호트 효과가 혼재된 것이다. 즉,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age effect) 같은 나이라도 태어난 시기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는 출생 코호트 효과(birth-cohort effect)가 혼재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령 효과와 출생 코호트 효과를 분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 두 가지 효과를 일컫는 세대(age-cohort group) 개념을 사용하였다.

새로운 세대가 기존 세대와 가치와 인식 등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대마다 매우 다른 조건을 경험하기 때문이며, 특히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경험이 가치와 정체성을 결정

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화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과 정체성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조건에 의해 가장 강하게 형성되며 말년기로 갈수록 비교적 안정적이 된다(Mannheim, 1952; Inglehart, 1997).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세대가 계속 나타나고 기존의 세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시대정신 및 가치와 인식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Inglehart, 1997; Tilley, 2002).

선행 연구들도 세대에 따라 이주노동자 및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이민정책 및 이주노동 정책을 지지하지만, 기성세대일수록 이주민 유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일관된 국내외 연구 결과이다(황정미 외, 2007; Breugelmans & Van de Vijver, 2004; OECD, 2010; Kessler & Freeman, 2005; Malchow-Müller et al, 2008; 송영호, 2009), 40대보다는 20대와 30대가 이주민의 사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강수향·유계숙, 2011), 원숙연(2011)에서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서 청년에 가까운 세대일수록 노동 분야를 포함한 외국인 정책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유럽 내 청년 세대에 대한 연구에서도 세대별 이민 관련 경험에 따라 이주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란 이전 세대는 이민자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민자들의 정착 이후 성장한 젊은 세대는 이민정책에 보다 개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Ford, 2012). 그 이유는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높은 교육 수준(Hainmuller and Hiscox, 2007)을 가지고 있고 유럽 통합의 결과로 이민자들과 더욱 빈번한 사회적 접촉을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McLaren, 2003; Berg, 2009).

그러나, 박성원 외(2018)에서 밝힌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세대 간 선호 격차는, 20대와 30대가 다른 어떤 세대보다 다문화 노출 수준이 높고, 학력도 높으며, 절대적 풍요를 누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 정책에 가장 부정적인 세대라는 점은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이다. 이는 최근의 세대가 이주노동 또는 다문화와 관련되어 이전의 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독특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 및 현실 집단 갈등 이론에서 논의한 모든 요소는 세대별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어떤 세대보다 다문화 환경 노출이 많고 외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형성된 이들만의 독특한 경험으로 인해 기존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높은 애착 수준을 보일 수도 있다. 또는 이전 세대가 자신들의 취업 시기에 겪어보지 못한 최근의 청년 실업난이 불러온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과 일자리 경쟁의 위협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및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세대별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큰 격차를 보인 20대와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및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형성과정을 밝히고자 초점집단면담과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3절

분석 결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세대별 개방 코딩과 범주 도출

20대를 대상으로 노동이민 정책에 관하여 각각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총 12명의 면담 참여자와 면담한 전사 자료를 행별로 코드를 부여하고 지속적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범주를 명명하는 방법인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51개의 코드와 10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7개의 상위 범주로 개념화되었다[표 3-2]. 50대를 대상으로 노동이민 정책에 관하여 6명의 면담 참여자와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42개의 코드와 12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7개의 상위 범주로 개념화되었다[표 3-2].

2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주요 상위 범주는 ‘사회적 접촉’, ‘상황 인식’, 위기의식’, ‘자기중심적 판단’, ‘변화의 수용’, ‘정책 인식’, ‘정책 요구’로 나타났다. 5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서 또한 ‘사회적 접촉’, ‘상황 인식’, 위기의식’, ‘자기 회귀적 판단’, ‘변화의 수용’, ‘정책 인식’, ‘정책 요구’로 20대 대상 면담으로 도출된 주요 상위 범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20대와 50대 집단의 상위 범주는 유사하게 도출되었지만 각각 하위 범주는 다르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집단별로 하위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비교 확인하는 것이 집단이 서로 정책에 관한 의견 차이가 다르게 나타내는 맥락을 설명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표 3-2] 20대, 50대 대상 노동이민 정책에 관한 면담 자료의 범주화 목록

20대의 인식	하위 범주	범주	하위 범주	50대의 인식
대학교에서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접촉 기회가 많음	빈번한 접촉	사회적 접촉	빈번한 접촉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이주노동자들과의 접촉 기회가 많음
회사에서 해외 현장 근무시 접촉 기회가 있음				건축업, 농장 등에서 이주노동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음 가족 내 해외 결혼 등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음
대학교의 전문직 이주노동자들은 성실하게 근무함	양가적 감정		양가적 감정	모든 이주노동자가 부정적인 것은 아님
전문직 이주노동자들은 이중 언어 구사로 활발히 활동함				이주노동자들은 근면 성실하고 좋은 품성을 지님
이주노동자 거주지가 모두 범죄 위험이 있는 곳은 아님				단기 체류성 이주노동자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게으름
단기 체류성 이주노동자들은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임				폐쇄적 문화와 배타성으로 집단촌 형성 행태가 부정적임
중국 동포들과의 접촉 경험 및 환경 변화에 부정적임				자녀가 중국 동포들로 인한 두려움으로 거주지 이동함
대학 생활 중 등록금, 수강 신청, 기숙사 배정 등 유학생들에 대한 우선 배려로 내국인으로서 역차별 경험	역차별	상황 인식	역차별	다문화 가정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학 제도로 역차별 경험
유학생의 기숙사 우선 배정으로 역차별 논란이 있음				북한 동포 채용에 따른 지원금 제도로 채용 기회가 없어짐
학교는 재원 확보 및 국제화 지수에 유학생 수가 중요함			경제적 상황 인식	현재의 자녀 세대의 취업과 미래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음
한국인도 유학 시 외국 대학의 배려를 받기 때문에 유학생 배려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자녀 세대 인식			기성세대가 보기에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낙약함 청년들은 안정을 추구함
현재의 청년 실업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인지하고 있음			경제적 상황 인식	
과거 성장 시대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인식함				

20대의 인식	하위 범주	범주	하위 범주	50대의 인식
이주노동자로 인한 청년 실업난 심화	경쟁 상대 인식	위기 의식	경쟁 상대 인식	고소득 전문직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자녀의 취업 기회 감소
이주노동자들은 이중 언어로 해외 취업의 기회가 많음				전문직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자녀의 양질의 일자리 잠식
고소득 전문직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기회 박탈 존재				
유학생의 경우 향후 직접적인 취업 경쟁자로 인식함			범죄에 대한 불안	중국 동포 등 때문에 50대도 단순 노동직 취업 어려움
전문직 이주노동자가 가진 전문성이 뛰어남				
단순 노동직의 경우도 청년들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음				
이주노동자들의 강력 범죄 등의 위험이 우려됨	범죄에 대한 불안	범죄에 대한 불안	범죄에 대한 불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력 범죄 등의 위험이 우려됨
선진국처럼 치안 불안 및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이민 문제				유럽처럼 이민 유입으로 각종 사회문제 등의 우려
이주노동자들의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한계가 존재함				종교적인 이유로 범죄 및 사회 갈등이 유발될 것임
남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느낌				불법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검거가 안됨
다문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적응 시간이 필요함	타자화	자기 중심적 · 자기 회귀적 판단	자기 성찰	우리나라는 서구권에 대한 문화 사대주의적인 편견이 있음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불편함이 있음				
종교보다 일상의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문제 소지임				언론에서 다문화 및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이 심함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				
한국인과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가능성이 있음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짐
이주노동자들의 패거리 문화나 한국어 습득을 게을리하는 등 한국 문화에 융화되려는 노력이 부족함				
한국은 특유의 폐쇄적 문화로 향후 다인종 사회로의 문화적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함				우리 민족도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 등으로 인해 실은 다문화 민족임

20대의 인식	하위 범주	범주	하위 범주	50대의 인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하층민 에 속하게 될 것임				
이주노동자들과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음	다문 화의 유익	변화의 수용	불가 피성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 결국 수 용할 수밖에 없음
사회 지속성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확대는 고려 사항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이민자의 불가피한 수용 필요
전문직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수용할 만 한 것들이 있음				한국의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인 노동 자들을 받아들여야 함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다양성 확대 등은 긍정적임				3D 산업의 유지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상황임
			당위 적 태도	인권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 들여야 함
규제 없는 이민노동 정책 도입 이후에 되돌리기 어려움	정책 비판	정책 인식	정책 비판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해외로부터 지원과 파병을 받았듯이 우리도 베풀 수 있어야 함
이주노동자들을 확대하면 정부는 근로 환경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임				정부가 폐해에도 불구하고 이민노동 정 책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함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음				
정부가 내국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보다 이민노동 정책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 결하려고 함				과거에 비해서 무분별한 허가를 해주고 있음
저출산 해결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청 년들의 출산 회피 원인을 해결해야 함				
현재의 청년 취업 정책과 노동이민 수 용은 모순된 정책임				자국민 우대는 아니더라도 역차별을 받 지 않도록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함
낮은 임금 수준, 부족한 복지 제도, 퇴 직 후 전망 불투명으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게 됨				
정부의 3D 직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노력의 필요가 있음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은 자국민을 보호 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20대의 인식	하위 범주	범주	하위 범주	50대의 인식
엄격한 심사와 관리가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을 것임	해결책 요구	정책 요구	해결책 요구	엄격한 심사와 관리가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
이주노동자 범죄 감소를 위해 강력한 심사·관리가 필요함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 범죄 이력 조회 등 강력하고 확실한 선별 정책을 실행해야 함
엄격한 정책과 통제를 통해 선별된 노동자만 이주 필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적 및 추방 등 강력한 조치 필요함
한국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직장에서의 임금이나 근로 환경 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해도 치안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함
근무 환경이나 노동 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의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엄격한 정책과 통제를 통해 선별된 노동자만 이주 필요
이민을 통한 저출산 해결보다는 양육환경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임				외국 엘리트들에 국한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
청년 실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자국민에 대한 실효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실효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자녀들의 경력 단절, 맞벌이 문제 등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함

가. 20대의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개방 코딩

1) 사회적 접촉: 빈번한 접촉, 양가적 감정

첫 번째 범주는 ‘사회적 접촉’으로 20대는 대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또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노동이민자를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전 세대보다 다문화에 대한 노출 빈도는 많아졌으나 의미 있는 관계보다는 피상적인 관계가 대부분이었다. 아래의 20대 남성 참여자는 직장에서 사업차 진행되는 회의에서 상대 기업의 관계자로 외국인 노동자가 참여함으로써 한 명의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들 산학 연구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서 H기업의 것을 만약에 한다 하면 H기업에서 보통은 국내 담당자가 안 나오고 국외 담당자가 나와서 미팅을 할 때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중국인, 일본인 많이 주위에 보이고요.” (20대 남성)

20대들은 빈번한 접촉 가운데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모두 경험하였다. 외국인을 접하게 되면서 전문직 이주노동자의 성실한 모습이나 이중 언어 구사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지만 단기 체류성 이주노동자 및 중국 동포들과의 접촉에서는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있었다.

“(원어민 교사를) 좋은 학교나 까다롭게 보는 학교에서는 선별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조금 안 좋은 학교는 구하기 자체가 힘들니까 가급적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수업에 커리큘럼이 이뤄지지 않는다든가 마음에 안 들면 계약 기간보다 일찍 가 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20대 여성)

2) 상황 인식: 역차별, 경제적 상황 인식

두 번째 범주인 ‘상황 인식’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 불황의 청년 실업을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이 자신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유학생을) 배려하는 거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그 비율이 조금 융통성 없이 조절된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번에 기숙사 관련된 것도 외국인들을 위한 기숙사 비중을 더 늘렸는데 그게 지금 한국 국내 재학생들도 기숙사 떨어지는 사람이 되게 많고 4.5점 만점에 4점은 넘어야 기숙사 갈 수 있어요. 제 근처에 친구도 2시간 반 거리 통학해서 다니는데 그 와중에서 외국인 비율을 더 높이니까 외국인들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차이가 심하지 않나. 어느 정도는 편의를 봐주는 게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역차별하는 거 같아요.” (20대 남성)

3) 위기의식: 경쟁 상대 인식, 범죄에 대한 불안

20대는 3번째 범주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이주노동자에 의해 자신의 취업 기회가 박탈될 우려를 표현하면서 일자리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치안 불안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신분을 숨길 수 있어 강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남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가장 위협받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

“일단 훨씬 능력이 더 뛰어나면 외국인이 채용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청년 취업난이 심하잖아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써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쓰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서 정책을 취할 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대 남성)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주노동자들)이 어디를 가든 알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일반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도망을 가기에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20대 여성)

“뭔가 느껴지기에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떠오르는 이미지는 남성 외국인 노동자였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외국인보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했을 때 좀 더 신체적으로 위협이 느껴지는...” (20대 여성)

4) 자기중심적 판단: 타자화

4번째 범주는 ‘자기중심적 판단’이다. 오랜 시간 유지해 온 동질적인 민족 구성이 익숙하기에 다문화에 대한 낯섬과 불편함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문화의 철학과는 다르게 한국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거주자나 이민자들에 대해 한국 문화에 동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문화적 갈등의 요인을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성보다는 이민자들의 집단 문화나 한국 문화에 융화되려는 노력의 부족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결국 한국 사회에서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고 하층민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저 같은 경우는 문화 차이나 사소한 다툼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말로 좋게 해결할 생각은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원가를 지적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외국인이니깐 이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없어야 할 거 같아요.” (20대 남성)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민은 아까 말씀하신 3D 업종의 사람들을 뽑을 거고 지금 현재 그냥 한국인만 봐도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올라가 봤자 중산층에서 머무를 거고 중류층에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노동이민 3D 업종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류층으로 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분들이 애를 넣고 그 아이가 공부해서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한국인의 특징이 있듯이 이 사람들의 특징으로 얼마든지 상류층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당장 20~30년 안에 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20대 여성)

5) 변화의 수용: 다문화의 유익

20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능성을 이주노동자들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익에서 찾고 있었다. 20대는 노동이민자들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 시너지 효과 등 자국민 입장에서의 유용성에 근거하여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민을 오는 나라 문화의 다양성 같은 게 어느 정도 그분들도 가지고 오는 게 있잖아요. 중국분들은 중국인 문화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다양성이 이렇게 합쳐져서 저희한테 문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미국 가면 차이나타운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게 관광 명소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화도 가지고 있고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문화적인 저변을 넓히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만 보장만 된다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20대 여성)

6) 정책 인식 및 정책 요구: 정책 비판 및 해결책 요구

마지막으로, ‘정책 인식’과 ‘정책 요구’는 이들의 행동 양식을 반영하는 주요 범주이다. 20대는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청년들이 왜 노동력이 필요한 현장에 취업하려 하지 않는지, 왜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은 매우 안일한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로 노동력을 대체하다 보면 결국 근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며 규제가 없는 노동이민 정책은 차후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따라서 한국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낮은 임금 수준, 부족한 복지 제도 등을 비롯해 근로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주노동 정책도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면 엄격한 심사와 관리, 통제를 통해서 선별된 노동자만 유입하도록 하는 강력한 선발 정책을 요구하였다.

“조건부가 붙어야 할 거 같고요. 현재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 있고 범죄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검증이 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20대 남성)

“그분들로 인해 급여나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열악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공장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을 싸게 데리고 오면 이런 환경에서 충분히 일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저희가 일을 한다면 이걸 개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해서 더 나아질 부분을 그렇게 데리고 오면서 개선이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부분, 급여 같은 경우도 단순히 저 사람과 내가 경쟁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계속 일을 하면서 개선되거나 최저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거에서.” (20대 남성)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노동력이 필요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노동력이 없는 이유, 출산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먼저가 아닐까.” (20대 여성)

나. 50대의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개방 코딩

1) 사회적 접촉: 빈번한 접촉, 양가적 감정

5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서 드러난 첫 번째 범주 ‘사회적 접촉’으로 하위 범주는 “빈번한 접촉”이다. 50대 집단에서는 이들을 자신이 소유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만나거나 상사로 만나고 있었다. 또는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이나 자원봉사하는 단체의 대상으로 만나는 등 보다 상위의 입장에서 베풀어 주는 입장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난민까지 아니지만 동남아 사람을 숙박을 제공하면서 과수원에서 써 봤데요. 작은 아버지 표현이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 어찌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는 걸 악하게 대하면 악해지고 인간 대접해주고 우리나라 대접을 반절만큼만 베풀면 무조건적으로 충성 비슷하게 착하데요.” (50대 여성)

50대 또한 이주노동자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게으르다고 경험한 면담 참여자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였다. 배타적 태도로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부정적이나, 근면 성실하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과격주의자 폭력주의자로 텔레비전에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이 많아요. 통계로 보면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낮잖아요.” (50대 남성)

2) 상황 인식: 역차별, 경제적 상황 인식, 자녀 세대 인식

‘상황 인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자녀 세대의 취업과 미래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청년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나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전부 하나나 둘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6남매 7남매... ‘왜 20대가 자살율이 1위인지 아니? 심리적인 근육이 약해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래, 아프면 병원 가야 된데요. 지금 모든 행복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물론 6.25 때나 우리 때는 배불리 먹고 그게 행복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20대가 아프고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50대 여성)

50대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조차 뺏기고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50대들도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들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하려 할 때 다문화 가정이 우선 선발되어 손자들이 배제된 경우와 탈북자 채용시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로 인하여 내국인보다 탈북자를 우선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언급하였다. 50대들은 이런 제도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인식하였다.

“탈북 그 사람들 고용하면 1인당 30만 원인가... 그런 식으로 지원금을 운영자 측에서 주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 한국 아줌마는 억세고 노동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아줌마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차별이죠.” (50대 여성)

3) 위기 의식: 경쟁 상대 인식, 범죄에 대한 불안

일자리를 노동이민자들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50대는 3번째 범주인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고소득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자녀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어 자녀들의 취업을 기대했던 양질의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있음을 표현하였다.

“제 친구가 50대 후반인데 식당 일을 하려고 갔어요. 식당 일을 세 달 하고 갑자기 사장이 3일 전에 잘랐거든요. ‘어떻게 주방부터 갑자기 잘렸어?’ 하니까 조선족을 세 명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질 낮은 일자리는 뺏기기 시작했어요.” (50대 여성)

20대 집단과 동일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강력 범죄를 일으킬 위험을 걱정하고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종교가 달라서 향후 범죄 및 사회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범죄에 대한 불안은 20대와 50대에서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나쁜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제도라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불법 이민자는 데이터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추적이 안 되잖아요...특히나 무더기로 사는 대림동, 안산, 수원 이런 식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50대 남성)

4) 자기 회귀적 판단: 자기 성찰

50대 집단은 ‘자기 회귀적 판단’을 한다는 점이 20대 면담과는 주요한 차이가 있는 범주에 해당한다. 50대가 느끼는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의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를 내국인 안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서구권에 대한 문화 사대주의, 이슬람 문화를 포함한 다문화에 대한 편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단일민족 정체성에 대한 허구 등의 의견을 표하는 등 자기성찰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에 대한 고정 관념에 강한 게 있잖아요, 한 핏줄.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이민자에 대한 시각이 문화 사대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는 서양 이민자는 무조건 우러러보고 동남아인이면 하대하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50대 여성)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체 고용자들도 각성을 하고, 정부에서 고용자들도 제재해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약점을 건드려서 그렇게 빼 먹는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악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 있어요. 뉴스에서 손가락 끊어지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난리 나는데.. 못 받고 착취당하면 아무리 착했던 사람도 내가 당하면 악하게 되거든요.” (50대 여성)

5) 변화의 수용

50대는 우리나라의 특수적 상황인 저출산 극복과 3D 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20대는 다문화가 주는

유익에 집중한 반면 50대는 현실에 근거한 불가피함과 당위성을 근거로 삼았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고집하는 거 아니고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업종으로 안 들어가니까 당장 제주도에서 굴을 안 탄다면서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해요. 막을 수는 없잖아요” (50대 남성)

또한, 인권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받는 것이 당위적이며,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 파병을 받아준 외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혜적인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이유가 교회도 다니지만 더불어 살아야 된다. 우리가 6.25 때 엄청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 도와줬던 게 터키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잖아요. 파키스탄도 도와줬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도 받은 만큼 베풀지는 못하더라도 50%는 베풀어야 되지 않나.” (50대 남성)

6) 정책 인식 및 정책 요구: 정책 비판, 해결책 요구

마지막으로, 50대는 ‘정책 인식’과 ‘정책 요구’에서 이민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허용을 문제로 삼으며 저출산 문제 등의 국내 현실을 먼저 개선하는 실효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어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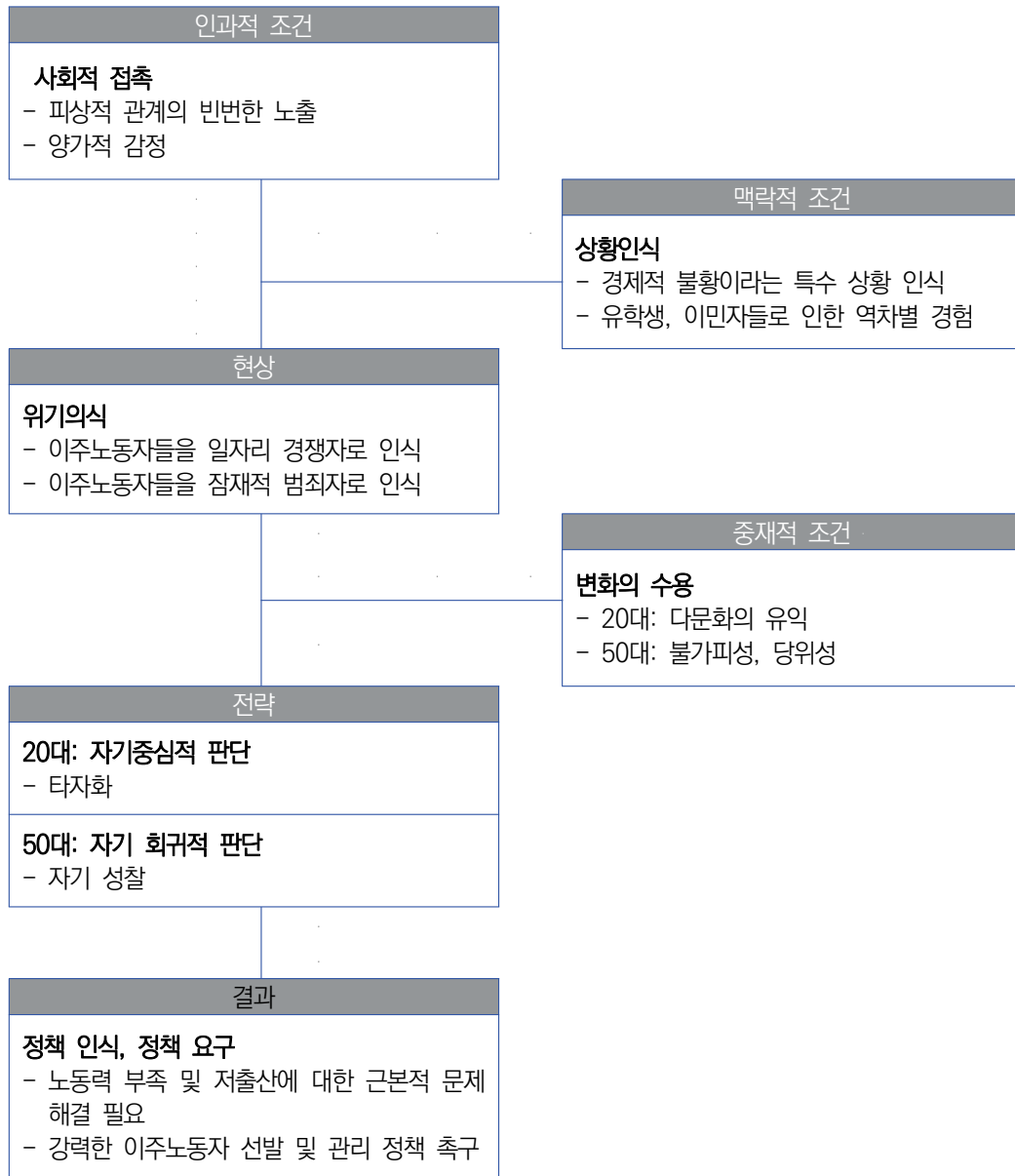
“제발 출산율 정책을 이민정책만 생각하지 말고 출산율 정책을 디테일하게 해야지, (이민정책은) 엉뚱하다는 생각 들어요.” (50대 남성)

20대와 동일하게 50대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선별적 정책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 외국 엘리트들에 국한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과거 이민정책에 비해 최근 무분별한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엄격한 심사와 통제를 통해 선별된 외국인들만 유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까 보니까 50만 명이다 하셨잖아요. 그거는 공식적인 거고 더 있다고 하는데 들어올 때부터 차단이라고 할까요. 선별을 범법자라든가 사고를 치고 왔든지 이민국에서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걸러야 하지 않을까. 차선책으로 1차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50대 남성)

2 축 코딩 및 노동이민 정책 인식에 대한 범주별 기술

축 코딩은 개방 코딩에서 발견된 개념과 범주의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재조합하는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을 나눠서 배치하며 연관되는 다양한 조건들의 작용 등을 고려하여 패러다임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20대, 50대 면담 자료의 개방 코딩을 [그림 3-1]과 같은 패러다임 모형을 시각적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1] 20대, 50대 집단의 노동이민 정책 인식 형성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원인/인과적 조건

원인 또는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거나 발전하도록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과적 조건은 ‘사회적 접촉’이다. 각 집단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외국인과 동료, 직원 또는 친구 등 학교와 직장 등에서 빈번하게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 20대는 주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관계 위주이고 50대는 수혜자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에서 모두 개인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경험을 겪게 된다.

2) 맥락적 조건

맥락은 어떤 현상이 놓여져 있는 일련의 속성들의 구체적인 나열을 의미하는데, 20대와 50대 집단 모두 경제적 불황이라는 특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대는 청년 취업난을 매우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50대 집단도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들은 기숙사 혜택, 장학금 혜택 등 일종의 특혜가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게 되고, 50대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이나 탈북민 채용 지원금 제도 등을 겪으면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3) 현상

현상은 어떤 작용과 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주요 현상은 ‘이주노동자를 일자리 경쟁자 및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이다. 20대, 50대 모두 이주노동자들을 자신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 또는 적어도 자녀 세대의 경쟁 상대로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강력 범죄 사례, 이민자들의 집단화로 인한 치안 위기, 이주노동자에게 직접 겪은 손해 등으로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이고 있다.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특정한 맥락 내에서 취해지는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작용

하는 조건으로서,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 20대는 다문화가 가져오는 유익에 집중하고 50대는 세계화 수용과 근로자 부족에 집중하고 있다. 20대가 생각하는 다문화의 이점은 경쟁으로 인한 시너지, 사회 지속성 기여, 전문직 이주노동자로부터의 습득 등 현실적인 이유인 반면 50대의 중재적 조건은 세계화의 추세와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한 산업 현장을 고려한 불가피성과 당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5) 전략

작용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이는 전략으로 연속적이며 과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요소이다. 20대의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전략은 타자화라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정하였다. 20대는 심각한 경제적 상황과 취업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할 뿐 아니라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이주노동자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과 융화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주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50대의 경우, 이와 상반되게 자기 회귀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및 이슬람 국가 출신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 및 단일민족이라는 허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6) 결과

전략에 따른 결과는 20대, 50대의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0대, 50대가 동일하게 노동이민 정책을 통해서도 노동력 부족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20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호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늘릴 수 있는 양육 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대와 50대 모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선별 정책과 관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범주별 속성과 차원

패러다임	범주	하위 범주	속성	차원
인과적 조건	사회적 접촉	빈번한 접촉	빈도	많음-적음
			기간	지속적-일시적
		긍정적 경험	빈도	많음-적음
			정도	강함-약함
		부정적 경험	빈도	많음-적음
			정도	강함-약함
맥락적 조건	상황인식	역차별	정도	강함-약함
		특수 상황 인식	정도	강함-약함
			기간	지속적-일시적
		자녀 세대 인식	정도	강함-약함
현상	위기의식	일자리 경쟁자 인식	정도	강함-약함
			기간	지속적-일시적
		범죄에 대한 불안	정도	강함-약함
			기간	지속적-일시적
중재적 조건	변화의 수용	다문화의 유익	정도	강함-약함
			기간	지속적-일시적
		불가피성	정도	강함-약함
		당위적 태도	정도	강함-약함
전략	자기중심적/ 자기희귀적 판단	타자화	정도	강함-약함
		자기 성찰	정도	강함-약함
결과	정책 인식	정책 비판	정도	강함-약함
	정책 요구	해결책 요구	정도	강함-약함

3 선택 코딩

선택 코딩은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 이와 다른 범주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문을 만들면서 범주를 좀 더 정련화하는 과정이다. 즉, 모든 범주들이 하나의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이론이 구축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범주들을 수렴하고 관통할 수 있는 핵심범주는 “노동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성”으로 상정했다. 20대와 50대 면담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서 다양한 위치와 국적의 노동이민자들을 자주 만나고 있었다. 20대들은 유학생이나 직장 내 전문직 이주노동자들과 빈번하지만 피상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50대의 경우, 수혜자 입장에서 젊은 나이대의 저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간접적으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이민자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무책임하고, 범죄의 위험이 있거나, 문화적으로 한국인들과 마찰을 빚는 이주노동자의 사례가 있는 반면, 인품이 좋고, 근면 성실하고, 배울 것이 있는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현재 20대와 50대 모두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일자리의 부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신 또는 자녀들의 취업 또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는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교는 재원 확보와 대학 평가를 위해 타국에서 온 유학생들에 기숙사 우선 정책, 장학금 혜택 등 적극적인 유학생 유도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50대들은 손자녀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다문화 가정 우선 입학 정책으로 등록에서 배제되거나 탈북민 고용 지원금 제도로 인해 단순 노무직 취업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내국인들에게도 부족한 자원들이 외국인 또는 이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면서,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정책이 아닌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다문화에 익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이주노동자들을 직접적인 취업의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50대도 이전과 다르게 고소득 전문직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자녀들의 일자리를 염려하고 있었으며, 50대도 마찬가지로 중국 동포 및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에 최근 발생한 오원춘 여성 토막 살인사건, 안양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그리고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 등 중국 동포 및 이주노동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확산되면서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범죄 가능성에 대한 높은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특히 이러한 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20대, 50대 여성은 두려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 대한 추적의 어려움 등 매우 구체

적인 근거를 들어서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20대와 50대 모두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전면적 반대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이주노동이 한국 사회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다양성 및 시너지 효과, 사회의 지속성 유지, 전문성의 강화 등 이주노동을 통해 자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익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비해 50대는 이주노동이 필요한 근거로 불가피성과 당위성에 기반한 근거를 들었다. 세계화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인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3D 산업의 유지를 위해, 한국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 차원과 도의적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대와 50대는 이주노동의 필요성과 문제점 가운데서 상반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20대의 경우, 내국인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타자화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전략을 취하였다. 자신에게 다문화 환경과 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불편함과 갈등이 있음을 표현하였고 이 문제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문화나 한국어 습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하더라도 한국인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한 한국인 특유의 폐쇄적 문화, 단일민족 특성 등으로 문화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한국 사회에 주류층으로 자리 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비해, 50대는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회귀적 접근을 통해 이주노동의 문제에 한국인들의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고 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서구권에 대한 사대주의적 편견을 지적하고, 언론에서 조장하고 있는 다문화 및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와 임금 체불 문제 등도 이주노동 문제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우리 민족도 실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이 아님을 상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20대, 50대 모두 이주노동 정책을 통해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였다. 특히, 20대는 근로조건 개선과 양육 조건의 개선 등이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맥락과 인식하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선별 및 관리 정책을 요구하였다.

4 유형분석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하고, 맥락적 조건과의 관계를 유형화한 후, ‘노동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유형을 ‘20대 남’, ‘20대 여’, ‘50대’의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의 패러다임과 범주별 속성과 차원은 [표 3-4]와 같다.

(1) 20대 남

20대 남자는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낮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남에게는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직접적인 범죄의 우려나 두려움은 거의 없었다.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직접적인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앞두거나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겪는 손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이주노동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며, 일자리를 두고 직종에 따른 수입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타자화를 통해 자신들이 주체가 되고 이주노동자들은 객체로서 동화의 대상화하였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이주노동을 통해 가중한다는 인식과 함께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이고 이주노동은 그 후에 보완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구하였다.

(2) 20대 여

20대 여자 또한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낮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여자에게는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강력 범죄 사례와 그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며 수사망을 피해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 현 시스템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범죄 예방과 해결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드러냈다. 타자화의 정도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서 이주노동의 문제가 한국 문화에 동화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주 후에도 주류층에 합류하지 못하며 낮은 계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이주노동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낮았으며 다문화의 유익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선발 및 관리 정책을 요구하였다.

(3)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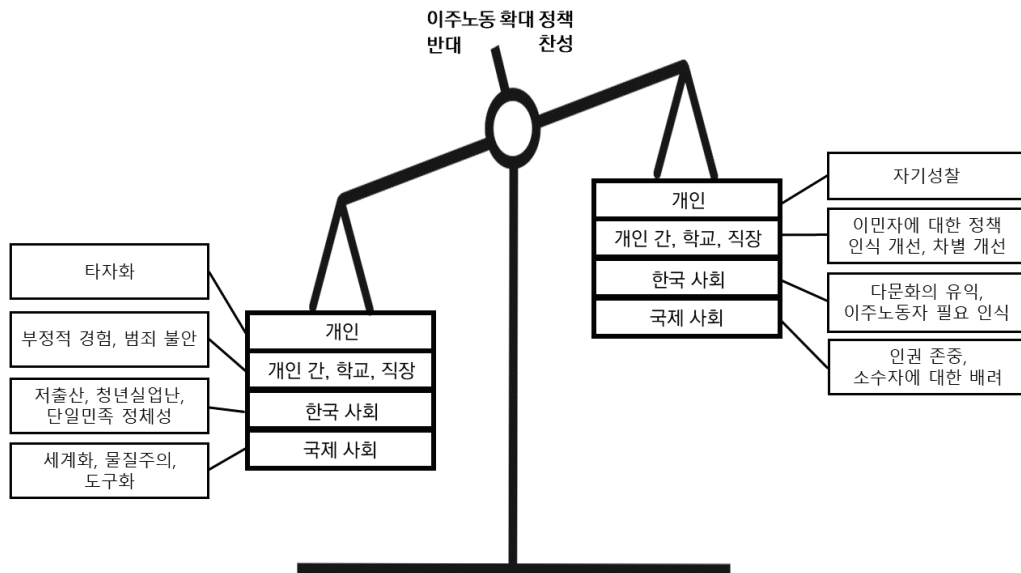
50대 남녀는 성별과 관계없이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중간 수준의 수용성을 보였다. 이들도 일상에서 외국인들 및 이주노동자들과 빈번한 접촉이 있었다. 자녀 세대에 대해 유약하고 안정을 추구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자녀 세대가 처한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50대들도 자신의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경쟁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은 불가피하고 당위적인 선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주노동 문제를 야기하는 한국인들의 잘못과 편견도 인지하고 있었다. 50대들도 현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발과 관리 체계를 정부에 주문하였다.

[표 3-4] 20대, 50대 집단의 이주노동 정책 인식 형성 과정에 대한 유형 분석

	20대 남	20대 여	50대
핵심 범주	이주노동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성 (낮음/지속적)	이주노동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성 (낮음/지속적)	이주노동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성 (중간/지속적)
인과적 조건	사회적 접촉(많음/일시적)	사회적 접촉(많음/일시적)	사회적 접촉(높음/지속적)
	긍정적 경험(많음/강함)	긍정적 경험(많음/강함)	긍정적 경험(많음/강함)
	부정적 경험(많음/강함)	부정적 경험(많음/강함)	부정적 경험(많음/강함)
맥락적 조건	역차별 인식(강함)	역차별 인식(강함)	역차별 인식(강함)
	경제적 상황 인식(심각)	경제적 상황 인식(심각)	경제적 상황 인식(심각)
	자녀 세대 인식(약함)	자녀 세대 인식(약함)	자녀 세대 인식(강함)
현상	일자리 경쟁자 인식(강함)	일자리 경쟁자 인식(강함)	일자리 경쟁자 인식(강함)
	범죄에 대한 불안(약함/일시)	범죄에 대한 불안(강함/지속)	범죄에 대한 불안(강함/지속)
중재적 조건	다문화의 유익(일부/일시)	다문화의 유익(일부/일시)	다문화의 유익(일부/일시)
	불가피성(낮음)	불가피성(낮음)	불가피성(높음)
	당위적 태도(약함)	당위적 태도(약함)	당위적 태도(중간)
전략	타자화(강함/지속적)	타자화(강함/지속적)	타자화(약함/일시적)
	자기 성찰(낮음)	자기 성찰(낮음)	자기 성찰(높음)
결과	정책 비판(강함)	정책 비판(강함)	정책 비판(중간)
	해결책 제시(강함)	해결책 제시(강함)	해결책 제시(강함)

5 상황 모형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상황 모형 단계로,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적 조건들이 다층적 차원 간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형으로 제시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상황 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이주노동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의 상황 모형

1) 국제사회 수준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인식 저변에 깔린 초국가적 배경은 세계화와 자본주의라는 흐름이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세계화는 곧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물질로 환원하는 물질주의 사조를 유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정부에 제도 국내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 활용에 집중하게 하고, 고용자 입장에서 근로 환경 및 계약 조건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점들이 누적되어 20대 청년들의

취업 의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이는 다시 이주노동자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2) 한국 사회 수준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청년의 취업난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이고 앞으로의 경제도 앞으로 저성장의 기조를 띠 예정이다.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한 50대는 현 상황은 이전 한국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독특하고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 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당장 한국 청년의 취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 등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유익도 존재한다. 하지만 20대는 정부가 이주노동 확대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저출산과 중소기업 구인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양육 환경과 근로조건의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주노동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3) 개인 간, 학교, 직장 수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는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갈등과 강력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대학교 또는 일상에서 20대, 50대 모두 국내 이주노동자와 이민자 등을 위한 우선적인 정책적 배려 때문에 본인들이 내국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고 역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확고하였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 단순직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고소득 이주노동자들도 접하게 되면서 이들이 일자리 경쟁자라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4) 개인 수준

이런 상황에서 20대 청년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타자화를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화하기를 거부하고 한국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다문화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나가도록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함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동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실적인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50대는 이민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과 한국인, 한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반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

가족 정책 FGI 결과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선행 연구

제3절 분석 결과

제 1 절

연구 배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 저출산 등의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가족 구조와 가족 가치관에 대한 변화도 같이 나타났다. 농경 사회에서는 가족이 생산, 경제, 사회화, 노인 부양 등 다양한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전담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하고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유입되면서 가족제도도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교육 기회와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자율성과 평등을 가족 내에서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면서 가부장적인 수직적 구조가 아닌 평등한 부부 관계와 친자 관계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은 그 구조나 관계 등에 있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고령 인구 증가, 이혼 증가 등이 나타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화하고 가족의 개념도 달라졌다. 그동안 결혼은 성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생활양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기에,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보편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거나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라는 위기 속에서 기존의 결혼과 가족의 개념을 대체하는 대안 가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단란한 가족으로서의 유일한 모습은 아니며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족 가치관이 등장한 것이다(정기현, 2006).

최근 들어 지속적인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는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통해 인구 감소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들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여건과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이 선택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김두섭 외, 2005).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는 가족의 범주

를 더욱 확장하고, 가족의 경계를 더욱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족 관계는 기존에 전통적 가족 관계에서 강조되었던 혈연, 부양, 효 등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반영하면서 커다란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의 가족은 특정 사회의 규범, 윤리, 의무와 같은 외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족을 구성하면서 지금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가족의 형태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러 측면에서 가족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과거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경험하였듯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변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세대 간, 남녀 간에 차별화된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가족의 개념과 변화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세대 간의 경험, 남녀 간의 주관적인 입장 차이가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담론 속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가족이 재생산의 기능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기능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사회 인식과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여성도 사회 활동과 경제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가정 내에서도 부부 관계, 부모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관계로 변모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긴밀히 맞물려 있는 가족 간 관계는 세대 간, 남녀 간의 입장 차이가 있으며, 그들이 가족을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18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미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사전 연구로 하여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연구의 대상으로 가족 정책과 관련하여 세대 간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었던 20대와 50대를 선정하여 그들 간의 가족 정책 인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20대와 50대의 세대별 가족 가치관과 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0대와 50대의 세대별 가족 가치관과 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떠한가?”

“20대 남자와 여자의 가족 가치관과 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가족 가치관에 대한 세대 간 차이, 남녀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순히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가 아닌 심층 면담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설문을 통한 양적 분석이 아닌 문화적, 경험적 배경을 기준으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인 가치의 속성을 분석하여 가족에 대한 의미와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 가치관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각 개인의 생활환경과 성장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므로 개인의 직간접 경험에 근거하여 가족관 형성, 가족제도에 대한 심층적 논의 및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제2절

선행 연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결혼에 대한 인식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 유형이 재혼 가족, 입양 가족,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무자녀 가족, 동거 가족, 동성애 가족, 공동체 가족 등 구조적 특성, 가족의 특성, 탈근대적 특성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는 전통적 가족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결혼관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결혼을 통한 가족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전통관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선희(2008)는 「서울시 미혼남녀의 일가족 생활세계와 출산의식」연구에서 서울시 거주 만 25~44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가족, 출산 의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효미 외(2016)는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연구에서 청년 미혼 남녀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 20~39세의 미혼 남녀 1,000명(유효 표본 1,07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변수정 외(2016)는 비혼 동거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1,103명을 전화 조사 하여 혼인제도 및 문화, 동거와 관련된 가치관 및 동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이들 연구는 결혼에 대한 인식, 비혼에 대한 이유 등을 검토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공선희(2008)의 연구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 남녀의 70.9%는 결혼은 가급적(57.8%) 또는 반드시 (13.1%)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66.6%, 남성의 73.8%가 결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결혼에 더 소극적인데 이는 결혼 제도가 여성에게 많은 부담(출산, 경력 단절 등)을 주고 성차별적 사회 문화에 기인한다.

둘째, 결혼 의향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나타낸다. 최효미 외(2016)은 남성의 80%, 여성의 68.9%가 결혼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의 20.0%, 여성의 31.1%가 결혼 의향이 없다(비혼)고 응답하였다. 비자발적 결혼 연기 사유에 대해 남성은 경제적 부담과 직업 불안정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경제적 부담과 이성을 만날 기회의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20대의 결혼 연기 사유를 살펴보면, 자발적인 경우는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비자발적인 경우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표 4-1] 20대의 결혼 연기 사유(1순위)

(단위:%)

		남성	여성	전체
		20~29세	20~29세	
자발적 결혼 연기 사유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	44.0	47.8	26.4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10.8	17.7	21.7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4.5	3.5	7.3
	결혼보다 일이나 자기 계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0.5	3.0	2.6
	결혼 후의 사회적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8	3.9	3.4
비자발적 결혼 연기 사유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0.9	0.0	1.5
	소득이 적어서	9.4	2.0	6.4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실업 상태라서	9.4	4.4	8.3
	경제적 부담 때문에	12.6	13.8	14.1
	결혼 생활과 직장일 병행,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0.0	1.0	0.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6.3	10.2	7.4

출처: 최효미, 2016

셋째, 비혼을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결혼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공선희(2008)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비용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10.5%),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

직, 실업 등)(9.8%), 소득이 적어서(5.3%) 등과 같이 경제적 부담과 고용의 불안정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최효미 외(2016)의 연구에서 비혼을 선택한 이유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 이후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관에 대한 인식이 비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2.8%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의 경우,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13.7%)과 기타(11.0%) 이유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표 4-2] 20대의 비혼 사유

(단위:%)

	남성	여성	전체
	20~29세	20~29세	
아무런 이유 없이 결혼이 싫어서	5.3	9.6	7.7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	28.1	35.6	33.6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22.8	6.8	14.6
직장과 가정생활을 다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5.3	4.1	4.7
자아 계발에 제약이 생기므로	3.5	4.1	2.6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가 싫어서	1.8	5.5	2.9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14.0	9.6	12.0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란 생각	15.8	13.7	16.8
기타	3.5	11.0	5.1

출처: 최효미, 2016

비혼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중 ‘비혼자는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라는 응답이 남성은 10명 중 5명이 여성은 10명중 3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4-3] 20대의 비혼에 관한 견해

(단위:%)

	남성	여성
	20~29세	20~29세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58.6	36.2
주변에서 차별과 무시를 더 당하는 것 같다	29.3	25.0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	71.1	62.7

출처: 최효미, 2016

2 동거와 출산에 대한 인식

“2030년이면 결혼 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라고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1999년 ‘21세기 사전’에서 예언했다⁴⁾. 이러한 예언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의 국가에서는 20~34세 연령의 동거 비율이 30%까지 올라가며, 이에 대해 ‘비에른베리(Björnberg)’는 스웨덴의 청년들 사이에서 동거는 결혼을 대체하기보다 불확실한 기간 동안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고 연습 시간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변수정 외(2016)에 따르면, 청년층에서 결혼 전에 동거 기간을 거치거나 결혼 대신 동거라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25~39세 1,000명을 대상으로 10년 후 일반적인 결혼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46.9%가 사실혼(동거)이 가장 일반적인 결혼 형태일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재와 같은 결혼(33.9%), 혼전 계약 결혼(9.1%) 순이었다⁵⁾.

최효미 외(2016)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혼인이라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0명 중 6명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10명 중 4~5명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동거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4) “10년 후엔 결혼보다 동거”... 우려되는 가족해체, 국민일보 2017년 1월 25일자

5) “10년 후엔 결혼보다 동거”... 우려되는 가족해체, 국민일보 2017년 1월 25일자

의 호의 정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정 외(2016)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동거 가족에 호의적이라는 응답(약간 호의적 + 매우 호의적)은 11.5%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리 사회가 동거 가족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동거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약간 반대 + 매우 반대)은 58.1%이며, 매우 반대하는 입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선희(2008)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남녀는 45.2%로 나타났으며, 미혼 5명 중 1명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22.2%)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여성(39.7%)이 남성(48.9%)보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최효미 외(2016)의 연구에서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명 중 8~9명의 여성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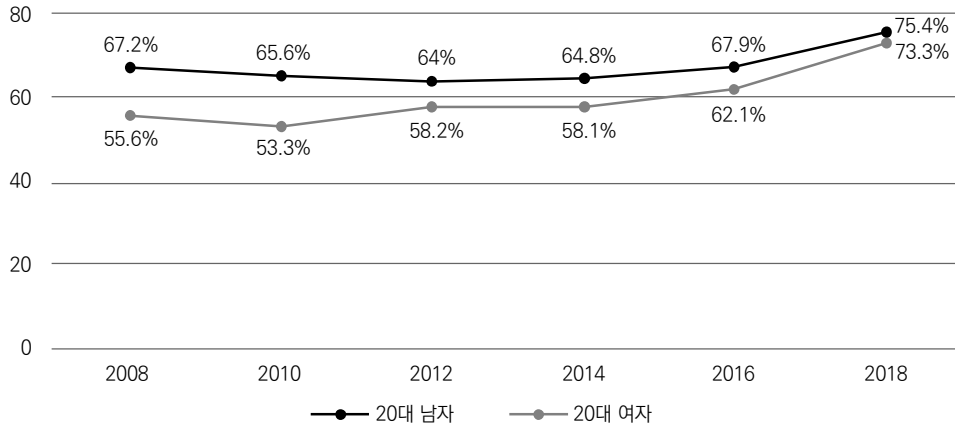
[표 4-4] 20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단위:%)

		남성	여성
		20~29세	20~29세
결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	62.9	54.3
출산	결혼했다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66.4	87.3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38.6	38.8

출처: 최효미, 2016

통계청의 사회 조사는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항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20대의 경우 긍정적 답변을 한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08년에는 20대 남성 67.2%, 20대 여성 55.6% 으로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20대 여성의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



자료: 사회조사(통계청, 2008-2018)

[그림 4-1] 20대의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동거에 대한 긍정 답변)

3 성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최효미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를 꼭 해야 한다는 질문에 20대 여성의 70.3%가 맞벌이는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 남성의 57.1%가 맞벌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맞벌이를 할 경우 집안일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의 여성이, 10명 중 8명의 남성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응답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최효미 외, 2016). 즉, 여성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며, 맞벌이를 할 경우 가사 노동은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일하는 여성에 대한 동의 정도와 동등하게 가사 노동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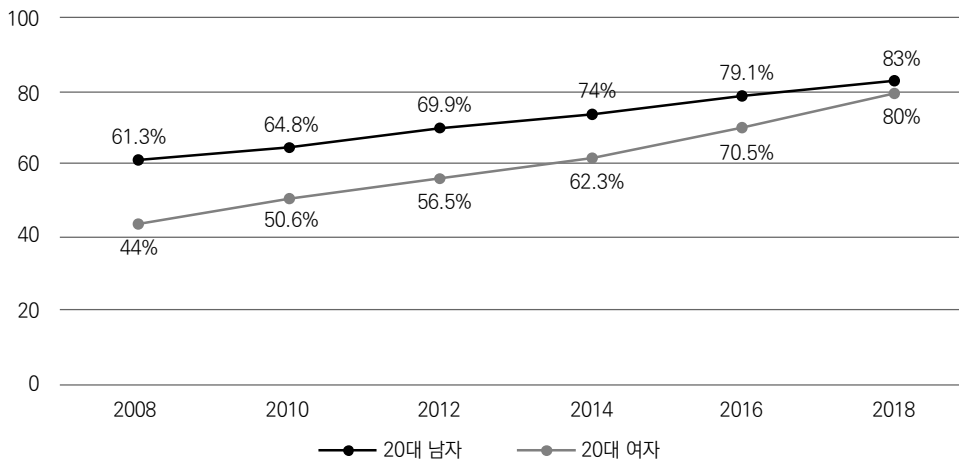
[표 4-5] 20대의 가족 내 성 역할 분담에 관한 견해

(단위:%)

	남성	여성
	20~29세	20~29세
결혼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 한다	57.1	70.3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 한다	82.9	94.6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42.5	36.6

출처: 최효미, 2016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남편과 부인의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남편과 부인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2008년에는 20대 여성의 61.3%, 20대 남성의 44%로 비교적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20대 여성의 83%, 20대 남성의 80%를 차지해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남편과 부인의 공평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20대 남성의 응답 비중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2].



자료: 사회조사(통계청, 2008-2018)

[그림 4-2] 20대의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남편과 부인의 공평한 분담 답변)

제3절 분석 결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대와 50대의 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와 20대 남녀의 가족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평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0대와 50대를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남성(6명), 20대 여성(6명), 50대 남녀(7명) 집단으로 총 19명이다. 이들은 작년에 수행한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 가족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 참여자 중 혈연 중심의 기존 가족제도를 선호하는 응답자와 새로운 가족제도의 변화를 선호하는 응답자를 적절히 혼합하여 참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20대 참여자들은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이 많았으며 그 밖에 취업 준비생, 회사원, 자영업 종사자가 포함되었다. 50대 참여자들은 전업주부, 회사원, 자영업 종사자, 전문직 등이 포함되었으며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표 4-6]과 같다.

[표 4-6]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집단	사례	연번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가족제도 다양성 강화	정치 이념 성향	가구 소득	최종 학력	출신 지역
20대 남성	A	1	남	25	서울 강북구	대학생	찬성	중도	400~600	대졸(재학)	서울
	B	2	남	23	서울 강남구	무직	찬성	중도	400~600	대졸	서울
	C	3	남	26	서울 광진구	대학생	찬성	진보	800~1000	대졸(재학)	서울
	D	4	남	23	경기 용인시	대학생	반대	보수	400~600	대졸(재학)	경기
	E	5	남	29	서울 강남구	대학생	반대	보수	400~600	대졸(재학)	서울
	F	6	남	28	경기 성남시	대학원생	반대	중도	400~600	대학원 졸업(재학)	경기
20대 여성	G	1	여	29	서울 마포구	온라인 자영업	찬성	진보	200~400	대학원 졸업(재학)	서울
	H	2	여	22	서울 마포구	대학생	찬성	진보	600~800	대졸(재학)	경기
	I	3	여	22	서울 송파구	대학생	찬성	중도	600~800	대졸(재학)	서울
	J	4	여	25	서울 성북구	사무직	찬성	진보	100~200	대졸	경북
	K	5	여	26	서울 강서구	바리스타	반대	중도	100~200	대졸	대구
	L	6	여	27	서울 서대문구	사무직	반대	보수	200~400	대졸	서울
50대	M	1	남	57	서울 마포구	전문 기술직	찬성	보수	500~800	대학원 졸업	서울
	N	2	남	54	경기 부천시	자영업	찬성	진보	400~500	대졸	전북
	O	3	남	50	서울 강남구	사무직	찬성	중도	400~500	대졸	서울
	P	4	여	51	서울 노원구	전업주부	반대	진보	500~800	대졸	서울
	Q	5	여	54	서울 은평구	전업주부	반대	진보	500~800	대졸	서울
	R	6	여	56	서울 강남구	사무직	반대	진보	500~800	대졸	대전
	S	7	남	50	서울 성북구	사무직	반대	보수	500~800	대졸	서울

2 주제 분석

가. 가족공동체의 특징

가족의 개념 및 가족공동체의 특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가족은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한 느낌을 가진다고 진술하였다. 가족은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그저 같은 지붕 아래서 생활하는 동거 또는 생활 공동체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하였다.

“가족도 하나의 집단인데,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족은 뭔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F)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가족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신경 써주는 거랑 다르게 부모님이 연락하고 면회 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게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D)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가족들한테 화내고 짜증 낼 때 정말 많아요. 가족들이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는 사과 문자 한 줄 보내는 것도 며칠을 고민하는데 가족들한테는 말로 편하게 할 수 있죠.” (I)

참여자들은 가족의 개념을 전통적으로 형성된 가족제도와 사회 구성 단위로서의 가족의 역할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하였다. 가족은 혈연과 혼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를 기본으로 구성되며, 재생산뿐 아니라 경제(생산 공동체), 사회(효, 부양)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의 기본단위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50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가족의 개념은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가족의 개념에 있어 정서적인 친밀감, 신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관습으로서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며, 특히 농경 사회에서는 생산 공동체, 부양, 효 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N)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는 가족들만의 혈연, 전통성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Q)

“가족은 공동 생산체, 저희들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게 가족끼리 협력이나 협조가 안 되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 일원이 생산에 참여하고 공동 생산체라는 느낌이 있어요” (N)

[표 4-7] 가족공동체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주제	하위 주제	해당 사례(참여자)
정서적 결속	가족의 따뜻함과 친밀성	D, F, I, L
	믿음과 신뢰	G, Q
	가족의 포용과 이해심	P
	혈연, 생산 공동체, 한술밥 먹는 사이	Q, N
유대감	경제적 공유	J, S
	동거가 곧 가족은 아님	H
전통적 가족 관계	규범적 가족 이미지	D,
	집안사람으로 뻘을 묻겠다는 강한 소속감	R
가족의 희생	돌봄, 챙겨줌	D, P

나. 전통적 가족관과 대안적 가족관

우리 사회는 전통적 가족관과 대안적 가족관이 혼재하고 있다. 가족을 보는 관점 중 전통적 가족관은 결혼, 혈연 또는 입양으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가족은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 중 하나라고 여기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가족 구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농촌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유교 문화에서 비롯한 혈연과 혼인 중심의 전통적 가족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생활해왔으며, 이는 관습이며 제도로서 지금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가족이라는 구성 자체는 처음부터 ‘누가 엄마, 아빠, 너 이렇게 해서 가족이야!’ 하고 정해준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온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거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 싶어요.” (B)

“가족은 우선 혈연, 혼인을 통해 형성된 관계이죠. 그리고 입양도 역시 가족을 형성하는 방식이구요.” (K)

현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이혼 증가, 비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다양화하면서 혼인과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대안 가족은 향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어렸을 때 유학을 가서 거기서 만난 어른들이 있는데, 피가 안 섞였더라도 챙겨주시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그런 걸 보면 마치 가족처럼 느껴져요.”(C)

“과거에는 혈연을 중시해서 무조건 혈연관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겼잖아요. 요즘은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사는 목표가 있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한집에서 살고 한 가구를 이뤄서 살고 있으면 가족이라고 해야 할 거 같아요.”(H)

“사회가 변화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옛날의 가족 개념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도 필요하고 그들도 존중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개념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N)

“미래에는 가족이라는 범위 자체가 넓어질 거 같아요.” (C)

[표 4-8] 전통적 가족관과 대안적 가족관의 혼재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주제	하위주제	해당사례(참여자)
전통적 가족관 유지	전통적(혈연 중심) 가족만의 편안함	B, I
	혼인, 입양 등 제도를 통한 가족 관계	K
	순결주의, 혼인 개념	M
	동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	R
전통적 가족관 쇠퇴	혈연관계로서의 가족 의미 쇠퇴	C, I, J
가족 유형 확장	혈연 이외의 새로운 관계를 통한 유대감 형성	C, H, S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서 파트너십 강조	J, L
	입양, 비혼 가족, 동거 커플, 독거노인 등 증가	G
	물리적 가까움보다 심리적 가까움에 기초한 가족	B, J
	시대적 흐름에 따른 새로운 가족 개념의 긍정	N

점차 대안 가족의 범주가 증가하고 대안 가족의 필요성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족제도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참여자들은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가족제도는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책임감 등에 대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뿐 아니라 대안 가족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대안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봤을 때... 결혼해서 나중에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보다 살아보고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뭔가 법적으로 묶여 있다면 조금 더 참고 넘어갔을 거를 동거라고 생각하니까 관계를 끝내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K)

“아들이 20대이고 딸도 20대라서 이해되지만 가족의 개념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필요로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게 가족의 어떤 것들을 대신할 수는 없죠” (P)

[표 4-9] 전통적 가족제도 유지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주제	하위 주제	해당 사례(참여자)
제도를 통한 가족의 책임감	결혼을 통해 가족에 대한 책임감 형성	K
	사회 발전을 위한 전통적 가족제도 유지	P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	결혼은 오래된 관습으로서의 의무 (미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	P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M, R
결혼의 긍정적 인식	결혼을 통한 심리적, 경제적 안정	I, K
다양한 가족 개념의 부정적 측면	대안 가족의 법적 보호와 의무 결여	C, K
	현 제도하에서 대안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F, P, Q, R

미혼의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는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결혼을 통한 가족을 형성할 것이라는 데에는 확신을 하지 못했다. 미혼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쉽게 결혼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 이는 미혼에 있어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비자발적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섣뚱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차별적인 사회 문화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술하였다.

20대들은 부모의 결혼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기도 하였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와 자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인정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50대 부모들 세대 역시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들이 전통적 가족 구성을 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50대 참여자들은 본인은 결혼과 출산을 하였더라도 사회적 흐름과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결혼에 있어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조언 정도만 주시고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게끔 해주시고 제 의견을 그대로 따라주셨어요. 제가 독신으로 혼자 살아도 부모님께서 제 의견을 존중해주실 거예요.”(C)

“국가적으로 보면 노동 인력 확보 등을 얘기하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출산은 개인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제 인생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주는 거 아니잖아요.”(B)

“출산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세대가 아이 포기하는 이유는 몇십 년 일을 해도 집 사기 힘들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취업하기도 힘들고....결국은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C)

“저출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기존의 가족 구성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M)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면 나는 앞으로 내 삶은 없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랑 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B)

[표 4-10]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한 회의 주제 분석 결과

주제	하위주제	해당 사례(참여자)
결혼에 대한 부담	결혼은 시간 소모, 감정 소모	H
	결혼으로 경력 단절, 사회생활 부담	C, D, E
	출산에 대한 부담	C
	성차별 사회 문화(여성에게겐 엄격, 남성에게겐 관대)	B
	출산의 개인적 의미와 국가적 의미 다름	B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결혼 과정	C, E
가족 부양자로서의 부담과 책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N, P
	감당하기 어려운 남편의 책임	O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통한 부정적 인식 형성	B, E

주제	하위주제	해당 사례(참여자)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은 선택(자녀 선택 존중)	A, Q
	자녀의 독립성과 자주성 인정	A C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혈연 중심 가족 변화	M
사회적 포용과 존중	개인의 선택 존중	R, M, N
	이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변화 필요	N, R

다.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

참여자들은 앞으로도 만혼 증가, 비혼 증가, 출산 감소, 동거 증가 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다양한 가족 유형이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확장된 가족의 범주가 가족제도로 편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20대 참여자는 동거, 비혼 등에 있어 부모와의 갈등을 예측하기도 하였지만 향후 동거, 1인 가족 등이 가족제도로 편입되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족제도로 수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대안 가족을 제도로 인정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생활공동체 가령, 주변에 동성 커플을 보면 그들은 가족처럼 생활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족과 똑같이 적용받지는 못하겠죠. 그런 면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C)

“동성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의 혼인 제도로는 그러한 현실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많으므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E)

“결혼을 안 하면 부모님께서 뭐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사실혼 관계 이런 거는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어쩌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D)

“외국에서는 동거를 해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동거를 하면서 애를 낳는 그런 경우를 못 봤거든요. 아이를 낳게 되면 동거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기보다는 결혼을 하니까... 동거하면서도 아이를 낳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그런 경우를 가족제도로 포용하게 된다면 출산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L)

[표 4-11]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주제	하위 주제	해당 사례(참여자)
가족제도 확장	다양한 가족 유형 긍정(1인 가구, 성 소수자, 미혼 부모 등)	A, B, C, E
	동거 커플, 사실혼, 동성 커플의 권리 인정(입양, 상속, 사회 서비스 등)	C, J, S
가족 보호를 위한 제도의 중요성	동거 커플의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	E, L, H, J
	법 제도의 불합리한 사례 발생	C
가족제도에 대한 세대 차이	역사적, 문화적 경험에 따른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E, N
	시대적 경험에 의한 가족제도의 인식 차이	D, E
	대안 가족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존재	D, Q

3 20대의 선호 체계 분석

앞서 설명한 주제 분석 결과를 20대와 50대의 진술을 구분하여 이를 범주화하면 [표 4-12], [표 4-13]과 같다. 20대들의 가족 가치관과 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20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통한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20대 남성은 경제적 부담과 가족 부양자로서의 책임이 큰 이유인 반면, 20대 여성은 출산과 양육 부담, 성차별 사회 문화, 경력 단절 등의 이유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에 대한 의견에 있어 20대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더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은 결혼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 등 주로 경제적 이슈를 제기한 데 비해, 20대 여성들은 결혼제도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부담(출산, 육아, 경력 단절 등)을 주며,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20대 여성들이 혼인과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미혼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느끼기도 하며, 결혼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가족제도를 여전히 지지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미혼 여성들은 미혼 남성들에 비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

며, 비혼에 있어서도 여성에게는 엄격하고 남성에게는 관대한 사회적 시선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12] 근거 자료의 범주화 정리: 20대 참여자

사례	하위 범주	범주
가족의 따뜻함과 친밀성	정서적 결속	가족공동체
믿음과 신뢰		
가족의 포용과 이해심		
경제적 공유	유대감	
동거가 곧 가족은 아님		
규범적 가족 이미지	전통적 가족 관계	
돌봄, 챙겨줌	가족의 희생	
전통적(혈연 중심) 가족만의 편안함	전통적 가족관 유지	전통적 가족관과 대안적 가족관의 혼재
혼인, 입양 등 제도를 통한 가족 관계		
혈연관계로서의 가족 의미 쇠퇴	전통적 가족관 쇠퇴	
혈연 이외의 새로운 관계를 통한 유대감 형성	가족 유형 확장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서 파트너십 강조		
혈연보다 유대에 기초한 가족		
물리적 가까움보다 심리적 가까움에 기초한 가족		
시대적 흐름에 따른 새로운 가족 개념의 긍정		
결혼을 통해 가족에 대한 책임감 형성	제도를 통한 가족의 책임감	
결혼은 오래된 관습으로서의 의무 (미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	
결혼을 통한 심리적, 경제적 안정	결혼의 긍정적 인식	
대안 가족의 법적 보호와 의무 결여	다양한 가족 개념의 부정적 측면	
현 제도하에서 대안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결혼은 시간 소모, 감정 소모	결혼에 대한 부담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한 회의
결혼으로 경력 단절, 사회생활 부담		
출산에 대한 부담		
성차별 사회 문화(여성에게겐 엄격, 남성에게겐 관대)		
출산의 개인적 의미와 국가적 의미 다름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결혼 과정		

사례	하위 범주	범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족 부양자로서의 부담과 책임	
감당하기 어려운 남편의 책임		
부모님의 결혼생활을 통한 부정적 인식 형성		
결혼은 선택(자녀 선택 존중)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제도 변화
다양한 가족 유형 긍정(1인 가구, 성 소수자, 미혼 부모 등)	가족제도 확장	
동거 커플의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	가족 보호를 위한 제도의 중요성	
법 제도의 불합리한 사례 발생		
역사적, 문화적 경험에 따른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가족제도에 대한 세대 차이	
시대적 경험에 의한 가족제도의 인식 차이		
대안 가족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존재		

혼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90년에는 4명 중 1명이 결혼을 하였다면, 2018년에는 5명중 1명이 결혼을 하고 있다. 더 이상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인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이나 결혼 문제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선희(2018) 연구에서는 여성의 66.6%, 남성의 73.8%가 결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 비교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일 2040세대 가족 가치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64.0%)은 일본 여성(32.3%)에 비해 결혼 부담감이 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또한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여성의 경우 결혼보다 본인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2040세대는 가족을 구성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가족 위험(family risk)의 진입을 의미 할 수도 있다⁶⁾. 따라서 여성들의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통계청 사회 조사에 따르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사 남녀의 가사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거나 남편이 주도하는 비율이

6) 진천자치신문(2019, 6, 14), 「한국 여성, 일본보다 '결혼·육아 부담감 크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50대의 경우 여전히 10명 중 8명은 부인이 가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남녀 가사 분담에서 평등주의에 대한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 영국의 ‘맥먼(McMunn)’ 교수는 집안일과 돌봄에 있어서 성평등은 여전히 드물고 성 규범은 여전히 강하다고 주장하며, 젠더 규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이 분야의 변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북유럽과 같이 평등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유급 육아휴직 제도와 저렴한 양육 비용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⁷⁾.

[표 4-13] 근거 자료의 범주화 정리: 50대 참여자

개념	테마(하위 범주)	테마(상위 범주)
서로 위안이 되고 보듬어주는 사이	정서적 결속	가족공동체
단란한 생활		
추억을 공유하는 공동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전통적 가족관	
농촌의 생계 공동체, 생산 공동체		
한술밥 먹는 사이, 가까운 사이 (식구)		
집안사람으로 뼈를 묻겠다는 의지(강한 소속감)		
자녀 반대하면 재혼 혼인 신고 안 함	혈연(부모-자녀) 중시	
상호 부양, 헌신	가족의 희생	
동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	전통적 가족관 유지	전통적 가족관과 대안적 가족관의 혼재
순결주의, 혼인 개념		
입양, 비혼 가족, 동거 커플, 독거 노인 등 증가	가족 유형 확장	
동일 경험을 통한 사회적 DNA 형성으로 광의의 가족개념 가능		
좋은 가족 형성을 위한 실험으로서의 동거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 동거 등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변화 필요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		
개인의 선택 존중	혼인제도	전통적 가족제도 유지
혼인은 의무와 책임 수반		
혼인 없는 가족은 윤리적 기초 붕괴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전통적 가족관	

7) “Less than 7% of couples share housework equally”, (2019.07.25).

개념	테마(하위 범주)	테마(상위 범주)
복지 확충을 통한 혼인 장려	비혼에 대한 정책 수립	전통적 가족제도의 사회적 역할
사회 발전을 위한 전통적 가족제도 유지	전통적 가족제도의 사회적 역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혈연 중심 가족 변화 필요	가족 개념 변화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한 회의
미국 등 국제적으로 가족 개념 확장 추세		
이타적 동기에 의한 배려와 나눔		
자녀의 독립성과 자주성 인정	자녀의 비혼에 대한 부모 인식	
이성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비혼		
비혼은 일자리,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적 부담	
동거 커플, 사실혼, 동성 커플의 권리 인정(입양, 상속, 사회 서비스 등)	가족제도 확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제도 변화

[표 4-13]은 50대가 제시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범주화한 것이다. 50대와 20대의 가족 인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에 대해 20대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주요 이유로 제시한 반면, 50대들은 자녀가 느끼는 개인적 부담감(경제 부담, 육아 등)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여건 변화와 전 세계적인 사회적 흐름을 제시하였다. 즉, 20대들은 개인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든 반면, 50대들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20대들은 가족제도의 확대(1인 가구, 성 소수자, 미혼 부모 등 가족제도 편입)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반면, 50대들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정책 수립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기존의 전통적 가족제도 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제도에 대한 것은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전통적 가족제도를 옹호 하는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 가족 모습에 한정되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보다 많이 오픈되어서 동성애까지 가족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법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동성애, 동거 커플 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겠지요.”(20대, C)

“국가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든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든가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경제적 이유가 크니까요.” (50대, P)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20대들의 선호 정책을 정리해보면, 20대들은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통한 가족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기존 가족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50대 참여자들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50대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가족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20대는 결혼과 출산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1인 가족, 동거 가족 등을 기존 가족제도로 편입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대들 역시 경제적 부담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못 하게 되는 경우를 제시하였기에,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0대들이 주요 가족 정책으로 비자발적 비혼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 정책을 주로 진술한 반면에, 20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 기존 가족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들을 가족제도 내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20대들은 미래에는 비자발적인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20대 남성과 여성 모두 제시한 의견으로 미래 가족 정책에서 지금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청년 정책, 예를 들어 일자리, 주거, 사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다 전향적으로 다양한 가족(동거 커플, 동성 커플, 1인 가구, 미혼부/모 등)을 수용하는 등의 가족제도로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족 형태에서 이제는 1인 가구, 미혼부/모 가족, 다문화 가구, 동성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동성 가구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조사(society at a glance) 2019’에 따르면, 2001~2014년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동성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0개국

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나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성 결혼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한층 포용적인 인식은 특히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⁸⁾.

...이러한 상황에 따라 동성 커플에 대한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성 결혼의 경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일관된 파악이 힘들며 많은 커플들이 해외에서 결혼하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는 동성 파트너십의 증가가 동성 커플의 데이터 수요로 이어졌다.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은 다양한 생활환경의 아동복지 연구, 결혼 여부에 따른 혜택의 예측과 연계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20 센서스(the 2020 census)’ 인구조사 양식을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확인란을 추가로 작성하게끔 할 예정이다. 다만 동성 결혼에 대한 질문은 인구조사 응답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사실 동성 커플을 확인하는 질문을 구성한 것은 미국 인구조사국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Cohn, 2018).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이 앞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가족을 바라보는 포용적 시선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가족의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고 미래에는 가족의 유형이 폭넓게 확장될 것이므로 인구총조사 같은 국가 통계 자료를 수집할 때 가족의 유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인구정책과 가족 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의 미래는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가족 해체나 위기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관계와 가족의 의미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역사적·문화적 맥락, 자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개인과 그들 가족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김혜영, 2010).

8) 중앙일보(2019. 4. 1), 「동성애 정당화될 수 있나? OECD 5.1점 · 日 4.8점 · 한국 2점」.

제5장

외교안보정책 FGI 결과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 1 절

연구 배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초점집단면담의 목적은 연령 집단별 정책미래 선호도의 차이가 행위자가 무엇을 상기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차이가 무엇에 기인하는지 추정해 보려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개인의 경험 차이라는 인과적 조건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라는 중심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정책미래 선호도(작용/상호작용 전략)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 의견을 형성하는 원인이 그들이 속한 세대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비롯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개인의 경험들이 어떠한 세대 맥락과 연관하여 굴절되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추정한다. 개인의 경험은 세대 위치에 따라 집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연령 집단끼리의 동년배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사회제도는 이러한 이해를 촉진한다(김선기, 2017).

개인적 경험을 결정화하는 세대 맥락(맥락적 조건)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시적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적이다. 우선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이 세대 위치의 중요한 맥락을 형성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가 고안한 개념인 집합 기억은 “같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개인들이 간직한 공통의 기억”을 일컫는데, 세대 사회학 이론에서는 정체성과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민감한 시기로 여겨지는 청소년 시기 경험한 중대한 사건이 한 세대의 집합 기억으로 오랫동안 작용한다는 논의를 해 온 바 있다(허석재, 2014).

그러나 이를 청소년기의 경험이 특정 세대에게 객관적으로 새겨져 명백한 세대 간 차이를 주형해 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사건은 과거에 발생한 것이지만 “기억하는 것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김숙현·장민지·오지영, 2013, p. 11), 과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며 현재의 맥락에 따라서 기억을 특정한 형태로 전유하려는, 기억에 대한 투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합 기억을 분석하는 것은

특정한 세대가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건이 객관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기억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가공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일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컨대 문화 콘텐츠에서 90년대를 반복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70년대생의 기억 투쟁 혹은 이들을 정치적 주체화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이화진, 2014).

그런데 이같이 집합 기억의 작용이 회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집합적 경험의 효과는 청소년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세대보다는 ‘시간 고향’의 형성이 역사적으로 더욱 충분히 이루어진 기성세대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전상진, 2017). 따라서 젊은 세대는 물론 모든 사람의 개인적 경험을 특정하게 가공하는 또 다른 맥락으로 국면(conjunctures)을 이야기할 수 있다. 국면은 “힘의 관계망과 복수적인 모순들의 결집,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헤게모니의 생성과 유지 및 재구성에 관여하는 일련의 이데올로기적 동인들의 활성화된 결합”과 같이 매우 복잡하게 정의되는 데(이기형·이종명, 2019), 이를 이번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금 단순화하여 표현하면 현재의 국제 정세, 미디어 환경, 정치적 갈등 구도 등이 미국이나 중국 등의 국가에 대한 글로벌 및 로컬 경험을 특정하도록 조건 짓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국면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국면이 세대 맥락을 형성하는 이유는 같은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면의 어떠한 지점에서 경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개인들의 경험의 차는 생애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한 제도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 세대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선기, 2017).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선행 연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통일이나 한일 관계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 조사가 주로 진행되었고 전반적인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2018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발행한 『통일외교안보 청년의식 실태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 1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지만 통일의 기대감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북한 및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은 양가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통일과 협력의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통일에 대한 현실적 기대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남남갈등과 세대갈등의 중첩 가능성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 북한 외교 문제는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386세대는 주변국인 미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역의 상관성을 보이는데 미국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고 북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386세대가 세대별 주변국 인식의 분기점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의 부상을 성장기에 목도한 젊은 세대일수록 중국에 대한 선호는 낮게 나타났다. 주변국에 대한 이러한 세대별 인식 차이가 외교·안보·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어져 남남 갈등의 핵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송샘·이재목, 2019)

신경애(2017)는 「한국 대학생의 한일 관계가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대학생 719명을 대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견해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도출하고 과거사를 둘러싼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생의 국익 고려, 미래지향적, 전략적 접근, 민족 감정을 정치적 이용 제한, 편향 외교/강경 외교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과거사 문제

를 둘러싼 일본의 주장에 대한 이해 여부와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다수의 응답자가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국익 우선의 대일 외교 방향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입장을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방법

가. 세대 연구의 의의와 한계

세대(generation)는 기본적으로 다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개념의 불분명함은 세대 연구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오히려 개념의 다의성과 양가성을 기회로 활용하여 더 나은 세대 분석을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김선기, 2017; 전상진, 2002; Kohli, 1996; Luscher, 2005/2014). 오히려 충분히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고 특정 연령대나 출생연도 단위로 모든 설명을 환원하는 연구와 담론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세대주의(generationalism)라는 개념 속에서 포착하는 논의들이 있다(김선기, 2014; Purhonen, 2016; Rauvola et al., 2018; White, 2013).

세대 현상의 복잡함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살펴볼 것은 세대 사회학을 정초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의 세대 개념이다(Mannheim, 1929/2013). 만하임은 세대 현상을 계급 현상과 마찬가지로 ‘위치 현상’이라고 설명하는데, 개인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특정한 세대 관계 내에 들어와 세대 위치(Generationslagerung)를 갖게 된다. 즉자적인 세대 위치는 세대를 세대로 묶어주는 특정한 사회적 작용을 거치면서 실제 세대(Generationenzusammenhang)로 전화한다. 만하임은 이 사회적 작용에 “공동 운명에 대한 참여”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러한 사회적 작용에는 세월호 사건, 촛불 집회, 민주화 항쟁과 같은 역사 사회적인 사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들의 경험을 구조하는 경제 상황, 기술 등의 환경적인 요소나 일상 문화의 특징이 위치할 수도 있다.

만하임의 세대 위치와 실제 세대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세대의 문제를 완전히 연령의

문제로 단순히 환원시키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혐의를 가진 세대 담론으로부터 단절하기 위해서이다. 만하임은 실제 세대가 연령 코호트 혹은 출생 코호트 전체를 모두 포괄하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역’이라는 변인을 추가한다. 예컨대, 같은 1990년대 출생의 20대라 하더라도 독일의 20대와 한국의 20대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같은 세대’라고 부르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한 국가 내에서도 예컨대 도시 출신의 20대와 농촌에서 나고 자란 20대의 특성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었으며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 지역의 경계가 덜 의미 있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새로운 분할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호모필리(homophily) 현상과 집단 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게다가 최근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community)에 관한 도시사회학, 지리학 연구들에서 보듯 심지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울타리를 치는 계급적 실천은 같은 지역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와 경험을 살아가게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물론이고 물리적 공간에서도 선택적인 접속과 단절이 용이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보통 ‘세대’라고 부르는 연령 코호트 내부의 이질성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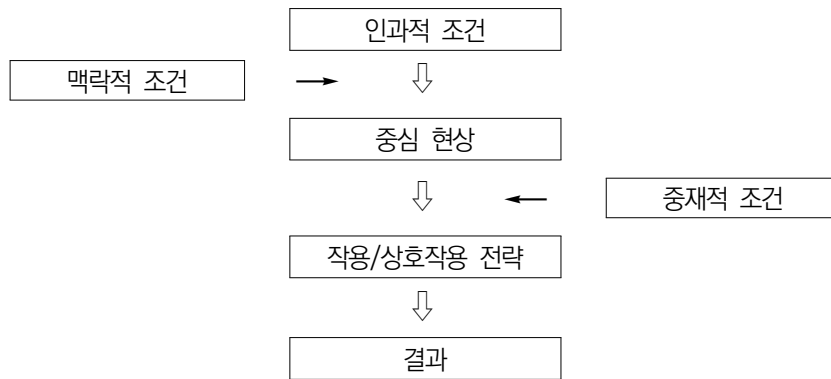
따라서 세대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연령 코호트를 세대로 해석하는 오류 위에서 각 연령 코호트 간 근본적인 차이를 찾고 코호트 내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주어진 세대 위치를 실제 세대로 형성하는, 즉 공통 운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힘이 세대 위치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취함으로써, 개인의 경험과 의견에 관한 세대의 결정력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면서도, 세대 위치가 갖는 한계적인(marginal) 결정력을 세밀하게 분석하려는 시도가 가능해진다.

나. 세대 사회학 이론에 의한 분석 방법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패러다임 모형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는 식으로 변형하였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이론을 만들 때 경험 자료를 그 근거로 하는

방법론”(윤건수, 2013, p. 168)으로, 기존 이론을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양적 연구 방법과는 다르게 경험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 귀납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직관이 가지는 힘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분석의 모든 단계에서 범주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과 이론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예감을 형성하고, 자료에 근거한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가 일어날 때까지 귀납적 사고를 반복한다. 이는 출현하는 분석 틀(emerging analytic frame)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사된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꼼꼼히 읽고 사고하는 과정과 연구자가 체화한 일정한 이론적인 분석 감각이 실제 성공적인 분석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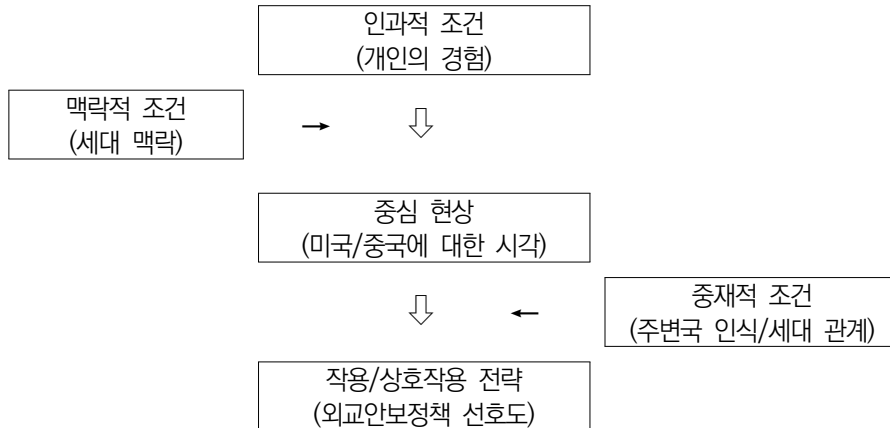


[그림 5-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근거이론은 보통 개방 코딩과 축 코딩, 선택 코딩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는 ‘스트라우스(Strauss)’가 처음 제시한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과 연관된다. 이는 “분석의 모호성을 완화하고 연구자의 인식 주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평가받는데(권향원, 2016, p. 201), 패러다임 모형은 일반적으로 (1) 중심 현상(focal phenomena), (2)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3) 맥락적 속성(attributes of the context),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5)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 and interactional strategies), (6) 결과(consequenc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근거이론 연구가 패러다임 모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축 코딩을 진행하면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에 대한 설명을 향후 이론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패러다임 모형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근거이론은 이론화(theorization)를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주제 분석이나 내용 분석, 내러티브 분석 등을 비롯한 질적 연구 방법의 다른 자료 분석 방법들과 일정한 차이를 지니며, 따라서 자료 수집과 분석, 이론은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에 놓이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p. 12).

이번 자료의 분석은 패러다임 모형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세대의 형성에 관한 세대 사회학 이론을 접목한 아래 [그림 5-2]의 분석 틀을 따르고자 한다.



[그림 5-2] 분석틀

이상의 분석 틀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서술하였다. 두 국가에 대한 인식이라는 중심 현상을 각각 다른 목차에서 다루었다. 먼저 미국에 대한 인식을, 다음으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개방 코딩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부분적인 축 코딩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두 국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정책미래 선호도로 연관되는지에 관한 개방 코딩 결과와 축 코딩 결과를 제시한다.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나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 및 세대 관계의 영향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발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상상에 대해 별도로 추가 서술하였다.

제3절 분석 결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연구 참여자

면담은 20대 남성, 20대 여성, 50대로 인구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세 그룹으로 진행하였으며, 한 집단당 6~7명씩 총 19명의 연구 참여자를 면담하였다. 각 그룹 내에서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정치이념 성향과 직업군이 최대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그룹을 설계하였다. 표집 결과 그룹별로 ‘한미일 동맹 강화’ 정책미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한 참여자들과 ‘중재자/균형자 역할’ 정책미래를 선택한 참여자들이 섞여서 집단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종 학력 면에서는 상당히 동질적인 연구 참여자들이 표집되어, 해석에 주의할 요한다. 50대 그룹의 경우 연구 참여자 전원이 대졸자인데, 1980년대 대학진학률이 35% 내외였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대학 학생 사회 내에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측면에서 50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대 그룹에 표집된 연구 참여자도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학력 측면에서 이들의 경험과 생각이 20대 전체 평균과는 일정한 괴리가 나타날 수 있음을 해석에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아래 [표 5-1]에 정리한 내용과 같다.

[표 5-1] 연구 참여자 정보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선호하는 외교안보정책	정치이념 성향	가구소득	최종 학력	출신 지역
A1	남	26	서울 마포구	취업 준비생	한미일 동맹 강화	보수	200-300	대졸	서울
A2	남	28	서울 동작구	가전제품 렌탈 영업직	한미일 동맹 강화	진보	200-300	대졸	경기
A3	남	28	서울 관악구	건축 사무직	한미일 동맹 강화	진보	300-400	대졸	서울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선호하는 외교안보정책	정치이념 성향	가구소득	최종 학력	출신 지역
A4	남	28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 정보통신 사무직	한미일 동맹 강화	보수	500-800	대졸	경북
A5	남	24	서울 서초구	서울신학대 신학과 3학년	중재자/균형자 역할	중도	500-800	대졸	대구
A6	남	28	서울 영등포구	취업준비생	중재자/균형자 역할	중도	400-500	대학원 졸업	서울
B1	여	28	서울 영등포구	철도공사 사무직	한미일 동맹 강화	중도	200-400	대졸	경북
B2	여	25	남양주시	동덕여대 일본어과 4학년	한미일 동맹 강화	진보	400-600	대졸 (재학)	경기도
B3	여	23	서울 구로구	바리스타 아르바이트	한미일 동맹 강화	보수	400-600	대졸 (재학)	서울
B4	여	25	서울 강동구	한양대 경제금융학 4학년	한미일 동맹 강화	중도	400-600	대졸 (재학)	서울
B5	여	24	서울 동작구	취업준비생	한미일 동맹 강화	진보	200-400	대졸	서울
B6	여	21	서울 구로구	동덕여대 경영학과 2학년	중재자/균형자 역할	진보	400-600	대졸 (재학)	서울
B7	여	24	서울 동작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4학년	중재자/균형자 역할	진보	800-100 0	대졸 (재학)	서울
C1	남	55	서울 영등포구	시험 관리 교육서비스 사무직	한미일 동맹 강화 ⁹⁾	보수	400-500	대졸	서울
C2	남	56	서울 강남구	잡화무역 사무직	한미일 동맹 강화	중도	500-800	대졸	서울
C3	여	50	서울 도봉구	전업주부	중재자/균형자 역할	보수	500-800	대졸	서울
C4	남	55	서울 마포구	주방용품 수출 사무직	중재자/균형자 역할	진보	300-400	대졸	서울
C5	여	52	인천시	전업주부	중재자/균형자 역할	보수	500-800	대졸	인천
C6	남	57	인천시	오피스텔 시설 관리직	중재자/균형자 역할	진보	200-300	대졸	인천

9) 연구 참여자들은 설문 조사에서 응답한 것과 다르게 막상 초점집단면담에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와 '중재자/균형자 역할'이라는 두 정책미래 사이에서 선호가 분명하게 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B1, B2, B3, B5 등의 참여자는 설문 조사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선택했으나, 막상 초점집단면담에서는 '균형자/중재자론'에 가까운 발화를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 B7은

2 미국에 대한 인식

초점집단면담 내용 중 면담 참여자들의 미국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 그러한 인식이 구성된 계기와 맥락 등과 관련한 발화들을 개방 코딩한 결과는 아래의 [표 5-2]와 같다.

[표 5-2] 미국 인식 관련한 개방 코딩 결과

범주	하위 범주	개념
개인적 경험	국내 체류 미국인 경험	지도 교수가 미국인임
		군대를 카투사에서 근무함
	글로벌 경험	장애가 있는 사촌 동생이 이민 가서 잘 적응함
		교환학생을 다녀옴
		미국 여행 경험
긍정적 인식	한국에 도움이 될 국가	미국과의 비즈니스 경험
		실리적인 국가
		청년들에게 기회와 땅임
		배울 것이 많은 국가
	초강대국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한 국가
		자원이 풍부한 국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국가
		향후에도 미국이 중국에 우위를 가질 것임
	문화적 선진국	미국 달러는 환율에 대해 통제력이 높음
		다양한 인종을 포용하려 하는 국가
		문화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
		미국인들은 예의 바름
	한국과 동질감 느낌	영어는 세계 공용어임
		한국은 서구적 가치로 변화하였음
		오랫동안 영어를 배움
부정적 인식	패권적임	미국 자본의 문화적 상품에 익숙함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국가
		외국인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반대로 '균형자/중재자론'을 선택했으나 '한미일 동맹 강화'에 가까운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C1의 경우 아예 자신이 설문 조사 때 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선택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자신의 의견을 아예 '중재자/균형자 역할'로 수정하여 못 박았다.

범주	하위 범주	개념
		미국인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극심함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고 싶어하는 국가
		베트남 전쟁을 일으킴
	인종주의가 있음	백인 우월주의가 있음
		한국을 무시함
	알고 보면 후진적	화장실 등 환경이 지저분함
	거부감	친미는 친일파의 국내 기득권 유지 수단임
	세대 맥락 (집합 기억)	대학 당시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학습함
세대 맥락 (국면)	대학에서의 학습 경험	대학에서 선배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식이 각인됨
		한미동맹 체제
	교육/지식체계	군대에서 미국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음
		창업 강의에서 실리콘 밸리를 긍정적으로 학습함
		오랫동안 영어를 배움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독립하는 데 도움을 줌

우선 참여자들은 국내 체류 미국인을 통해 미국에 관해 인식할 기회가 있었거나, 혹은 실제 미국을 여행하거나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등의 글로벌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인상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번 면담 참여자들의 경우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미국을 초강대국이자 자신을 포함한 한국에 도움이 될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화적 선진국으로 여기면서 자국인 한국과 동일시할 수 있는 동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미국을 패권적인 국가, 인종주의가 심한 국가, 알고 보면 후진적인 국가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부정적 인식도 일부 나타나기는 하였다. 각자의 미국에 관한 인식이 형성된 계기와 맥락을 추론할 수 있는 발화들은 세대 맥락이라는 범주 내에서 코딩하였다. 이중 현재의 국면과 관련된 것으로는 한미 동맹 체제와 미국 지식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육 체계가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집합 기억과 관련된 것으로는 주로 50대 참여자들이 대학에서 학회 등 비공식 지식 전수 체계를 통해 체화한 민족주의적이거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3] 연구 참여자별 미국 인식의 긍정/부정 정도

	부정		긍정
20대 남성 집단		A5	A1, A2, A3, A4, A6
20대 여성 집단	B7	B1, B2, B3, B5	B4, B6
50대 집단	C1, C4, C5, C6	C3	C2

개방 코딩은 전체 면담 참여자의 발화 내용을 묶어서 진행했으나, 사실 개개인에 따라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쪽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위의 [표 5-3]은 면담 참여자 개개인별로 미국 인식이 부정적, 긍정적 혹은 상대적으로 입장이 불분명하게, 중립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한 표이다. 이어 아래에서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라는 다른 두 중심 현상 범주가 어떠한 개인적 경험(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세대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축 코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 [그림 5-3]에서와 같이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면담 참여자들의 발화로부터 나타난 범주와 하위 범주들을 축 코딩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면담을 통해 매우 충분히 구술되지는 않은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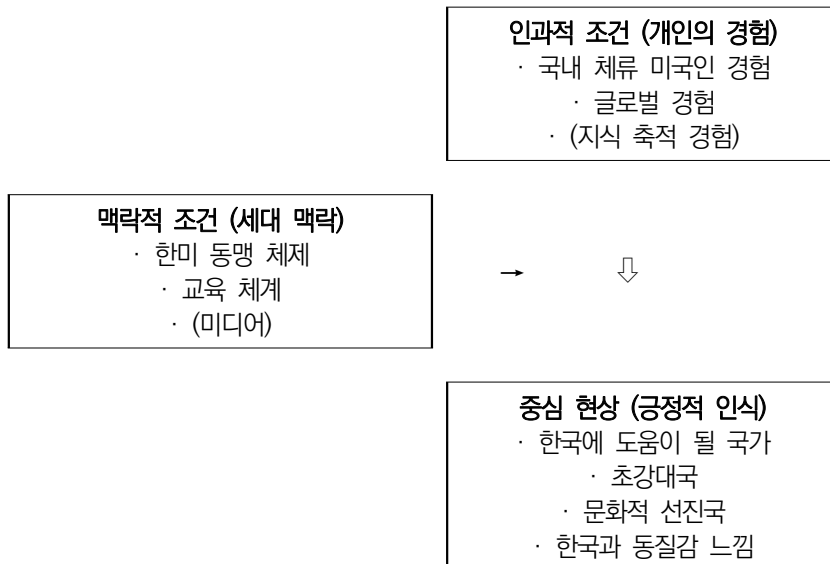
“사촌 동생이 장애가 있어서 교육 문제 때문에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애 애들은 일반 학교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미국으로 가니까 일반 학교에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학교 밖에 못 다니는데 차별도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고 포용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어요.” (B6)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미국을 갔었는데 실제 미국하고 상담할 때는 일단 논리적으로 같이 얘기가 되고 그게 주장하는 거고 그게 인도 중국을 갔을 때 개네들하고 얘기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 (C2)

미국에 대한 긍정감의 인과적 조건이 되는 개인적 경험으로는 구체적인 가족의 이민 사례(B6)나 자신이 직접 비즈니스를 한 경험(C2)을 비롯해 실제 외국인들을 만나 본 글로벌 경험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면담 참여자가 미국 땅을 밟아 보지 못했거나, 충분히 미국인과 교류한 직접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미국을 응원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한국이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B4)

위의 인용에서 보듯 미국에 대한 직접 경험 외에 미국에 관해 습득한 지식이 호불호를 조건 짓는 맥락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에 미국의 힘이 컸다’라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구성된 진리에 가까우며 이는 어쨌거나 특정한 관점을 선택하여 진리화하는 역사교육 혹은 진리화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담론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크게 한국의 교육/지식체계 내에서 본다고 할 때, 장기간 영어를 배워 미국이 더 친밀하다는 진술(A6)이나, 창업 강의를 통해 미국의 뛰어난 실감하게 되었다는 진술(A1) 등도 비슷한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맥락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면담 참여자 중에는 지도 교수가 미국인인 대학생도 있었는데(A2), 교육제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교양 있는’ 미국인을 만날 확률이 높은 것 역시 미국 대학과 학문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은 한국 지식 장이라는 조건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면담 결과 나타난 긍정적 인식과 관련한 맥락적 조건들은 특정 세대에 배타적으로 귀속되기보다는 세대를 건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많았다.



[그림 5-3] 미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긍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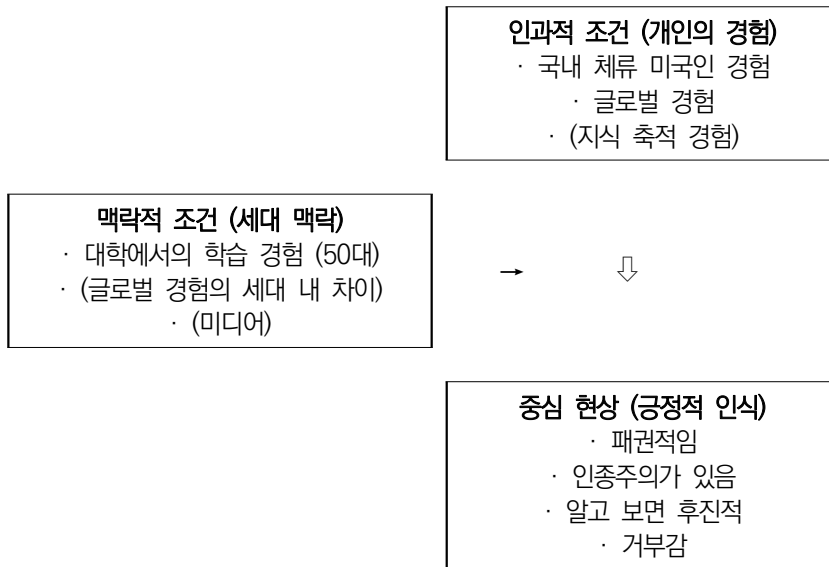
면담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을 해석하는 맥락적 조건, 혹은 개인적 경험이라는 인과적 조건 그 자체로 작용하는 중요한 범주로 미디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 사람은 스스로를 미디어로부터 과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합리적인 존재로 인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특정한 판단이 미디어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는 성찰은 면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구술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세계 중심이라면 특히 문화적으로도 제일 앞선 나라이고...” (A4)

“정서적인 거하고 마인드 같은 거는 확실히 좀 더 열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닥 그 나라 자체가 인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A3)

그러나 인용한 진술문을 살펴보면 미국인 대다수는 포용적이라거나, 문화적으로 미국이 제일 앞선 나라라거나 하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오게 된 개인의 직접적 경험이 사실은 비어 있거나 ‘내가 만나 본 사람들은 그랬다는’ 정도의 전성찰적인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은 미국에 우호적인 이미지와 담론을 생산하는 한국 미디어나 미국의 문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전시하고 소비와 욕구의 대상으로 만드는 문화/미디어 산업의 존재 역시 잠재된 맥락적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면담 참여자들 역시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아래 [그림 5-4]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면담 참여자들의 발화로부터 나타난 범주와 하위 범주들을 축 코딩한 결과다.



[그림 5-4] 미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부정적 인식)

“미국에 교환 학생 갔었는데 우월감이 확실히 있다고 느꼈어요. 미국 친구들 중에서 특히 백인 친구들이 암묵적으로 배제하고 무시하는 느낌이 있었고 겉으로는 잘 해주지만 겉 친구라는 느낌이 강했요.” (B7)

“동양인이 자기 몸에 달았다 해서 엄청 무시를 하는 거예요. ...(중략) 미국이라는 나라가 환상이 그런 데서 깨지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고 하얀 것들은 사실 좋은데 그 뒤 이면에 가보면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화장실이 말도 못 하게 지저분해요. 그 변기에 앉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했어요.” (C1)

부정적인 인식 또한 면담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인용한 진술문에서와 같이 교환학생 경험이나 미국 여행 경험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경우가 존재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은 ‘좋은 나라’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오히려 실제 경험을 통해 깨졌다는 식의 서사를 빈번히 구술했다. 여행 경험이나 미국인과의 교류 경험 등은 그 범주상에서는 유사한데 왜 누군가는 미국을 긍정적으로,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일까? 두 가지 정도의 가설을 제기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들이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관념이 이미

차이가 있어 같은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 내에서도 각각의 개인의 계층적, 젠더적 위치 등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미국 그 자체가 달랐을 가능성이다.

이를 글로벌 경험의 세대 내 차이로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앞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A1, B6 등의 20대가 가진 경험은 미국에 대한 수업을 들은 경험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 경험을 건네 듣는 등의 재현된 경험이었던 데 비해,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B7이 한 경험은 미국이라는 실체를 총체적으로 만나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이었다. 50대 내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C2는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사무직 미국인들을 자신이 경험한 미국으로 구술하고 있는데 비해, C4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시절에 만난 한국으로 파견된 직업군인과 상호작용한 경험을 주로 이야기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세대 내 경험의 차이와 인식의 차이 간의 관계에 관한 세밀한 추가 분석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 주물럭거리고 싶어 하는 나라죠. 아프리카에도 관여하고 중동에도 관여하고 아시아에도 관여하고 남미도 관여하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 문제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다 관여하는.” (C4)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81학번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갔더니 제일 먼저 전해주는 책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었어요.” (C6)

한편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미디어나 교육/지식체계, 즉 전체적인 담론 과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인용한 C4의 진술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패권주의적’인 인식도 미디어의 미국에 대한 익숙한 재현 방식의 하나와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특히 50대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맥락적 조건으로 50대가 20대이던 당시, 즉 30여 년(80년대) 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이 면담 과정에서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이때의 학습은 대학의 정식 교육을 통해 체득된 것이라기보다는 학회나 동아리, 학생회 등의 비공식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20대 초반(청소년기)에 구성한 미국에 대한 일정한 비판적인 인식은 여전히 장기 지속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당시가 이들에게 ‘시간 고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탐구해볼 여지가 있다. 한 면담 참여자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들의 세대가 “편향된 지식을 받게

된” 계기라고 구술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일정하게 왜곡되었을 수 있음을 자문하기도 했다(C1).

3 중국에 대한 인식

초점집단면담 내용 중 면담 참여자들의 중국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 그러한 인식이 구성된 계기와 맥락 등과 관련한 발화들을 개방 코딩한 결과는 아래의 [표 5-4]와 같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담 참여자들은 주로 국내 체류 중국인과의 상호 작용 경험이나 글로벌 경험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개인적 경험들을 동원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근거로 드는 방식의 서사를 구축하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과 반대로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표 5-4] 중국 인식 관련한 개방 코딩 결과

범주	하위 범주	개념
개인적 경험	국내 체류 중국인 경험	명동 관광하는 중국인들은 시끄럽고 예의가 없음
		대림 차이나타운 중국인들은 편견과 달리 친절함
		건설업 종사자 대부분은 중국인임
	글로벌 경험	중국 여행 경험
		교환학생을 다녀 옴
		서구권 교환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을 많이 만남
		중국과의 비즈니스 경험
		조카가 중국에서 대학을 나옴
		비자를 받기가 어려움
		(사드 등)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보복할 국가
부정적 인식	한국에 도움이 안 될 국가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없음
		중국 시장은 고위험(high-risk)임
		중국을 신뢰할 수 없음
		중국 학위는 영향력이 없음
		중국은 독재 국가라 예측하기가 어려움

범주	하위 범주	개념
	패권적임	동아시아부터 국제 질서를 패권적으로 구축하려 함
		중화사상 등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과도함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함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함
	전근대적임 (아직 선진국이 아님)	명·청 시기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유지함
		생활 습관이 불청결하고 냄새가 남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음
		중국은 가부장적 사회임
		중국인은 믿을 수 없음
		중국인은 자기중심적이고 비윤리적임
		합리적이지 않음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카피한 성과일 뿐임
		자기 의견이 없이 집단 의견에 동조함
		중국인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음
		빈부 격차가 극심함
		무섭고 잔인함
	한국과 이질감 느낌	한국인은 더 이상 동양적 사고를 하지 않음
		공산주의 국가임
		SNS 등을 제재하는 등 폐쇄적임
긍정적 인식	(특히 상류층은) 영리하고 친절함	선입견을 부수는 자유로운 성향의 중국인이 많음
		외국어와 글로벌 문화에 능한 중국인들도 많음
	무시할 수 없음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
		향후 더 성장할 국가
	한국과 동질감 느낌	중국이 향후 미국을 넘어설 것임
		한국인과 외모와 피부색이 유사함
세대 맥락 (국면)	미디어	역사적으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함
		중국은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음
		유튜브에서 중국 인신매매에 관한 영상을 봄
	글로벌 게임문화	미디어를 통해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짐
		한국인은 중국에 대한 편견이 많음
	사드 보복 사태	중국인이 공정한 게임 룰을 흐림
		아버지 사업이 중국으로 인해 어려워짐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유학생이 많아짐	중국인 손님은 불친절함 (아르바이트 경험)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해 봄
		중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어 봄
		조별 과제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폐를 끼침
		동아리에서 중국인 유학생과 친해짐

중국은 패권적인 데다가 아직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특히 문화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전근대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자문화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중국과 한국은 이질적이라고 정의하거나, 중국은 한국에 도움이 안 될 국가라고 의미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매우 예외적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종적으로 유사한 같은 동아시아 국가라는 데서 오는 기본적인 동질감에 기반한 긍정 인식이 있었다. 그 외에는 조건부로 중국을 긍정적으로 의미화하는 하위 범주들을 묶어낼 수 있었는데, 중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편견이 있으나 특히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상류층이 예외적으로 영리하고 친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인식이 있었으며, 현재 중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도출되는 긍정적 인식이 함께 존재했다. 주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하여 국면적인 세대 맥락 범주를 코딩할 수 있었는데, 유학생이 많아진 상황, 글로벌 게임 문화 등은 20대라는 세대 위치에서 중국인과 특정한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 교접면을 늘리면서 개인적 경험을 중요하게 맥락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드 보복 사태와 같은 최근의 시사적인 이슈도 하나의 하위 범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의 영향 부분도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표 5-5] 연구 참여자별 중국 인식의 긍정/부정 정도

	부정		긍정
20대 남성 집단	A1, A2, A3, A4, A5, A6		
20대 여성 집단	B2, B3	B1, B4, B5, B6	B7
50대 집단	C2, C5	C3	C1, C4, C6

위의 [표 5-5]는 면담 참여자 개개인별로 중국 인식이 부정적, 긍정적 혹은 상대적으로 입장이 불분명하게 중립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정리한 표이다. 20대 남성 집단에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면담 참여자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20대 남성 일반의 특성으로 당장 일반화하기보다 일단 설계된 면담 집단 특성과 면담 진행 상황에서 나타나는 집단 동조의 효과가 아닌지를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어 아래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라는 다른 두 중심 현상 범주가 어떠한 개인적 경험(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세대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축 코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 [그림 5-5]에서와 같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면담 참여자들의 진술문에서 나타난 범주와 하위 범주들을 축 코딩할 수 있다. 이들은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직접 경험이 구체적이고 풍부했는데, 이는 실제로 미국과 비교해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의 수가 많아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많다는 실제로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 다닐 때. 그중에서 친했던 형이 있었는데 중국인에 대한 특성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중략) 이런 마인드가 있다 하더라고요. 사기 한번 잘 쳐 가지고 나만 잘살면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다.” (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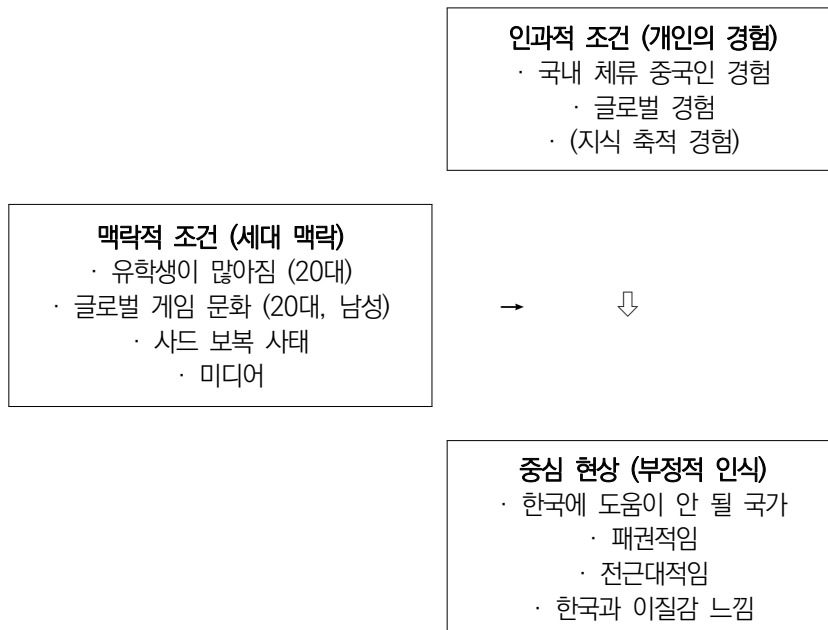
“중국은 짧게 교환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아직도 공간분들이 어디에나 대기해 있고 많이 경직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B6)

“저는 교환학생 하면서 짝이 중국인이었는데 실제 그 이미지가 맞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냄새가 많이 심했어요.” (B4)

“제가 실제로 중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느끼는 게 여기는 일단은 논리적으로 되지는 않는구나 (중략)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C2)

“제 조카나 이런 애들이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했어요. 결국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와도 별로 인정이 안 되어서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C3)

인용한 것과 같이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중국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 글로벌 경험 과정에서 직접 중국인을 만난 경험, 중국 학위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험, 비즈니스 경험 등 다양한 개인적 경험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림 5-5] 중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부정적 인식)

이런 부정적 인식의 계기가 되는 경험들은 국면적으로 맥락화하는 구조들과 결부하고 있다는 점도 면담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몇몇 부정적 인식의 계기들은 20대라는 생애 주기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특성이 있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 손님들이 많이 왔었는데 유학 올 정도면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음식 주문 같은 거 많이 해요.... (중략) 떠나갈 정도로 시끄러울 정도의 느낌도 있었고요. 욕도 하고 그래요.” (A6)

“저희 과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아요. 중국인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팀 조별 과제를 한번 수행하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거는 손도 안 대려고 하는 성향이 커서 너가 해줘 나는 할 줄 몰라 이런 친구가 많았어요.” (B3)

대표적으로 한국의 대학 정원에 못 미치도록 대학 진학률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을 대학 유지를 위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설계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중국 유학생의 급증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학사 관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만, 한국 국적 학생들이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될 개연성을 제공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인용한 A6, B3 외에도 대다수의 20대 대학생들이 중국 유학생들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다소 무분별한 중국 유학생 유치로 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유학생 외에도 관광객, 근로자 등 중국인들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경로가 광범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진술한 면담 참여자는 50대에서도 다수 있었다(C3, C5).

“인기 있는 게임이었거든요. 그 게임이 한순간 갑자기 사라졌는데 회사 측에서 중국인 때문에 보게 되었거든요. 중국인 유저가 유입되면서 게임이 망했거든요.” (A4)

다소 새로운 맥락으로 20대 남성 집단에서 게임 이용 경험 과정에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품게 되었다는 진술이 복수의 참여자로부터 나왔다. (물론 게임은 20대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다른 세대나 여성도 이용하는 것이지만) 20대 남성이 몰입하고 있는 여가 문화인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중국인 부자들이 ‘현질(현금 구매)’을 통해 평범한 한국인 게임 유저의 재미를 떨어뜨리고, 윤리적이지 않은 해킹을 통해서 게임의 공정함을 해친다는 인식이다. 실제 그러한 ‘부정적 행동’을 하는 게임 유저들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만, ‘중공군’이나 ‘짱개’ 등의 멸칭과 함께 그들이 중국인일 것으로 특정되곤 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사실로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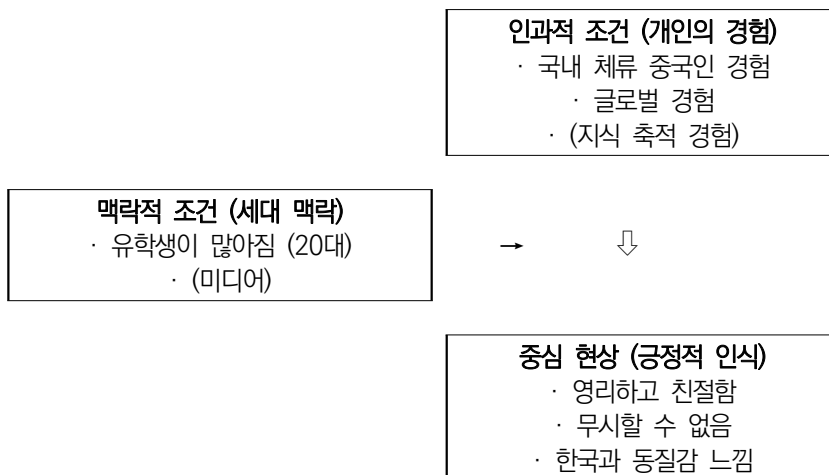
“시골에서 인신매매가 정말 많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게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봤는데 갑자기 아이를 납치해 가는 설정을 20번 해봤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그걸 보면서 중국은 도시에 대한 얘기하고 중국도 빈부

격차가 큰 나라이잖아요.” (B2)

“아버지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사드 이후로 타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전을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이전을 이미 한 걸로 아는데 인건비가 중국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공장으로만 봤을 때는.” (A5)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미디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인용한 B2의 진술문은 유튜브에서 중국에 대한 ‘괴담’을 보고 중국의 후진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역으로 뒤집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냄새날 것 같다’, ‘이기적이다’ 따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단지 미디어가 조장한 편견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한 참여자도 있었다(B7). 한편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는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가 여전히 담론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인 특성상 사드 보복 사태 그 자체가 하나의 하위 범주로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었다. 세 집단 모두에서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고위험 국가로 보는 인식이 나타났고, 그러한 인식의 근거로 사드 보복의 예가 쉽게 제시되었다.

아래 [그림 5-6]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면담 참여자들의 발화로부터 나타난 범주와 하위 범주들을 축 코딩한 결과다.



[그림 5-6] 중국 인식 관련한 축 코딩 결과 (긍정적 인식)

“유학 온 애들이 중국 애들 엄청 많아요. 걔들 만나 보면 둘 중의 하나예요. 아주 똑똑하거나 부잣집 애들이예요. 얘기를 안 하면 한국 애인지 중국 애인지 모를 정도로 똑똑한 애가 있는가 하면.” (C4)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다녀서 똑똑하더라고요. 3개 국어 하니까 똑똑하고 무례하다고 못 받았어요. 요리도 잘해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해 주기도 하고 차이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을 많이 다닌 중국인들은 안 그런 거 같기는 해요.” (B5)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주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선입견이 깨진 사건의 서사로 이야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용문에서 보여주듯이, “한국 애인지 중국 애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인만큼 똑똑한 중국인들이 있거나 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 중에서도 예외가 있다는 방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전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들이 주로 집단 인터뷰 상황에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발화되었을 때 그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것이라는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중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성장세로 인해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구술하기도 했다.

“사는 동네 근처에 대림 쪽이라서 중국인이 많았어요. 이미지가 무섭고 별로 중국 가기 전까지 무서웠는데 막상 제가 있었을 때 북경 중국인들이 생각보다 잘 해 주시고 제가 서둘러 길 물어보고 그래도 다들 친절하게 알려 주려고 하고.” (B6)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학을 왔는데 그 전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예의 잘 지키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는 모습을 봤고 그분으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B1)

앞서 부정적 인식의 세대 맥락적 조건으로 20대가 중국인 유학생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이 사실은 역으로 20대가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인용한 진술문에서 보듯, 이러한 인식 역시 부정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긍정적이었던 경험의 서사 위에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외모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동질감(B1, B6)이나 문화적 근

접성(C1, C6)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부분은 미디어나 지식 체계의 영향력이 숨은 맥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다소 예외적으로 면담 참여자 C6은 자신의 역사 학습 경험과 그를 통해 얻었다고 주장되는 통찰을 토대로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를 지배한 적이 없다는 견해를 반복하면서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게도 유리하다는 방식으로 구술하기도 했다.

4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입장

초점집단면담 내용 중 인터뷰 참여자들의 정책미래 선호도 자체와 이러한 선호의 근거로 맥락화한 진술문들을 개방 코딩한 결과는 아래의 [표 5-6]과 같다.

[표 5-6] 정책미래 선호 관련한 개방 코딩 결과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정책미래 선호	중재자/ 균형자 역할	중국 긍정	중국과 미국은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국임
			중국은 성장세에 있는 국가이므로 무시할 수 없음
		한국 역량	교민들을 위해 대중 및 대북 관계를 잘 다져야 함
			작은 나라일수록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 함
	실리적으로 행동해야 함	미국 부정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춰야 함
			한미 동맹은 종속적인 관계임
			중국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는 해야 함
			자국의 안보력을 높여야 함
	한미일 동맹 강화	중국 부정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없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음
			중국은 한국을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음
			중국과 협력 시 중국에 종속될 수 있음
			중국은 예측이 불가능함
		한국 역량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할 능력이 없어 비현실적임
		미국 긍정	영어는 세계 공용어임
			미국은 환율에 대해 통제력이 높음
			미국은 한국에게 크게 보복한 전례가 없음
			미국은 경제 호황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주변국 인식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인식	한미일 동맹은 일본 때문에 어려움
		일본 수출 제한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줌
		역사적으로 일본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음
		일본을 싫어함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일본과는 동맹을 맺을 수 없음
		일본의 경제가 회복 단계에 있어 한국에 이득이 될 것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	북한과 남한은 다른 나라임
		통일을 원하지 않음
한국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인식	대북 관계는 우호적이 되어야 한국에도 이득임
		남북 평화가 달성되어야 독립적인 국력을 강화 가능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북한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그나마 중요하게 생각함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미국이 큼
		북한과 대등하기 위해서 미국의 힘이 필요함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인식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국가
		한국은 핵이 없음
세대 관계 인식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한국은 미국에 과하게 의존적임
		현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최선의 선택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지지하지 않음
		현 정부의 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
		현 정부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무능함
		50대는 정부 핵심 지지층임
	50대에 대한 인식	50~60대의 이해관계 위주로 국내 정책이 결정됨
		20~30대와 50~60대는 이해관계가 다름
세대 관계 인식	20대에 대한 인식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한국인은 50~60대임
		20대는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음
	20대에 대한 인식	20대는 실리적인 세대임
		북한을 타국으로 생각하는 20대의 역사 인식은 문제임

기본적으로 정책미래 선호 범주에 대한 하위 범주는 정책미래 선호 조사에서 나눈 유목대로 ‘한미일 동맹 강화’와 ‘중재자/균형자 역할’로 나누었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서의 정책미래 선호에는 앞서 두 절에서 살핀 중심 현상인 미국과 중국 각각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정책미래 선호는 주로 선호의 이

유와 직접적으로 결합된 상태로 언급되었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국의 국가적 역량에 대한 판단 등을 담고 있는 개념은 그 자체가 정책미래 선호가 어느 쪽인지를 보여주므로 정책미래 선호와 관련된 하위 범주로 바로 묶었다.

‘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이 하위 범주는 면담 참여자들의 발화 맥락에서 보면 다른 두 하위 범주 각각을 상황에 따라 논리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실리적이어야 하기에 미국과 더 친한 편이 좋다거나, 반대로 실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식이다. 개념을 도출하고 하위 범주들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일본, 북한 등 주변국에 대한 인식,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갖는 위치에 대한 인식, 정부 및 다른 세대에 대한 정치적 인식 등이 정책미래 선호를 더욱 확실하게 하거나 역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중재적 조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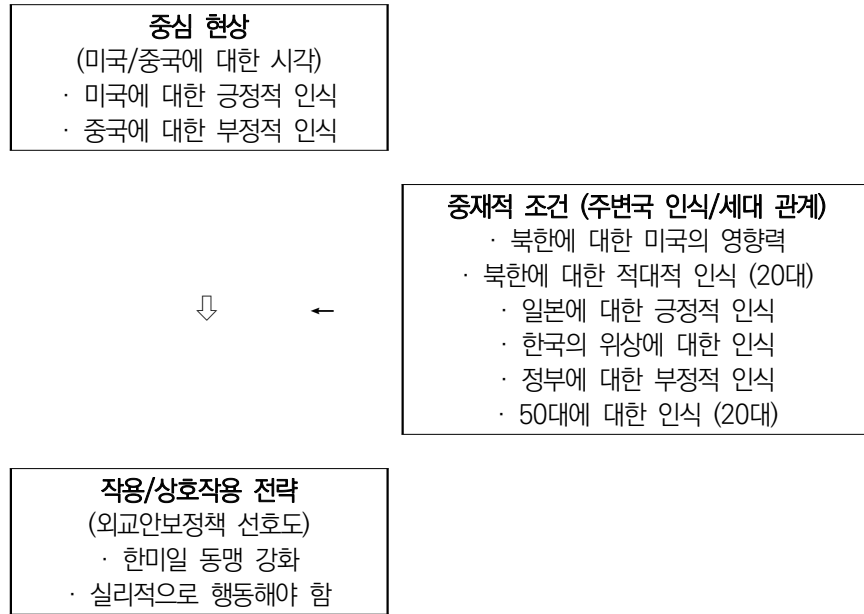
[표 5-7] 연구 참여자별 정책미래 선호 정도

	균형자/중재자 역할		한미일 동맹 강화
20대 남성 집단	A5, A6		A1, A2, A3, A4
20대 여성 집단		B2, B5, B7	B1, B3, B4, B6
50대 집단	C1, C3, C4, C5, C6		C2

위의 [표 5-7]은 연구 참여자별 정책미래 선호 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는 개별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 조사에서 응답한 것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컨대 C1은 스스로 자신이 ‘한미일 동맹 강화’를 선택했던 것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20대 여성 집단의 경우 최초에는 B6, B7가 ‘중재자/균형자 역할’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나 막상 집단 인터뷰 과정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실제 정책미래 선호와는 별도로 인터뷰 설계와 집단 압력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로 분류한 연구 참여자 중에서도 중국을 섭섭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식의 진술을 반복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

아래 [그림 5-7]과 [그림 5-8]은 정책미래 선호와 관련하여 도출된 범주와 하위 범주를 한미일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쪽과 중재자/균형자론을 선호하는 쪽 각각에 맞추어

축 코딩한 결과이다. 미국/중국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정책미래 선호로 이어지는 인과적 고리와 주변국 인식, 세대 관계 인식, 정부 평가 등이 중재적 조건이 각각의 축 코딩 내용에 드러났다.



[그림 5-7] 정책미래 선호 관련한 축 코딩 결과 (한미일 동맹 강화 선호)

“저는 일단 미국과 좀 더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과 적대적인 그런 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저희는 분단국가이고 북한에 우호적인 쪽이 중국이고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B7)

“우리나라는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붙는 게 안전하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과 안보 쪽으로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B6)

“우리가 중재를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안 뜰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중재자라고 외쳐봤자 그거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C2)

주변국 인식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을 우호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한다

는 진술이 여러 면담 참여자들에게서 등장했다. 또한 한국의 국력이 중재자/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판단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주변국 정세 인식은 중재자/균형자 역할이 실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하며, 한미일 동맹 강화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이 조정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을 적국으로 보거나 최소한 같은 국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은 20대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를 세대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연구가 이루어진 기간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한 내용이 막 의제화되었던 시점이라 ‘한미일 동맹’이라는 정책미래에 일본이 끼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참여자들이 많았는데, 이때 일본은 제외하더라도 미국과 관계는 돈독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로 내놓았다. 소수 의견으로 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 사정상 한국인과 중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해를 끼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B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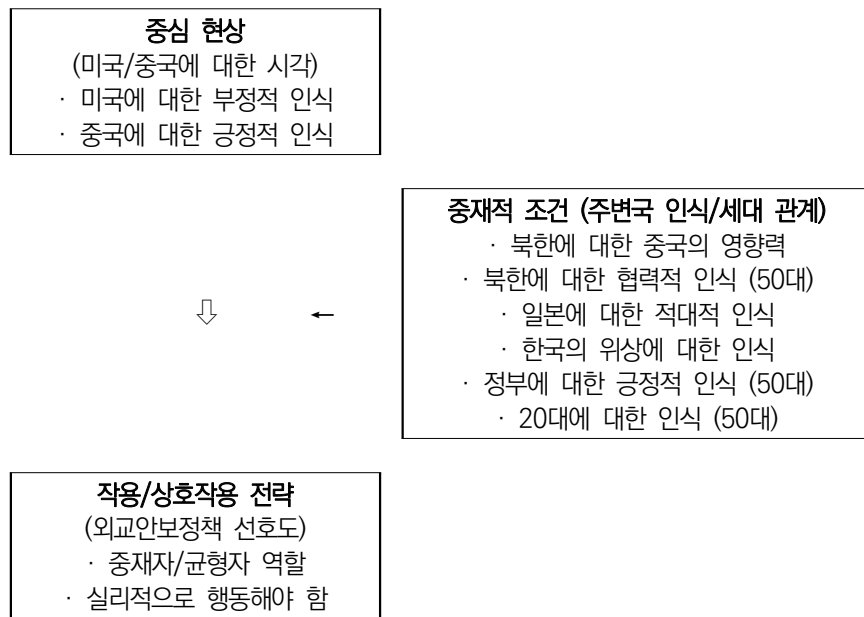
“저는 거기에 국내적인 상황도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개방하면서 거기에 공장이 나 진출했던 게 지금 5,60대 선생님들이고 기득권층이 어찌 되었건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부담 때문에 이런 분들의 구미에 맞춰서 자꾸 정책이 흘러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중략) 그런 데에서 20대는 기성세대에 반감을 가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A2)

“30대 40대 50대는 중국하고 사업하고 있는 게 많고 경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60대 나이는 과거에도 명예퇴직 준비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표출하는 건데 상관있나.” (A1)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정부에서 북한 정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20대 아닌가 싶어요.” (B3)

한편 정책미래 선호와 밀접히 연관된 다른 중재적 조건으로 국내 정치 상황과 연관하여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세대 관계에 대한 인식이 결합하고 있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일부 20대 면담 참여자들은 중국이나 북한에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는 정부가 50~60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20대의 취업 문제나 국내 경제 사정을 외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미래가 한미일 동맹 강화 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스스로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20대와 기성세대의 이해

관계는 상충된다는 언술을 동원하기도 했다(A2). 여기서 ‘문재인 정부 - 진보 - 5~60대(기성세대) - 중국 - 북한’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존재함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현 정부 반대 - 보수 - 20대 - 미국 -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정책미래 선호와 관련한 수사로 쓰이고 있다.



[그림 5-8] 정책미래 선호 관련한 축 코딩 결과 (중재자/균형자 역할 선호)

“한미일에서 일을 생각해야 할까라는 건데요. 일단은 요즘 취하는 행보 뉴스만 봐도 아시겠지만 거의 정치인들끼리 전쟁급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중략) 한미일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게 가능한가부터가 의문이었고.” (A5)

“북한이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태세가 변했을 때 중국이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북한 쪽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미국 한 편만 드는 거보다 중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A6)

“제가 보수라고 하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엄청 싫어합니다. 일본을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일본을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왜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C1)

주변국 인식 중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북한에 대한 고려가 주요한 중재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인용문 중 A5는 일본에 대한 불신, A6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중국보다 미국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것으로 볼 때, A5와 A6에 있어서 주변국 인식이라는 중재적 조건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여 정책미래 선호를 아예 뒤바꾼 것으로도 볼 수 있다. C1은 스스로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바 있으며, 설문 조사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 정책미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집단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선호를 정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C1에게도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라는 중재적 조건이 큰 결정력을 가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그래도 우호적으로 되어야지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민들이 편하게 살 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북한이 그 중재자 역할을 잘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C3)

한편 북한에 대한 협력적인 인식이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대한 선호를 부정적으로 중재하기도 했다. C3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편인데, 다만 스스로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과의 협력적 관계 혹은 한민족 의식에 기반하여 중재자/균형자 역할 쪽을 더 선호하는 발화를 보여주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집단면담 연구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인식이라는 하위 범주와 연관된 개념은 50대 집단에서만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20대 집단에서 북한을 고려하는 진술이 나왔을 때 이는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나 동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분단 상황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하는 정도였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지금 현재 문제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그런데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C1)

“토론회 자체가 그렇고 말씀드린 게 20대들 의견 중에서 북한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인식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역사 인식이 완전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C6)

“20대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C4)

국내의 정치 상황 및 세대 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주로 50대 집단에서 현 정부가 외교정책을 잘 펴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났고, 20대 집단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졌다. 20대의 생각이 “근시안적”이라거나(C1), “분단 시대를 같이 살아낸” 50대와 그렇지 않은 20대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C6).

역으로 20대 여성 집단에서는 한국의 미국의존도 과잉을 우려하는 개념이 도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정책미래를 선호하는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국가의 독립적인 지위를 고려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잉되는 것을 우려하는 언급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선호를 아예 바뀔 수 없는 못했지만, 중재자/균형자 역할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하는 등의 중재 효과를 내고 있다. 주로 미국에의 의존이 기성세대와 보수의 유산으로 여겨지며 특히 최근의 ‘태극기 집회’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추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진술문에서 나타나는 세대주의의 활용

영국의 사회학자 ‘조너선 화이트(Jonathan White)’는 세대주의(generationalism) 개념을 “정치가, 대중적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이 세대의 중심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문제들을 세대의 개념으로 풀어 이야기하는 현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White, 2013). 그런데 이러한 개념 설정은 마치 세대주의가 사회 구성원이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상이 아니라, 상징적인 권위를 가진 특정 계층에 의해 ‘조작’되는 이데올로기인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실제 전자의 설명이 더 적합할 만큼 일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세대의 중심성’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는 일상의 발화는 셀 수 없이 많다.

사회학자 ‘카렌 포스터(Karen Foster)’는 실증 연구를 통해 세대주의가 일상 행위자들에게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화되는지를 밝힌 바 있다(Foster, 2013). 연구자가 세대

(generation)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1:1 면담에서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이 단어와 개념을 스스로 동원하여 다종한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많은 응답자들은 직장 내 여성 비율이 늘어나게 된 오늘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여성운동의 역사 대신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은 다르다’는 말을 동원하였다.

이번 초점집단면담의 녹취록을 확인했을 때도 면담 참여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사로서 ‘세대 내러티브’를 동원하는 현상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개인의 차이일 수 있는 것을 세대의 차이로 환원시키거나, 자신 개인의 의견을 세대 전반의 의견으로 포장하는 발화가 무의식적인 전략으로 돌출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는 앞의 3절에서도 세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책미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으로 범주화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정책미래 선호와 관련한 전체 축 코딩에서는 약간 벗어났지만, 세대주의적인 발화로서 유의미한 면담 내용들에 관해 조금 더 다루고자 한다.

“20대들이 이런 의견을 내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정책이라든지 북한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그게 사실상 그게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20대는 생각해요.” (B2)

대표적으로 위에 인용한 B2의 발화는 개인의 의견일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20대 전체’의 의견으로 임의적으로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개인의 의견 발화는 조금 더 상징적인 정당성을 얻게 된다.

또한 외교안보정책이나 미국, 중국 등 국가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날 때 이것이 개인의 차이일 수 있는데, 세대의 차이로 변환되어 발화되는 일이 잦았다. 물론 이러한 발화가 나오게 된 중요한 까닭은 연구 설계 및 초점집단면담의 진행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연구 자체가 통계 분석 결과 드러난 20대와 50대 사이의 평균 차이, 20대와 60대 사이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이러한 연구 설계 자체가 초점집단면담 진행자에 의해서 면담 참여자들에게 인지되었기 때문이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적 협력을 가지면 광물 자원을 우리나라가 이용을 할 때 어마어

마한 경제적인 효과가 된다, 그런 맥락으로 저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멀리 보면 그런 게 보일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1)

위 인용에서 나타난 C1의 발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20대와 50대 사이의 세대별 의견 차이를 주어진 것(given)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제 위에서 발화하곤 하였다. 조금 더 나아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것으로 발화된 ‘다른 세대’의 여러 가지 특성을 평가절하함으로써 ‘자기 세대’의 발화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위치 짓는 방식의 발화가 여러 차례 나타났다.

“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인할 수 있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20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볼 수 있는데 3, 4, 50대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인터넷 없었고 신문하고 뉴스 보는 세대인데 정치에 따라서 뉴스나 신문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게 학습된 거 같아요.” (A1)

“저는 여기에 반대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50대이고 저랑 성향이 반대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정보 습득 똑같이 하시는 거 같아요. 차이가 나는 거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방식이 20대는 좀 더 합리성을 중요시해서 계산해서 가려고 한다면 저희 윗세대는 감수성이 풍부해야 하나, 나이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시고 해 가지고 둥글게 둥글게라는 것도 계시고.” (A2)

“약간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20대들은 효율성을 고려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세대보다 많이 배우고 오히려 효율성을 고려해서 한미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B4)

20대인 A1과 A2의 발화는 20대와 다른 세대(30, 40, 50대)의 차이를 집어내면서 그 차이를 자신들 세대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차이의 내용은 서로 다르고, 상당히 임의적임을 알 수 있다. A1은 기성 언론에서 만든 정보를 그대로 믿는 30~50대와 달리 20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A2는 그러한 매체

이용 격차 가설을 기각하면서 오히려 코호트적으로 20대가 ‘이성적’인 반면, 50대가 ‘감성적’이라는 방식의 다른 가설을 제시한다.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로 ‘격하’시키는 방식의 말하기나 상상은 특정한 집단을 타자화하는 발화에서 언제나 반복되어 나타나 왔던 매우 익숙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B4의 발화 역시 ‘다른 세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0대를 세대로 잡아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이 잘못된 기사를 만들어서 그 정도 판단 능력은 50대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에 많기 때문에 아무리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C6)

“저 같은 경우는 60대 분들과하고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서로 나이 먹어서 언쟁하기 싫으니까 피해요. 극한대 안 하려고 자기 색 얘기하면 피하고 하는데 딱 한 마디예요. 공산주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빨갱이 이렇게 나와요. 60대 쪽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어서 아무리 좀 더 많이,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쉽게 그 사람들하고 그런 거 갖고 언쟁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C1)

“50대만 봐도 정당 논리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C2)

20대뿐만 아니라 50대 면담 참여자 역시 자신들 세대를 윗세대인 60대와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위치에 두는 발언을 반복하였다. 위 인용한 C6, C1, C2의 발화를 보면, 이들은 60대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적고’, 생각이 ‘절대 안 바뀌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와 달리 50대는 합리적이고 판단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6장

미래정책연구를 위한 시사점

제1절 미래정책연구를 위한 질문

제2절 노동이민·가족·미중 인식의 미래와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시사점 정리

제 1절

미래정책연구를 위한 질문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연구 질문

이민 분야의 면담 내용을 보면 20대와 50대가 노동이민자의 확대라는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예컨대 20대 여성의 경우 외국인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50대는 저숙련 분야에서 외국인의 일자리 대체 효과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런 논의들은 앞 장에서 자세하게 거론했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않는다.

미래연구자의 시각에서 이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경제성장의 지속 여부와 사회의 개방성/폐쇄성 여부에 따라 노동이민 정책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민 분야에서 미래연구의 질문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과 사회개방성에 따라 노동이민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둘째, 가족 정책 분야에서 면담 자료를 보면 성 역할 논란, 경제적 부담, 경력 단절의 우려, 자기 계발 시간의 부족, 가족 부양의 부담, 출산 부담 등이 불안의 요소로 거론하고 있다. 정책적 시각에서 이들의 얘기를 재해석해보면, 양성평등, 다문화, 탈가족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연대의 대립,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을 통해 경제구조의 변화까지 포괄할 수 있겠다.

미래연구자의 시각에서 가족 정책을 둘러싼 여러 변인 중 두 가지의 큰 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 중시냐 공동체의 연대 중시냐로 잡을 수 있다. 이 방향에 따라 예를 들면 1인 가족의 확대가 지속될 것인지, 유사 가족이나 탈가족이 증가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다. 또 다른 축은 경제 시스템의 변화로 잡으면 적절할 것 같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족 정책의 미래를 예측하자면,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보는 편이 좋다.

앞서 언급한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가 그 예인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

전에 따라 인간의 일이 급속도로 대체될 경우, 노동정책은 물론 가족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연말정산에서 자녀 부양이 있는 노동자는 세금 혜택을 받는데, 이는 전통적 경제 관념에서 자녀들을 노동 가능 인구로 보기 때문이다. 노동 가능 인구를 양육하는 것은 장차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에 세금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경우, 이런 혜택을 지속해야 할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2가지의 축을 고려해 가족 정책 분야의 미래연구 질문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자유가 더욱 증시될수록 급격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 상황에서 가족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정책은 다소 미래연구의 주제로 삼기에 애매하다. 이 분야의 미래를 예측하자면 미시적, 거시적 환경 변화를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여기에 관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도 분석해야 한다. 게다가 이해 관계자들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장에서 다룰 미래연구의 주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친밀도 예측 정도로 잡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특히, 미래에 사회의 주축이 될 20대가 앞으로 미국을 더 친근하게 생각할 것인지, 중국을 더 친근하게 생각할지는 궁금한 주제다. 미래연구 질문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의 협력이 강화되고,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로 간다면 20대는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을 미국만큼 친밀하게 생각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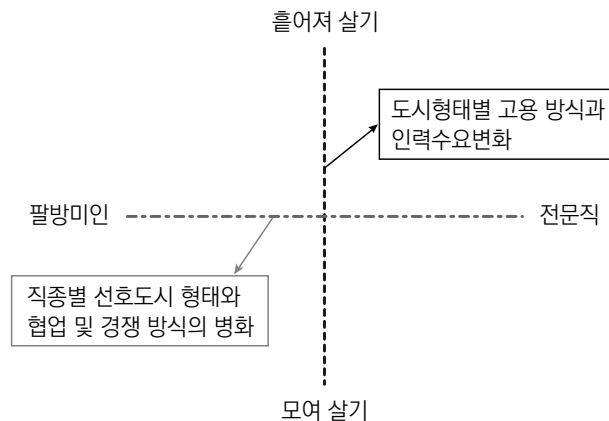
2 연구 방법론

앞서 제기한 3가지 연구 문제는 시나리오 방법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은 현재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징조, 징후를 이해하는 방법론이다. 현재의 추세를 멈추게 하는 요인,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질 요인, 현재의 전략에서 놓치고 있는 요인들을 담아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미래 시나리오는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씨앗 아이디어, 구체적인 전략과 변화의 방향이 기술되어 있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

여러 시나리오 방법론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 변수 축을 설정해 4가지의 다른 미래적 상황을 예측하기로 하자. 2×2 시나리오로 불리는 이 방법론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질문에는 두 가지 축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예측하고자 하는 핵심적 변수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는 감소할까, 환경오염은 완화될까, 과학기술은 안전하게 개발될까처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인이 드러나야 한다. 이 질문에는 증가, 감소, 강화, 약화 등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예측하려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인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보고, 그다음에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대도시에서 살게 될까라는 질문보다는 우리는 대도시에 모여살까, 작은 도시나 마을 중심으로 흩어져 살까처럼 구체적이고, 변화의 양방향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대도시의 삶은 편리를, 중소도시나 마을에서의 삶은 신뢰나 건강 등의 배타적인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대도시의 삶과 중소도시의 삶이 한 축을 구성한다면 또 다른 축이 있어야 4분면의 미래가 만들어진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질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사는 것이 유리할까, 중소도시에서 사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질문을 들 수 있다. 반대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사는 것이 유리할까, 중소도시에서 사는 것이 유리할까 질문할 수 있다. 여기서 드러난 두 번째 축은 전문직이냐 일반직이냐로 볼 수 있다.



[그림 6-1] 미래 시나리오에서 불확실한 요인을 나타낸 가로, 세로축 변수들

[그림 6-1]에서 보듯 대도시에서 살기(모여살기), 중소도시와 마을에서 살기(흩어져 살기)라는 축과 전문직이나 일반직(팔방미인)이라는 축을 교차해 4분면의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박성원, 2019).¹⁰⁾ 이 4분면에서 예측하고 싶은 주제는 그림의 네모 상자에서 나타난 ‘도시 형태별 고용 방식과 인력 수요의 변화’ 그리고 ‘직종별 선호 도시 형태와 협업 및 경쟁 방식의 변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질문은 현재로선 전례를 찾기 힘든, 예측하기 힘든 질문이다. 그래서 미래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다.

다음 절에서는 노동이민, 가족, 외교안보 분야에서 설정한 질문을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으로 예측하기로 하자.

10) 박성원(2019), 『미래공부』, 글항아리.

제2절

노동이민·가족·미중 인식의 미래와 정책적 시사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노동이민의 미래와 정책적 시사점

2019년 초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정책미래선호 설문조사」에서 노동이민 정책의 확대에 대해 물었을 때, 20대는 반대했다(54%). 전체 의견은 노동이민 확대에 찬성이었으나 51%에 불과했다. 매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분야였다. 눈에 띄는 점은 20대가 노동이민의 확대를 반대한다는 점이었다. 반면, 50대는 찬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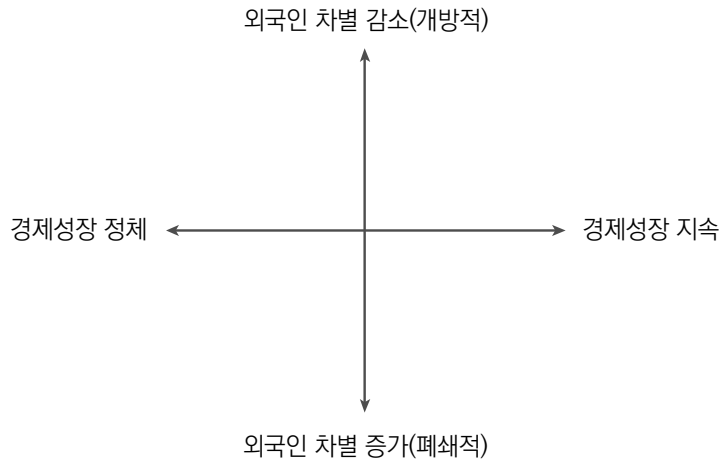
앞 장에서 20대의 반대 의견이 상세히 다뤄졌으나 요약하면, 글로벌 사회에서 외국인은 고급 일자리 부문에서 경쟁 상대여서 지금처럼 청년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유입은 한국인 청년의 처지에서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20대 여성의 의견은 다소 달랐는데, 이들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로 노동이민의 확대를 반대했다. 50대는 찬성이 다수였으나, 반대의 입장에 선 50대는 고숙련 분야에서는 자식 세대의 경쟁력 하락, 그리고 저숙련 분야에서는 본인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서 미래의 상황을 그려보자. 제1절 연구 질문에서 노동이민 관련, “경제성장과 사회개방성에 따라 노동이민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예측해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 시나리오의 4분면을 구성할 두 개의 축은 경제성장의 지속과 정체 여부, 그리고 외국인 차별 감소와 차별 증가 여부로 나눌 수 있다[그림 6-2]. 두 번째 축은 사회적 개방성을 묻는 축이다.

노동이민의 확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로 우려하는 것은 외국인의 증가로 경제적 활동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저숙련과 고숙련 등 두 가지 모두 걱정이 앞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외국인 유입에 따른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 취업의 기회가 많아지면 외국인의 유입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사회가 폐쇄적이면 외국인 노동자의 유

입은 제한될 수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외국인과 나누지 않으려는 태도이기도 하고 경제성장의 기회에 자국민만 참여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2] 노동이민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2개의 축

경제성장이 지체되거나 쇠퇴하면 외국인 유입은 제한될 것이다.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적어져 자국민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때라도 자국민이 꺼려하는 일자리나 외국의 고급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유입을 반길 수 있다.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차별이 감소하는 경우는 어떨까. 경제성장의 지체 현상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외국기업과의 활발한 협업으로 혁신을 일궈내고 이를 통해 지체된 경제성장을 다시 일으킬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앞으로 각 상황별로 우리 사회가 처할 미래를 예측해보자. 스웨덴은 2008년부터 노동이민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했다. 당시 기업가 연맹이 노동이민의 허용을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이다(손혜경, 2013).¹¹⁾ 당시 스웨덴

11) 손혜경(2013), 「스웨덴의 2008년 노동이민법 개정과 이후 외국이 근로자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9), pp. 52-58.

은 인구의 고령화로 서비스 및 첨단 기술 인력이 부족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높였다. 이때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숙련과 고숙련 등이었다. 컴퓨터 전문가, 간호원 등 기술직뿐 아니라 도살업자, 환경미화원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졌다.

인구가 줄면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이 줄어들면 인력의 부족분을 채울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시 스웨덴은 유럽연합의 활성화 분위기에서 유럽 시민들 간 노동시장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이민국이나 노동환경청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분위기였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노동이민 정책에 중요한 요소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스웨덴처럼 적극적인 이민유치 정책을 추진했다(이삼식, 2011).¹²⁾ 2000년대 유럽연합에 동유럽 8개국이 가입하고 영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자 외국인의 유입은 더욱 급격히 증가했다. 급격한 이민자가 유입되자 “영국 사회는 공공서비스의 과부하, 주택난과 같은 경제적 혼란, 이질적 문화의 유입에서 비롯된 정신적 불안감을 겪었고, 이민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다”(이삼식, 2011:5). 외국인에 대한 자국민의 불만이 커질수록 정치권은 외국인에 대한 보수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조사한 노동이민에 대한 20대와 50대의 반대가 노동이민 정책에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에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를 받을 때 외국인에게 역차별당했다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경제난이 심각해 일자리마저 외국인에게 밀려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회자되면 분노의 화살이 외국인에게 향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해지면 사회는 붕괴(broken society)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영국은 2011년 8월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리버풀 등에서 노동이민자들의 상점 약탈, 방화가 일어났다. 2006명이 체포되었으며 1135명이 기소되었다(이정희, 2011).¹³⁾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국 사회에서 배

12) 이삼식(2011), 「외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10).

13) 이정희(2011), 「영국 노동시장에서 이민 청년들의 현주소」, 국제노동브리프, (9), pp. 86-95.

제되었다는 분노, 그리고 이들끼리 민족 집단을 이뤄 서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가 강화 되면 불만을 갖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대가 쉬워져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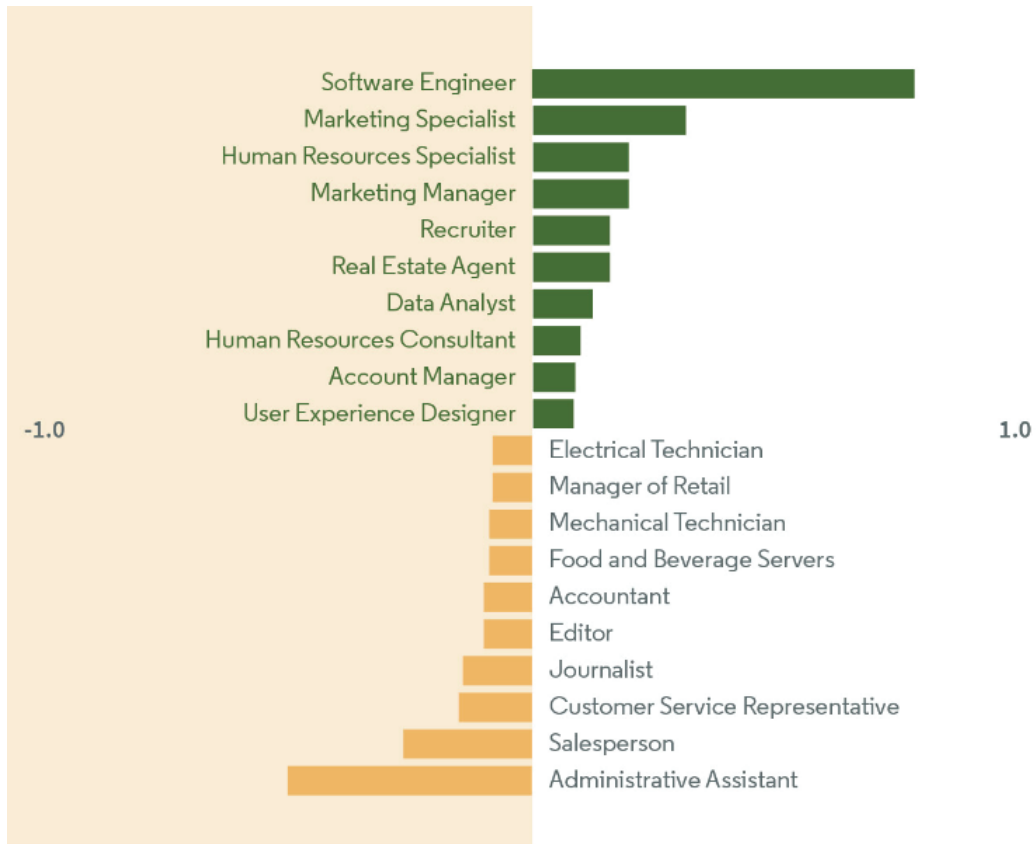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노동이민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한창 논의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면 인간의 일자리는 많은 부분 대체된다. 세계경제포럼(2018)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성장하는 직업군과 쇠퇴하는 직업군을 예측했다.¹⁴⁾ 성장하는 직업군은 인간의 특성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부동산 대리인 등은 인간의 지능, 감성, 소통이 필요한 직업들이다[그림 6-3].

반면, 기계로 자동화할 수 있는 소매 부문 매니저, 회계사, 저널 편집인, 기자 등은 점차 소멸할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세계경제포럼(2018)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 현재 29%에서 2025년에는 50%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한다.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할 때, 노동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유입된 외국인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인간의 업무 대체가 확대되면 청년실업률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청년들은 이 경우 누구를 비난하게 될까. 이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경제적 성장의 기회 박탈, 범죄의 불안 등 노동이민 논란의 핵심은 도시화의 문제와도 닮아있다. 사람이 모일수록 생존이 불안해지고 범죄의 불안이 증가하는 것은 도시화 문제다. 이에 따라 도시의 환경, 주택, 고용, 교육정책의 문제로 확대된다. 따라서 노동 이민 정책은 단일한 정책 분야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복합적 이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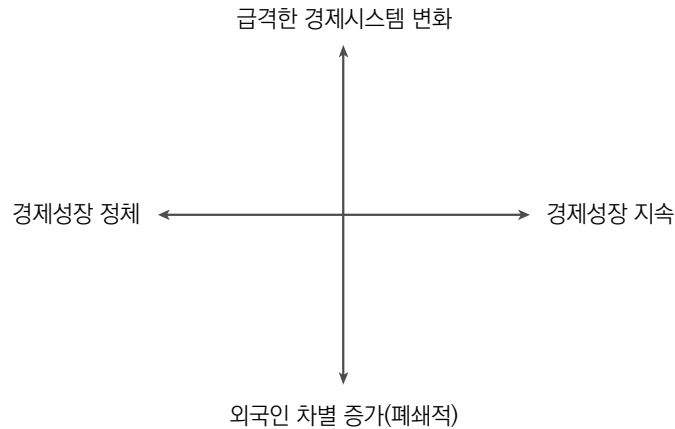
14) World Economic Forum(2018),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shaking up the job market".



[그림 6-3] 성장하는 직업군과 쇠퇴하는 직업군(WEF, 2018)

2 가족의 미래와 정책적 시사점

가족의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 역시 2×2 시나리오 방법론을 활용한다. 앞서 연구 문제에서 밝혔듯 가족의 미래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은 개인의 자유 중시와 공동체 연대의 중시 여부,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와 완만한 변화 여부로 나뉜다[그림 6-4].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로 한정하자. 그래서 질문은 ‘개인의 자유가 더욱 중시될수록 급격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 상황에서 가족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였다.



[그림 6-4] 가족의 미래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할수록 전통적 개념의 가족은 해체될 것이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1인 가족의 확대는 이미 뚜렷한 경향성을 갖고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표 6-1]. 혈연가족의 쇠퇴라고 불러도 과장은 아니다.

[표 6-1] 1인 가구 증가율

(1세대 가구: 부부, 부부+기타친인척, 2세대 가구: 부부+자녀, 3세대 이상 가구: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연도	평균 가구원 수 (명)	세대별 구성 비율(%)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혈연 가구
1990	3.8	9.0	10.7	66.3	12.5	1.5
1995	3.4	12.7	12.7	63.3	10.0	1.4
2000	3.1	15.5	14.2	60.8	8.4	1.1
2005	2.9	20.0	16.2	55.4	7.0	1.4
2010	2.7	23.9	17.5	51.3	6.2	1.2
2015	2.5	27.2	17.4	48.8	5.4	1.1
2017	2.5	28.5	17.9	47.4	5.1	1.2
2025	2.3	31.9	20.2	42.5	4.1	1.3
2035	2.2	34.6	22.6	38.3	3.4	1.2
2045	2.1	36.3	23.1	36.4	2.9	1.3

(출처: 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동향)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면서 급격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경우, 가족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기 때문에 1인 가족이 증가하고, 결혼은 선택의 영역이 되며, 비혼족이 증가하고, 혈연이 아닌 친밀감 등으로 형성되는 유사가족도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급격한 경제 시스템이란 인공지능 로봇 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을 구성하는 전통적인 방법(혈연, 입양 등)이 해체되면서 부모의 일자리까지 불확실하게 될 경우, 가족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함인희(2014)는 경기가 침체되고 고실업 사회가 되면 가족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다.¹⁵⁾ 가족의 양극화는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녀 학대 증가, 아내 구타 등 폭력 범죄 증가, 약물과 알코올 중독 확산, 빈곤의 확대를 경험할 수 있다.

경제적 급변에 따라 근로 형태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를 경험할 때 어떤 가족 정책이 요구될까. 노혜진(2016)은 공보육 서비스, 부모 휴가 급여, 양육 수당 등 대표적 가족 정책이 부모의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근로 형태나 소득에 관계없이 정책의 보편적 적용, 평등한 보장, 이전 소득을 통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저 소득 보장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공동체 연대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서선희(2016)는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사회 발전에 역기능한다고 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여서 굳이 가족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앞서 언급한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던 것이다. 가족에 대한 역기능은 가족 내 차별과 억압을 드러내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은 돌봄과 연계되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부분이다.

서선희(2016)는 출산과 양육을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치유와 필요를 충족시켰다고 주장한다. 가족 관계를 통해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인지하도록 하고, 그 관계에서 옳고 그름과 윤리, 도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공동체의 연대가 중시되면 이처럼 가족의 전통적 기능도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여기에 급진적 경제 시스템의 확산이 겹쳐지면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

15) 함인희(2014), 「가족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1), pp. 87-128.

16) 노혜진(2016), 「한국 가족 정책의 계층화」, 사회복지연구, 47(3), pp. 35-60.

간의 일이 대부분 대체될 경우, 여기에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예를 들어 기본 소득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연대가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동육아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 양육의 부담, 자기 계발의 약화가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었다면 이 상황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미·중에 대한 인식의 미래

미래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선호를 묻는 2019년 조사에서 20대는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응답(54.3%)한 반면, 50대는 한미일 동맹보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5.6%)고 응답했다. 20대는 미국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20대는 중국을 어떤 태도로 바라볼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들의 대중국 인식 흐름을 살펴보면 높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상존했다(차정미, 2017).¹⁷⁾ 수교 초기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나 이런 호감도는 이후 유지되지 못했다. 차정미(2017)는 대중국의 인식은 힘, 이익, 정체성 등 3가지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20대 중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예측하는 작업도 이런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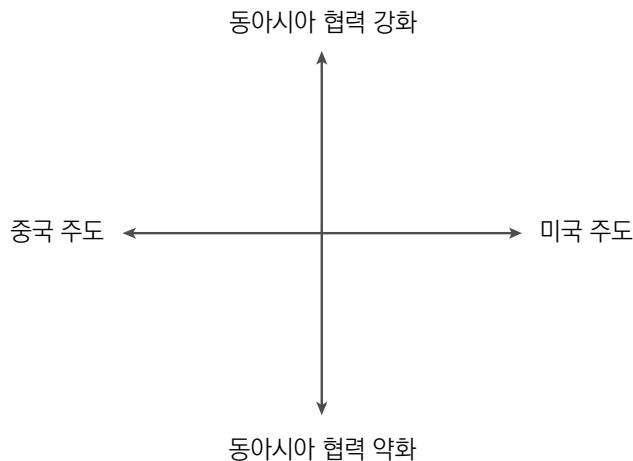
현재의 추세를 미래로도 투사한다면 20대는 앞으로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예상할 것이다. 이들에게 미국은 경제와 군사적 측면에서 초강대국이자 문화적으로도 가장 앞선 나라다. 물론 겉과 속이 다르다거나, 남의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한 태도를 보인다. 시끄럽고 예의가 없다거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보복을 일삼는다거나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한다는 등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세계를 리드할 수 없다는

17) 차정미(2017),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변화와 그 요인」, 아세아연구, 60(2), pp. 10-45.

인식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에서 최종 승리자는 미국으로 인식한다.

20대들의 인식을 고려하면서 이들이 중국과 미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될 것인지 미래 시나리오로 예측해보자[그림 6-5]. 우선, 20대는 힘의 우위에 따라 강대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 만약 중국이 세계를 이끌 정도로 파워가 있다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질 것이다. 사실, 조선 시대 중국은 황제의 나라였고, 조선인들은 작은 중국이라는 뜻의 소중화(小中華)라는 말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 당시 중국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 강대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이다. 이런 태도로 중국을 인식한다면 중국의 모든 것이 경외의 대상이 된다.



[그림 6-5] 20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의 미래

또 다른 축은 동아시아의 협력 여부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주요 3국이 여러 면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라면 20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 협력의 동반자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라면 적대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세계를 주도할 정도로 부강하고 기술적으로 앞서나간다면 20대는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과연 세상은 이렇게 전개될까. 중국이 강대국임을 천명하고 우주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 에너지, 군사력 등에서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당분간 중국이 미국을 앞서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편이 일반적이다. 이희옥(2017)은 중국이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능력과 의도가 없으며 글로벌 수준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통치할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¹⁸⁾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동아시아 협력이 강화되는 미래는 어떨까. 글로벌 수준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나가기 쉽지는 않아도 아시아 지역의 수준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크고, 친중국 성향의 아시아 국가도 적지 않다. 화교들의 세력도 두텁고 넓다.

외교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 통일, 양국의 협력에 기반한 경제성장 등의 과제가 있어 미중 경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져도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정남, 2017).¹⁹⁾ 이런 시각이 팽배해지면 한국내 중국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일 수 있다. 한국의 미래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중국이 협력해준다면 20대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협력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학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협력체의 구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미래도 가능할까.²⁰⁾ 이성우(2011)는 동아시아의 다자협약체 구성은 힘이 아니라 규범과 협력에 의한 평화와 공존이라는 비전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비전을 동아시아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지,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조건은 이 다자협약체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동의하고 협조하느냐, 또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다자협약의 움직임을 얼마나 묵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왜 이런 움직임에 대해 동의하거나 적어도 묵인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어렵다.

18) 이희옥(2017), 「동아시아 판의 변화와 한중 관계의 동태적 전환: 동향과 전망」, (99), pp. 51-82.

19) 이정남(2017),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국 내 중국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0(2), pp. 82-112.

20) 이성우(2011), 「동아시아 다자공동체 구상의 현실적 장애와 대안: 동아시아 다자협력체를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 총서, 23, pp. 13-38.

제3절 시사점 정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노동이민, 가족,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서 미래를 예측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노동이민의 확대와 관련한 미래 예측에서는 단순히 노동이민을 더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 수용도에 따라 변화가 많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이민의 확대나 규제나 하는 문제는 도시화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도시정책에는 환경, 교육, 경제, 교통, 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될 경우, 이들에게 어떤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이들의 자녀에게 어떤 교육의 권리를 제공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노동이민자들의 유입을 규제할 경우에도 도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많은 저숙련 작업이나 자국민이 일하기 꺼리는 작업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양쪽 다 도시를 유지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노동이민의 문제는 사회 통합적 시각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가족 정책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성 역할, 출산율, 육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탈가족화, 소수자 가족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미래의 가족을 예상해보면 이런 변수들 외에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일을 대체할 때, 사회는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고실업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족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이는 가족의 해체로 나아갈 수 있다. 부모의 자녀 학대, 약물 중독, 빈곤과 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

과학기술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가족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축이지만,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느냐, 공동체의 연대를 중시하느냐 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도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서도 공

동체의 연대나 협력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가족은 유지될 수 있으며, 친밀성이나 추억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 가족들도 등장해 사회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20대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강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서 중요한 변수는 힘과 이익 그리고 정체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누가 리드할 것인지는 20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역으로 수준을 내려 동아시아의 협력이 강화될 것인지 약화될 것인지 여부도 20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20대의 대중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질서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되면 이런 부정적 인식은 변화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는 20대의 대중국, 대미국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20대의 시각이 변화한다면 그 조건은 무엇일지를 예측하면서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 협력의 변화에 대해 예상해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협력의 가능성, 미국이 묵인하는 동아시아 다자협력 체제의 가능성 등은 우리 사회가 많이 거론하지 않은 미래의 모습들이다.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미래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제7장

결론

국회미래연구원이 2019년도에 실시한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나타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20대의 선호 형성의 근거와 과정을 밝히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미래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 및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이민 정책에 관해서 보면 20대와 50대 모두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강력 범죄자 및 일자리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 정도 일치하고 있지만, 선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이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서 20대는 타자화를, 50대는 자기 성찰의 전략을 취했다는 점이다. 한국 청년들은 다문화에 수용적일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르게 선진국 문화에 선호가 편향되어 있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나 이주민의 출신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진희, 2019)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20대는 이주노동자들과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문화적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성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제도, 법을 존중하느냐 하는 정신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에 참여한 20대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동화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수용을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동화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동화주의적 태도가 노동이민자를 타자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50대는 노동이민자들에 대한 반감과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거를 반추하여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이주노동자 수용 확대를 선호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50대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서구권에 대한 문화 사대주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어찌면 50대들은 자신들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생했던 자신 또는 동년배들과 이주노동자를 동일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민 정책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20대와 50대의 차이의 원인은 외교안보정책에서도 발견된다. 즉, 미국 문화와 중국 문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선호의 차이이다. 20대와 50대 모두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이고 외교안보정책은 실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호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1차적으로 20대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20대는 미국인 대다수는 포용적이라거나, 문화적으로 미국이 제일 앞선 나라라거나 하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반면, 중국은 패권적인 데다가 아직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문화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전근대적인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과 미국은 동질적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이질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중국은 한국에 도움이 안 될 국가이고 미국은 한국에 도움이 될 국가라고 의미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특히 이러한 인식의 형성에는 미디어나 지식 체계의 영향력이 숨은 맥락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50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대와 정도의 차이일 뿐 중국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지식 체계의 영향력은 50대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20대와 50대의 선호 차이의 이유를 검토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인과적 조건뿐만 아니라 맥락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시각, 즉 미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중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곧바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정책 선호도로 일대일 대응하지는 않는다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미국에 대해 긍정적, 중국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일 동맹 강화보다는 균형자/중재자론에 더 선호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중국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일 동맹 강화에 더 찬성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는 두 가지 종류의 중재적 조건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미국, 중국과는 별도로 북한,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에 대해서 또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책 미래 선호도가 조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결합하여 다시 한번 세대적인 문제가 개입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예컨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50대의 경우,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60대나 20대가 생각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조금 더 강하게 반감을 표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대로 20대 집단에서는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정책을 자신들 세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윗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틀지어 이해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인식과 현 정부가 외교정책을 잘 펴고 있다는 인식은 50대에서만 도출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 정책에 관하여 20대가 ‘생활공동체 중심의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결혼과 출산을 통한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의감의 이유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이는데, 20대 남성은 경제적 부담과 가족 부양자로서의 책임이 큰 이유인 반면, 20대 여성은 출산과 양육 부담, 성차별 사회문화, 경력 단절 등의 이유가 크다. 50대도 전통적인 가족 구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50대 응답자의 56%도 역시 ‘생활공동체 중심의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50대는 자녀가 느끼는 개인적 부담감(경제 부담, 육아 등)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여건 변화와 전세계적인 사회적 흐름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결혼과 출산에 있어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20대와 50대는 가족 정책의 방향에서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20대는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통한 가족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더는 불가능하며 기존 가족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정부가 펴는 것보다는 1인 가족, 동거 가족 등을 기존 가족제도로 편입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50대는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가족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50대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50대의 대부분은 가족은 혈연과 혼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를 기본으로 구성되며, 재생산뿐 아니라 경제(생산공동체), 사회(효, 부양)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의 기본단위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볼 때 때 향후 각 분야의 미래 전망 하에서 가장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 분야는 노동이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이민자에 대한 20대의 타자화 전략은 이들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기반하고 있어서 쉽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문화적 갈등 및 범죄의 우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갈등 정도도 20대를 중심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 및 이주노동자 정책은 20대를 중심으로 향후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한 양적·질적 조절정책과 함께 내국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인권적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국인을 상대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한 문화적 거부감은 중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적 포용성의 제고는 중국인과 중국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외교안보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취하여야 할 전략적 입장을 선택할 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더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더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외교적 전략의 선택 폭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지만, 중국이 당분간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거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전망하에서 20대가 지금과 같이 중국인과 중국 문화를 극단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정책은 위의 두 정책 분야보다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 분야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50대는 자신들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는 별도로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지만, 어떠한 시나리오로 이행되는지에 관계없이 가족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형태의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가족관과 새로운 가족관은 혼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혼재의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은 가족 형태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차별 없이 가족 형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두 가지 언급한다. 첫째로는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50대 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참여시키고자 정책 선호와 정치이념 성향, 가구 소득과 연령 등의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발하였으나 물리적 거리의 한계상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서울 및 경기권에 국한되었으며 학력의 경우도 대부분이 대학 재학 이상

으로, 각 연령대 내 지방 거주자 및 고졸 이하의 대상자들의 인식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거주 지역과 교육 수준을 고려한 세 분야의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본 연구는 기존의 질적 연구들보다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까지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각 주제별 집단면담을 진행하고 나서 연구진이 협의하여 심층 면담법을 실시하여 초점집단면담 결과를 보완하였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의 한계상 심층 면담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참고 문헌

1. 문헌 자료
2. 웹 사이트

참고 문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문헌 자료

- 강경석·서영인·강지희·이철주(2019), 「새로운 작가들의 젠더 노동 세대감각」, 『창작과비평』, 47(1), 창비, pp. 264~292.
- 강수향·유계숙(2011), 「이주민 유입의 영향과 이주민 지원 및 사회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분석」, 『가족과 문화』, 23(2), 한국가족학회, pp. 41~73.
- 국회미래연구원(2019), 『국가 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국회미래연구원.
- 국회입법조사처(2010),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의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 권수현·송영훈(2015), 「피를 나누는 형제, 이웃보다 못한 친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과 결정요인」, 『OUGHTOPIA』, 30(2), 인류사회재건연구원, pp. 123~160.
- 권향원(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한국정책과학학회, pp. 181~216.
- 권향원(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한국정책과학학회, pp. 181~216.
- 권현지(2017), 「미래세대의 불안정한 노동」,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 59~74.
- 김금미·안상수(2014),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19(3), 한국심리학회, pp. 315~338.
- 김금미·한덕웅(2001), 「여성의 성별 사회 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pp. 15~38.

- 김명섭(2014), 『인문정책연구총서: 미래사회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고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강정한(2017), 「서울의 미래세대: 과거, 현재, 미래」,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 3~17.
- 김석호·신인철·김병수(2011),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효과 분해: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34(1), 한국인구학회, pp. 129~157.
- 김선기(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한국문화사회학회, pp. 207~248.
- 김선기(2017), 「청년~하기를 이론화하기: 세대 수행성과 세대연구의 재구성」, 『문화와 사회』, 25, 한국문화사회학회, pp. 161~210.
- 김선기(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한국문화사회학회, pp. 207~248.
- 김성한(2010), 「한미동맹의 현황과 미래비전」, 『전략연구』, 17(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pp. 37~65.
- 김숙현·장민지·오지영(2013), 「응답하라 1997에 나타난 정서의 구조와 집합 기억」, 『미디어, 젠더 & 문화』, 26,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pp. 5~40.
- 김순양(2013),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집문당.
- 김영천(2013), 『질적연구 방법론 II』, 아카데미프레스.
- 김유빈 외(2019),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국회미래연구원.
- 김이선·황정미·이진영(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규·신동준(2011), 「이민사회와 범죄: 쟁점과 전망」, 『사회이론』, (39), 한국사회이론학회, pp. 113~162.
- 김진희(2019),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비판과 이주민에 대한 편향적 태도 분석」, 『평생학습사회』, 15(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격교육연구소, pp. 127~153.
- 김태완(2018), 『미래 교육의 비전과 전략』, 학지사.

- 김태일(2015), 「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예산정책연구』, 4(2), 국회예산정책처, pp. 33~35.
- 맹진학(2009), 「한국인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pp. 323~348.
- 박길성(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한국사회』, 12(1), 한국사회연구소, pp. 3~25.
- 박상수·왕서혜(2018), 「중국기업 내 세대차이에 따른 세대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 차이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41(4), 아태지역연구센터.
- 박성원 외(2018), 『국민선호미래 연구사업』, 국회미래연구원.
- 박세경(2006), 「미래전략 연구와 적극적 사회정책」,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0~58.
-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한국인구학회, pp. 47~78.
- 박재홍(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한국사회학회, pp. 1~23.
- 박재홍(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한국인구학』, 33(3), 한국인구학회, pp. 75~99.
- 박지순(2017),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요약」, 『노동 4.0과 노동법의 미래. 선진화 정책시리즈』, 한반도선진화재단, pp. 252~263.
- 박효민·김석호·이상림(2016),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5(2), 한국정당학회, pp. 105~138.
- 배영(2017), 「빅데이터로 본 서울 미래세대의 행복과 불안」,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 45~55.
- 법무부(2019), 「국민 일자리 잠식에 영향이 없는 분야에 외국 우수인재 문호와 숙련 기능인력 쿼터 확대」, 법무부, 보도자료.
- 변미리·박민진·김진아(2017), 『서울 미래세대 리포트 - 꿈과 현실, 그리고 정치의식』, 서울연구원, pp. 1~126.

- 서용석(2012), 「미래세대위원회 설치」, 『FUTURE HORIZON』, (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12.
- 서용석(201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세대기본법’ 구상」, 『FUTURE HORIZON』, (22), pp. 19~21.
- 서용석(2016), 『미래연구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KIPA.
- 서용석(2017),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언」, 『FUTURE HORIZON』, (3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8~9.
- 서용석(2018), 「미래연구의 특징과 정책 연계」, 『FUTURE HORIZON』, (3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4~27.
- 송영조·홍영교(2011), 「미래연구 기반의 정책구현을 위한 정보화의 역할」,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1(0), 한국정책학회, 291~313.
- 송영호·양대영(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세계한상문화연구단, pp. 132~149.
- 신경림(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양계민(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한국심리학회, pp. 111~128.
- 오계택 외(2007),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
- 원숙연(2011),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4), 한국정책학회.
- 유근춘(2014),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이슈애포커스』, (2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건수(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 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2), 한국정책과학학회, pp. 163~200.
- 윤민재(2017),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특징: 세대별 통일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5), 아시아문화학술원, pp. 831~850.
- 윤인진(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 10(1), 세계한상문화연구단, pp. 125~154.
- 이규용(2014), 『고용허가제 10주년 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 : 고용허가제 10주년 세미나발표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2017), 「외국인력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월간 복지동향』, (221),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pp. 37~44.
- 이기종 외(2011), 「미래 과학기술의 방향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 발표논문집』, 2011(0), 한국정책학회, pp. 23~39.
- 이기형·이종명(2019), 「문화연구가 추구하는 국면분석의 활용과 재구성 작업의 의의」, 『한국언론정보학보』, 96, 한국언론정보학회, pp. 73~115.
- 이상열·정종은(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상윤(2014),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25(3), 사회과학연구소, pp. 175~204.
- 이세준·이윤준·홍정임(2008), 「통합적 미래연구 방법론의 탐색 및 적용」, 『정책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1~229.
- 이영희 외(2018), 「미래교육 관련 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24(5),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pp. 127~153.
- 이재경·장지연(2015), 「한국의 세대불평등과 세대정치: 일자리영역에서 나타나는 정책주도 불평등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정책연구』, (28), 민주사회정책연구원, pp. 15~44.
- 이정금(2018), 「미래사회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교육문화연구』, 24(1),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pp. 549~567.
- 이철승(2019), 「세대, 계급, 위계」, 『한국사회학』, 53(1), 한국사회학회, pp. 1~48.
- 이화진(2014), 「90년대를 돌아보기」, 『대중서사연구』, 20(3), 대중서사학회, pp. 69~100.
- 임도경·김창숙(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pp. 5~34.

- 임동균(2017), 「미래세대의 감정과 마음: 분노와 혐오」,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 95~110.
- 임동진(2015),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 연구~정책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3), 한국거버넌스학회, pp. 329~355.
- 임양준(2012),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연구」, 『언론과 학연구』, 12(4), 한국지역언론학회, pp. 419~456.
- 장승진(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한국정치학회보, pp. 97~119.
- 장임숙(2010), 「다문화적 인식이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1호), 한국정부학회, pp. 247~271.
- 장혜경(201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 정책전망(I~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상진(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 세대 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25(2), 한국인구학회, pp. 193~230.
- 전상진(2017),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 전상진(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한국사회학회, pp. 31~52.
- 정병은(2017), 「새로운 친밀성: 미래세대의 가족 관계」,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 75~93.
- 정재도·엄광용·이재묵(2019),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결정요인 : 사회적 가치관과 현실갈등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5(1), 사회과학연구원, pp. 177~208.
- 조경훈·유민이(2017),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2), 한국정책과학학회, pp. 1~28.
- 조정인(2011), 「누가 왜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유입 증가를 반대하는가: 문화적 위협 변인과 경제적 위협 변인의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한국정치학회, pp. 281~305.

- 최경수 외(2016), 『이민 현황 및 장기적 영향평가를 통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 최무현(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한국행정학회, pp. 51~77.
- 최지영(2012), 「근거이론의 개념과 연구 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18.
- 최효진·유계숙(2009), 「이민자와 이민자지원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한국가족관계학회, pp. 1~27.
- 하상응(2017), 「서울 미래세대의 정치이념」,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 111~123.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스마트 시대의 미래 변화 전망과 IT 대응 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림연구보고서(2011),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미래 비전과 발전 로드맵 (1단계): 비전 설정』,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허석재(2014), 「정치적 세대와 집합 기억」, 『정신문화연구』, 37(1), 한국학중앙연구원, p. 257~290.
-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아세아연구』, 아세아문제연구소, 142, pp. 152~184.
- 황정미 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arro, R. J. and Sala-i-Martin, X.(1992), “Converg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 pp. 223-251.
- Berg, J. A.(2009), “Core networks and whites’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y”, *Public opinion quarterly*, 73(1), pp. 7-31.
- Berman, S.(1997), “Civil Society and the Collapse of the Weimar Republic”, *World Politics*, 49(3), pp. 401-429.

doi:10.1353/wp.1997.0008

Bobo, L. and Hutchings, V.(1996), "Perceptions of racial group competition: Extending Blumer's theory of group position to a multiracial social context", pp. 951-972.

Boezeman, E. J. and N. Ellemers(2007), "Volunteering for charity: Pride, respect, and the commitment of volunte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 pp. 771-785.

Bourhis, R. Y. et al.(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32(6), pp. 369-386.

doi:10.1080/002075997400629

Breugelmans, S. M., and Van de Vijver, F. J.(2004), "Antecedents and components of majority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in the Netherlands", *저널명*, 53(3), pp. 400-422.

Bryman, A.(2008), *Social research method*, Oxford University Press.

Castells, M.(1975),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ggles in advanced capitalism: The Western European experience", *Politics and Society*, 5(1), pp. 33-66.

Charmaz, Kathy(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London ;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Citrin, J., et al.(1997),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reform", *The role of economic motivations*, 59(3):, pp. 858-881.

Coenders, M. and P. J. P. p. Scheepers(2003), "The effect of education on nationalism and ethnic exclusionism: An international comparison", *저널명*, 24(2), pp. 313-343.

Cohen, Deborah J., and Benjamin F. Crabtree(2008), "Evaluative Criteria for Qualitative Research in Health Care: Controversies and Recommendations", *The Annals of Family Medicine*, 6(4), pp. 331-339.

Daniels, J. P. and M. Von Der Ruhr.(2003), "The Determinants of

- Immigration-Policy. Preferences in Advanced Economies: A Cross-Country Study”, *Athlantic Economics Journal*, 31(2), Hainmueller and Hiscox, pp. 146-158.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pp. 56-121.
- Espenshade, T. J., and Hempstead, K.(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2), pp. 535-570.
- Facchini, G. and A. M. J. E. P. Mayda(2008), “From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migrants to migration policy outcomes”, *Theory and evidence*, 23(56), pp. 652-713
- Ford, R.(2012), *Europe’s young cosmopolitans: Explaining generational differences in immigration attitudes*, In: University of Manchester, Institute of Social Change working paper.
- Foster, K.(2013), “Generation and discourse in working life stori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4(2), pp. 195-215.
- Glaser, B., and Strauss, A.(1967), “Grounded theory: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ociology the journal of the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12(1), pp. 27-49.
- Hainmueller, J., and Hiscox, M. J.(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2), pp. 399-442.
- Hanson, G., K. Scheve, and M. Slaughter(2007), “Public finance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globalization strategies.”, 19(1), pp. 1-33.
- _____(2008), “Individual Preferences over High-Skilled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Jagdish Bhagwati and Gordon Hanson. eds., *In Skilled Migration Today: Prospects, Problems, and Policie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pp. 24-44.

- Hirschi, T.(1969), "A contro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theory: Selected classic readings*, pp. 289-305.
- Hood III, M., and Morris, I. L.(2000), "Brother, can you spare a dime? Racial/ethnic context and the Anglo vote on Proposition 187", *Social Science Quarterly*, 81(1), pp. 194-207.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ssler, A. (2001), "Immigration, economic insecurity, and the ambivalent American public".
- Kessler, A. E., and Freeman, G. P.(2005), "Public Opinion in the EU on Immigration from Outside the Community",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3(4), pp. 825-850.
- Kohli, M.(1996), *The Problems of Generations: Family, Economy, Politics*, Collegium Budapest: Public Lecture Series No. 14. Budapest.
- Krefting, L.(1991),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The assessment of trustworthines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3), pp. 214-222.
- Lee, Y.-T., and Ottati, V.(2002),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licy: The roles of in-group-out-group bias, economic concern, and obedience to law",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5), pp. 617-634.
- Lincoln, Y. S., and Guba, E. G.(1990), "Judging the quality of case study reports", *Internation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3(1), pp. 53-59.
- Lüscher, K.(2005),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 박희경 외 역(2014), 한울, pp. 78-109.
- Malchow-Møller, N.(2008),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Perceived consequences and economic self-interest", *Economics Letters*, 100(2),

- 발행처, pp. 254-257.
- Mannheim, K(1955),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76-322.
- _____(1929), 『세대 문제』, 이남석 역(2013), 서울: 책세상.
- McLaren, and M, L. (2003). “Anti-immigrant prejudice in Europe: Contact, threat perception, and preferences for the exclusion of migrants”, *Social forces*, 81(3), pp. 909-936.
- Morgan, David L.(1996), “Focus Grou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발행처, pp. 129-152.
- Morse, J. M.(2015), “Critical analysis of strategies for determining rigor in qualitative inquir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5(9), pp. 1212-1222.
- O’Rourke, Kevin. and Sinnott, R.(2006), “The Determinants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 4, pp. 838-861.
- OECD.(2010),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 SOPEMI 2010*.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 Purhonen, S. (2016). Generations on paper: Bourdieu and the critique of 'generationalism'. *Social Science Information*, 55(1), 94-114.
- Quillian, Lincoln. 1995.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No.4, 586-611
- Rabiee, F. (2004). Develop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kills: analysing and applying your result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63(4), 655-660.
- Rauvola, R. S., Rudolph, C. W., and H. Zacher (2018, in press) Generationalism:

- Problems and implications. *Organizational Dynamics*. URL: <https://doi.org/10.1016/j.orgdyn.2018.05.006>
- Richey, S. (2010). The Impact of Anti-Assimilationist Beliefs on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1), 197-212. doi:10.1111/j.1468-2478.2009.00583.x %J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 Stephan, W. G., Boniecki, K. A., Ybarra, O., Bettencourt, A., Ervin, K. S., Jackson, L. A. and Renfro, C. L. (2002). The role of threats in the racial attitudes of Blacks and Wh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9), 1242-1254.
-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CA.
-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s and techniqu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 Strauss, Anselm L., and Juliet M.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Tajfel, H., and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and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behavior* (2nd ed.) (pp. 7-24). Chicago, IL: Nelson-Hall.
- Tyler, T. R.(1999), Why people cooperate with organizations: An identity based perspective. In R. I. Sutton and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An Annual Series of Analytical Essays and Critical Reviews*, 210-246, Stamford, CT: JAI Press.
- United Nations (199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MW.aspx>
- White, J. (2013). Thinking Gener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4(2), 216-247.

2 웹사이트

법무부 (2018). 출입국통계, <http://www.moj.go.kr/moj/2412/subview.do>

20대의 정책미래선행호에 관한 질적 연구

- 노동이민정책·가족정책·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

인 쇄 2019년 12월 27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 행 인 박 진 (朴 進)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유월애 (02-859-2278)

©2019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70575-8-8 93300

20대의 정책미래선호에 관한 질적 연구

노동이민정책·가족정책·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정영훈, 박성원, 민보경, 허종호 저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www.nafi.re.kr



9 791197 057588

ISBN 979-11-970575-8-8 93300

비매품/무료